

2021

정책연구 2020-11

# 지역사회 먹거리 돌봄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진 전희진 · 황영모 · 최지훈

Jeonbuk Institute





정책연구 2021-11

# 지역사회 먹거리 돌봄 지원체계 구축방안







## 연구진 및 연구 세부 분담

---

연구책임 전희진 | 부연구위원 | 연구총괄, 제1장, 2장, 3장, 4장

공동연구 황영모 | 연구위원 | 제2장 1절, 4장 1절, 2절 일부

최지훈 | 전문연구원 | 제2장 1절, 3장 1절, 2절, 3절 일부

---

자문위원 김홍주 | 원광대학교 교수

이인우 | 사회적경제지역화연구소 대표

문지영 | 한살림연합

---

연구관리 코드 : 21JU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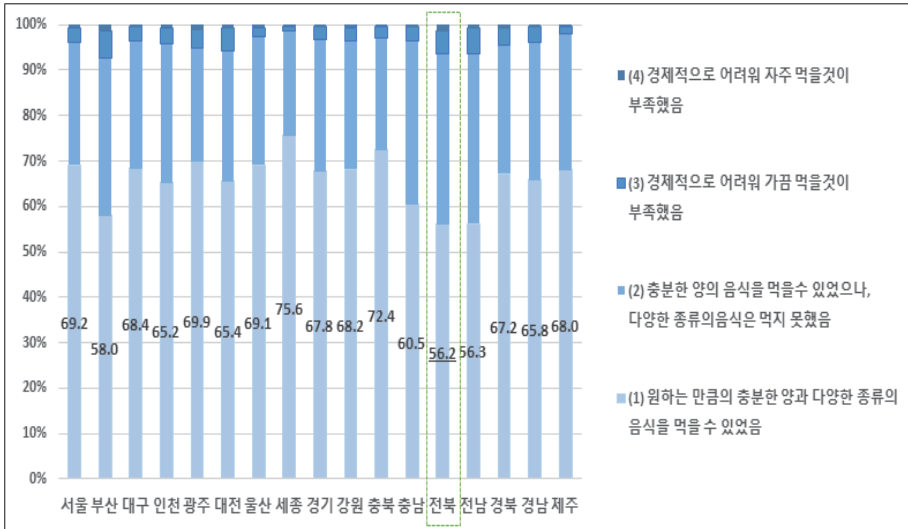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으로서  
전북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 연구요약

- “먹거리 정의”는 소외된 집단의 건강한 식품에 대한 접근을 요구하는 사회정의 운동과 연계되고,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존재하고 이러한 권리에는 먹거리가 필수적으로 포함
- 먹거리 돌봄은 코로나19 이후 기본적인 먹거리가 보장되지 않는 먹거리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먹거리 불안전성 심화되면서 더욱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되었고, 취약계층의 먹거리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에 기반한 먹거리 돌봄 체계 마련이 요청
- 현재의 먹거리 상황은 신자유주의지배 속 먹거리 빈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특히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 실직과 해고의 일상화, 차별이데올로기의 확대, 시민 정치역량축소, 기후위기심화 등은 먹거리 불안의 확대 원인으로 작동
- 코로나19 이후 먹거리 빈곤계층 확대는 사회복지 대상을 넘어 사각지대 문제의 심화와 연계
- 이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서 먹거리 돌봄을 매개로 하는 통합돌봄의 확대 요청되며, 먹거리 돌봄은 다른 복지서비스와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먹거리 돌봄 지원체계 마련 연구가 필요
- 전국 시도별 식생활 형편을 살펴보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먹거리의 절대적인 양 부족으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있는 인구 비중은 전국 4.1%였으며, 전북은 6.4%로, 전국보다 높은 수준임
  - 또한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양과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응답 비율은 전라북도가 56.2%로 가장 낮게 응답해, 전북의 식생활 문제의 심각함을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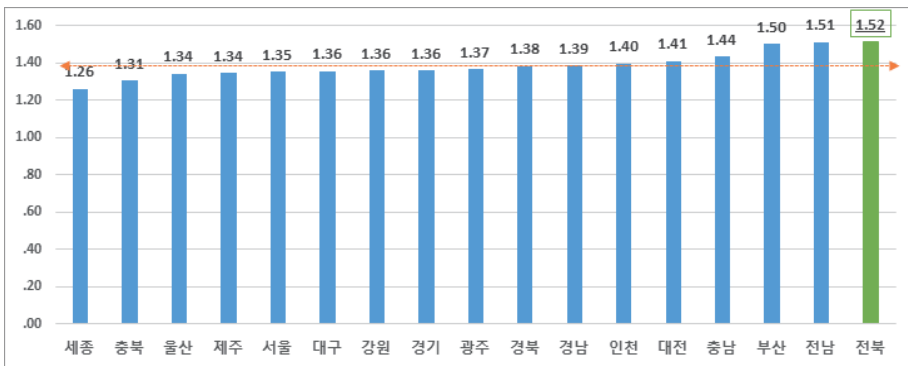
〈그림 1〉 전국 시도별 식생활 형편(2019)



자료: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2019).

- 시도별 식생활 형편을 보기 위해 문항을 4점의 등간격[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양과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을 수 있음(1점) ~ 경제적으로 어려워 자주 먹을 것이 부족함(4점)]으로 검토하면, 전국 평균은 1.39점인데 반해, 시도별로는 전북이 1.52점으로 어려움 정도가 가장 높음을 알 수 있음

〈그림 2〉 전국 시도별 식생활 형편 어려움 정도(2019)



주) 점수가 높을수록 어려움을 겪는 정도가 높음 (4점기준)

자료: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2019).

- 이러한 먹거리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으로는 1) 결식아동지원프로그램, 2) 결식우려노인 급식프로그램, 3) 영양플러스사업, 4) 저소득층지원프로그램(푸드뱅크, 푸드마켓), 5) 농식품바우처지원(시범)사업, 6) 지자체 시책사업 및 지역특화사업(민, 관 협력) 사례를 시행 중에 있음

〈표 1〉 생애주기별 먹거리 돌봄 지원 사업

|         | 임산부                                                                                                            | 영아                                               | 어린이집, 유치원           | 초, 중, 고등학교                                               | 청년                                                       | 중장년              | 노년                        | 다문화가족 |
|---------|----------------------------------------------------------------------------------------------------------------|--------------------------------------------------|---------------------|----------------------------------------------------------|----------------------------------------------------------|------------------|---------------------------|-------|
| 도시락/급식  |                                                                                                                |                                                  | 어린이집 급식             | 급식 및 간식지원 학교급식                                           |                                                          |                  | 노인대상 공공급식                 |       |
| 식재료와 과일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                                                  |                     | 건강과일 바구니시범사업                                             |                                                          |                  | 실버건강 식생활사업 (과일· 우유 간식도시락) |       |
|         | 영양플러스 사업 (보충식품패키지 제공)                                                                                          |                                                  |                     |                                                          |                                                          |                  |                           |       |
| 보충제 제공  | 임산부 철분제·엽산제 지원사업                                                                                               | 건강식생활 실천 국민익식제고 (지역사회 전체 및 생활터별 주민을 대상으로 추진)     |                     |                                                          |                                                          |                  |                           |       |
|         | 맞춤형 영양관리서비스 (생애주기별 맞춤 영양교육·상담, 영양관리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개인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고, 정기적으로는 스스로 올바른게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건강증진 도모) |                                                  |                     |                                                          |                                                          |                  |                           |       |
| 교육프로그램  | 영양플러스사업(교육제공)                                                                                                  |                                                  |                     |                                                          |                                                          |                  |                           |       |
|         | 임산부·영유아 영양관리사업                                                                                                 | 어린이집·유치원 영양관리사업(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한 사업수행) | 저소득층 어린이·청소년 영양관리사업 | 건강위험개선을 위한 맞춤형 영양관리사업 (성인특성별, 성별, 생활터별, 맞춤형 영양관리프로그램 제공) | 건강위험개선을 위한 맞춤형 영양관리사업 (성인특성별, 성별, 생활터별, 맞춤형 영양관리프로그램 제공) | 어르신을 위한 영양교육프로그램 | 다문화가족 영양관리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모유수유교실  | 학교기반 영양관리사업                                                                                                    |                                                  |                     |                                                          |                                                          | 실버 건강 식생활사업      |                           |       |

- 전라북도 먹거리 돌봄 관련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라북도 6개 시군구의 취약계층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
- 심층면접 질문은 취약계층 식생활 평가, 평가 원인, 취약계층 상태 진단, 선호 서비스와 지원형태, 선호 식생활 정책, 지원 필요 대상, 서비스 만족도, 지역 내 지원단체의 존재와 역량, 식재료 구매장소, 지역적 특성과 돌봄 정책 성격 등을 문의
- 취약계층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에서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분야는 물론, 기존의 다른 사업의 경험을 토대로 전북지역 먹거리 현황에 대한 통찰력 있는 분석을 제공
- 취약계층의 전반적 식생활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결식 상황의 문제는 많이 해소, 그러나 결식의 해소가 균형 잡힌 식생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지적
- 건강한 식생활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원인으로는 가정 내 형편에 따라 음식을 준비할 사람이 없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낮시간에 보호자가 없는 아동의 경우나,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이나 독거장년층의 경우에서 볼 수 있음
- 취약계층이 선호하는 식생활 서비스는 도시, 도농복합, 농촌 등의 거주지역과 상점이나 식당과의 접근성, 세대 등에 따라서 다양한 요구를 확인할 수 있음
- 가장 취약한 식생활 지원대상은 돌봄 제도의 사각지대에 위치하여,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와 연로하거나 장애 등의 이유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경우를 많이 언급
- 특히, 기성세대에서는 성별에 따른 먹거리에 대한 태도의 차이로 인해 남성들이 건강한 먹거리 접근성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급식서비스는 저렴한 비용으로 식사를 제공하여, 장애인들이나 어르신들에게 호응이 높으며, 부식배달서비스는 호응도는 좋으나, 배송의 어려움으로 인해 한달에 한번 배송하거나, 관리의 문제로 가공식품 위주로 진행되는 상황임

- 어르신들의 경우는 아동에 비해 지원금액이 낮아서, 영양가 있는 식품 제공에 어려움이 존재
- 지역 먹거리 지원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1) 지역과 계층간의 먹거리 불평등을 해소, 2) 도시와 농촌의 선순환 체계를 통한 먹거리 공공성 강화, 3) 취약계층 영양 불균형과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하고 회복력을 지닌 먹거리 보장 제도의 요청, 4) 먹거리 관련 지원 사업들에 대한 효과와 한계에 대한 점검을 통해 사업 보안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과 검토의 필요
- 현재의 먹거리 돌봄 지원사업과 현황에 대한 검토를 통해 먹거리 돌봄 체계의 문제를 1) 먹거리 돌봄사업 운영 주체의 분절화, 2) 먹거리 취약계층 선발의 자율성 부재, 3) 지역공동체 중심의 통합돌봄 역량 강화, 4)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자원 부족, 5) 먹거리 돌봄 사각계층 존재로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과 추진 사업을 제언함



〈표 2〉 먹거리 돌봄 사업에 대한 문제의식, 대응방향, 그에 따른 사업 추진 방향

| 문제의식                    | 대응방향                      | 추진사업                                 |
|-------------------------|---------------------------|--------------------------------------|
| 먹거리 돌봄사업<br>운영 주체의 분절화  | 먹거리 돌봄사업<br>주체의 일원화       | 각 부처간 협력을 조율할 수<br>있는 일원화된 관리 주체     |
| 먹거리 취약계층<br>선발의 자율성 부재  | 취약계층 선정·지원<br>자율성 확대      | 지역 내 먹거리 취약층 선발<br>자율성 보장            |
|                         |                           | 긴급지원 시스템 마련                          |
| 지역공동체 중심의<br>통합돌봄 역량 강화 | 자율적 돌봄 참여주체<br>지원 강화      | 커뮤니티 돌봄 역량 강화 사업                     |
|                         |                           | 음식 나눔문화 확산<br>지역 돌봄 공동체 구축           |
|                         | 통합 돌봄 서비스                 | 민·관·산·학 연계 통합돌봄 및<br>맞춤형 식사와 영양관리 제공 |
|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br>재원 부족    | 취약계층<br>지원 재원 확대          | 아동 지원 금액 수준으로<br>취약계층 지원 상향          |
|                         |                           | 재원확대를 통한 부식 배달<br>서비스 등의 간격 단축       |
| 먹거리 돌봄 사각계층 존재          | 먹거리 취약계층<br>사각지대 해소 방안 도입 | 청년 빈곤 극복을 위한<br>로컬푸드와 함께하는 공유부엌      |
|                         |                           | 중장년 1인가구 대상 건강한<br>식생활 교육 및 요리교실     |

○ 이러한 대응방안을 중앙정부 차원과 전북지역에 진행될 수 있는 사업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먹거리 돌봄 추진방향과 세부 사업을 제안함

〈표 3〉 중앙정부 차원의 먹거리 돌봄 추진방향

| 중앙정부 차원의 먹거리 돌봄 추진방향                                                                 |                                                                    |                                                                            |                                                                                 |
|--------------------------------------------------------------------------------------|--------------------------------------------------------------------|----------------------------------------------------------------------------|---------------------------------------------------------------------------------|
| 취약계층<br>선정·지원<br>자율성 확대                                                              | 자율적 돌봄<br>참여주체<br>지원 강화                                            | 취약계층<br>지원 재원 확대                                                           | 먹거리 돌봄사업<br>주체의 일원화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내 먹거리 취약층 선발 자율성 보장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커뮤니티 돌봄 역량 강화 사업</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 지원 금액 수준으로 취약계층 지원 상향</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 부처간 협력을 조율할 수 있는 일원화된 관리 주체</li> </ul> |

〈표 4〉 전라북도 차원의 먹거리 돌봄 추진방향

| 전라북도 차원의 먹거리 돌봄 추진방향                                                                      |                                                                                            |                                                                                                   |
|-------------------------------------------------------------------------------------------|--------------------------------------------------------------------------------------------|---------------------------------------------------------------------------------------------------|
| 공유 냉장고 사업 확대                                                                              | 통합 돌봄 서비스                                                                                  | 로컬푸드와 함께하는 공유부엌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음식 나눔문화 확산</li> <li>지역 돌봄 공동체 구축</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관·산·학 연계 통합돌봄</li> <li>맞춤형 식사와 영양관리 제공</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년 빈곤·결식 청년 문제 해결</li> <li>청년 대상 로컬푸드 연계 소셜 다이닝</li> </ul> |
| 건강한 식생활 교육 및 요리교실                                                                         | 명절과 생일 꾸러미                                                                                 | 로컬푸드 인식개선 사업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장년 남성 1인가구 대상</li> <li>사회적 단절 극복과 영양관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따뜻한 명절과 생일 기념</li> <li>로컬푸드로 꾸러미 구성 가능</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로컬푸드 홍보</li> <li>지역 공동체 구성의 연결물로의 로컬푸드</li> </ul>          |

## ■ 목 차 | Contents

|                                         |    |
|-----------------------------------------|----|
| 제1장 서 론 .....                           | 1  |
| 제1절 연구목적 및 내용 .....                     | 3  |
| 가.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 3  |
| 나. 연구내용 .....                           | 6  |
| 제2절 연구 방법 .....                         | 8  |
| 가. 정보조사 및 분석방법 .....                    | 8  |
| 나. 조사계획 .....                           | 8  |
| 다. 전문가 자문 .....                         | 8  |
| 라. 기대효과 .....                           | 9  |
| 마. 연구추진체계 .....                         | 9  |
| <br>제2장 먹거리 정의와 돌봄의 의미와 차원 .....        | 11 |
| 제1절 먹거리 정의와 돌봄의 의미 .....                | 13 |
| 가. 먹거리 정의 .....                         | 13 |
| 나. 먹거리 돌봄 .....                         | 14 |
| 제2절 먹거리 정의와 돌봄의 실천 .....                | 19 |
| 가. 한국의 먹거리 상황: 신자유주의적 지배 속 먹거리 빈곤 ..... | 19 |
| 나. 코로나19 이후, 먹거리 빈곤 계층의 확대 .....        | 19 |
| 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내 먹거리 돌봄 .....             | 20 |
| 제3절 먹거리 돌봄 관련 선행연구 .....                | 23 |
| 가. 취약계층과 농업연계 방안 관련 연구 .....            | 23 |
| 나. 영양플러스 사업 및 급식 관련 연구 .....            | 24 |
| 다. 푸드플랜의 통합적 관점에 따른 먹거리 돌봄 연구 .....     | 27 |

|                                        |            |
|----------------------------------------|------------|
| 제4절 해외의 먹거리 보장 프로그램 .....              | 30         |
| 가. 미국의 음식 지원제도 .....                   | 30         |
| 나. 일본의 영양 및 식품 지원제도 .....              | 32         |
| 다. EU의 극빈층 지원제도 .....                  | 34         |
| <b>제3장 먹거리 돌봄의 실태 .....</b>            | <b>37</b>  |
| 제1절 먹거리 취약계층 실태 .....                  | 39         |
| 제2절 먹거리 보장 프로그램 .....                  | 51         |
| 가. 결식아동지원프로그램 .....                    | 52         |
| 나. 결식우려 노인 급식프로그램 .....                | 56         |
| 다. 영양플러스사업 .....                       | 59         |
| 라. 저소득층지원프로그램(푸드뱅크, 푸드마켓) .....        | 62         |
| 마. 농식품바우처지원(시범)사업 .....                | 66         |
| 바. 지자체 시책사업 및 지역특화사업(민·관협력) 사례 .....   | 67         |
| 제3절 전라북도 먹거리 돌봄 관련 공무원 실태조사 .....      | 71         |
| 가. 심층면접조사 개요 .....                     | 71         |
| 나. 심층면접을 통한 전북지역 먹거리 돌봄 실태 분석 .....    | 73         |
| 다. 심층면접 결과 .....                       | 85         |
| <b>제4장 전라북도 먹거리 돌봄 지원체계 구축방안 .....</b> | <b>87</b>  |
| 제1절 먹거리 돌봄체계의 기본방향 .....               | 89         |
| 제2절 먹거리 돌봄 체계 구축 추진전략 및 세부사업 .....     | 95         |
| 가. 중앙정부 차원의 먹거리 돌봄 추진 방향 제언 .....      | 95         |
| 나. 전라북도 차원의 먹거리 돌봄 추진 방향 제언 .....      | 100        |
| <b>참고문헌 .....</b>                      | <b>109</b> |

## 표목차 | Contents

|                                                        |    |
|--------------------------------------------------------|----|
| 〈표 1-1〉 대안 먹거리 운동의 방향 .....                            | 3  |
| 〈표 2-1〉 국민건강증진법 .....                                  | 16 |
| 〈표 2-2〉 국민영양관리법 .....                                  | 17 |
| 〈표 2-3〉 제2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성과지표 .....                      | 18 |
| 〈표 2-4〉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30 영양 분야 성과지표 .....           | 18 |
| 〈표 2-5〉 생애주기 먹거리 보장 강화와 먹거리에 기반한 공동체 활성화 과제 .....      | 29 |
| 〈표 2-6〉 미국의 영양 및 식품지원제도 .....                          | 31 |
| 〈표 2-7〉 일본의 영양 및 식품지원제도 .....                          | 34 |
| 〈표 3-1〉 전라북도 시·군별 기초생활수급자 현황(2019) .....               | 49 |
| 〈표 3-2〉 생애주기별 먹거리 돌봄 관련 정책사업 .....                     | 51 |
| 〈표 3-3〉 취약계층 대상 주요 먹거리 지원제도 예산 비중 .....                | 52 |
| 〈표 3-4〉 연도별 아동급식 지원대상 아동 .....                         | 53 |
| 〈표 3-5〉 학기에 따른 급식제공 주체 .....                           | 53 |
| 〈표 3-6〉 급식제공 유형 .....                                  | 55 |
| 〈표 3-7〉 급식제공 유형에 따른 장단점 .....                          | 55 |
| 〈표 3-8〉 무료경로식당 현황(2020년) .....                         | 57 |
| 〈표 3-9〉 영양플러스 대상자 선정 기준 .....                          | 59 |
| 〈표 3-10〉 영양플러스사업의 주요내용 .....                           | 60 |
| 〈표 3-11〉 영양플러스 사업을 통한 영양개선 결과 .....                    | 60 |
| 〈표 3-12〉 영양플러스 사업 만족도 (2018) .....                     | 60 |
| 〈표 3-13〉 2018 영양플러스사업 온라인 교육과정 개설과목 .....              | 61 |
| 〈표 3-14〉 국내 푸드뱅크(기부식품제공사업)의 발전 흐름 .....                | 63 |
| 〈표 3-15〉 전국푸드뱅크의 푸드뱅크 소개 .....                         | 63 |
| 〈표 3-16〉 운영형태별 푸드뱅크 현황('20.12.31 기준) .....             | 64 |
| 〈표 3-17〉 운영주체별 푸드뱅크 현황 (전국지원센터 제외, '20.12.31 기준) ..... | 64 |

|                                                      |     |
|------------------------------------------------------|-----|
| 〈표 3-18〉 푸드뱅크 사업 실적 변화 추이 .....                      | 64  |
| 〈표 3-19〉 지역별 푸드뱅크 현황 (전국지원센터 제외, '20.12.31 기준) ..... | 65  |
| 〈표 3-20〉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지원금 .....                       | 66  |
| 〈표 3-21〉 수원시 공유냉장고 프로젝트 사례 .....                     | 70  |
| 〈표 3-22〉 심층면접 조사내용 .....                             | 71  |
| 〈표 3-23〉 심층면접 대상자 .....                              | 72  |
|                                                      |     |
| 〈표4-1〉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사업영역과 세부사업 .....                | 89  |
| 〈표4-2〉 생애주기별 먹거리 돌봄 지원 사업 .....                      | 91  |
| 〈표4-3〉 먹거리 돌봄 사업에 대한 문제의식, 대응방향, 그에 따른 사업 추진 방향 ...  | 94  |
| 〈표4-4〉 중앙정부 차원의 먹거리 돌봄 추진방향 .....                    | 95  |
| 〈표4-5〉 결식아동급식지원 지원 연령 및 지원대상 .....                   | 96  |
| 〈표4-6〉 민간 아동급식 「선한 영향력 가게」 .....                     | 97  |
| 〈표4-7〉 공공급식 관련 업무별 관계부처 현황 .....                     | 99  |
| 〈표4-8〉 전라북도 차원의 먹거리 돌봄 추진방향 .....                    | 100 |
| 〈표4-9〉 커뮤니티 키친 구성 절차 .....                           | 102 |
| 〈표4-10〉 익산시 저소득 홀몸 남성 생활요리교실 .....                   | 105 |
| 〈표4-11〉 익산의 명절꾸러미 전달 사업 .....                        | 106 |
| 〈표4-12〉 남원의 생일밥상 차려주기 사업 .....                       | 107 |
| 〈표4-13〉 광의와 협의의 로컬푸드 개념 .....                        | 107 |

## 그림목차 | Contents

|                                                  |    |
|--------------------------------------------------|----|
| 〈그림1-1〉 과거와 현재의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 .....                | 4  |
| 〈그림1-2〉 현재의 지배적인 먹거리 시스템 .....                   | 5  |
| 〈그림1-3〉 대안적인 시민사회 주도의 먹거리 시스템 .....              | 5  |
| 〈그림1-4〉 먹거리 민주주의의 작동 .....                       | 7  |
| 〈그림 2-1〉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                | 14 |
| 〈그림 2-2〉 지역사회 통합돌봄 비전 및 목표 .....                 | 21 |
| 〈그림 2-3〉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 .....                    | 22 |
| 〈그림 2-4〉 네스티드 마켓 구성의 개념적 흐름도 .....               | 26 |
| 〈그림 3-1〉 전국 건강식생활실천율(2018) .....                 | 39 |
| 〈그림 3-2〉 전국 식생활 스타일 문항별 자가 평가(2020) .....        | 40 |
| 〈그림 3-3〉 전국 취약계층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2018) .....         | 41 |
| 〈그림 3-4〉 전국 아침식사 결식을 추이(2008~2018) .....         | 41 |
| 〈그림 3-5〉 전국 시도별 아침결식 예방인구 비율(2019) .....         | 42 |
| 〈그림 3-6〉 전북 연도별 아침결식 예방인구 비율 추이(2010~2018) ..... | 42 |
| 〈그림 3-7〉 전북 시군별 아침결식 예방인구 비율(2018) .....         | 43 |
| 〈그림 3-8〉 전국 시도별 영양표시 활용률(2019) .....             | 44 |
| 〈그림 3-9〉 전북 시군별 영양표시 활용률(2019) .....             | 44 |
| 〈그림 3-10〉 전국 시도별 저염선택율(2019) .....               | 45 |
| 〈그림 3-11〉 전북 시군별 저염선택율(2019) .....               | 46 |
| 〈그림 3-12〉 전북 시군별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2019) .....         | 46 |
| 〈그림 3-13〉 전국 시도별 식생활 형편(2019) .....              | 47 |
| 〈그림 3-14〉 전국 시도별 식생활 형편 어려움 정도(2019) .....       | 48 |
| 〈그림 3-15〉 전북 시군별 식생활 형편 어려움 정도(2019) .....       | 48 |
| 〈그림 3-16〉 전국 및 전북의 취약계층 영양섭취 부족자 비중(2019) .....  | 49 |
| 〈그림 3-17〉 전북 혼인상태 및 연령대별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2019) ..... | 50 |

|                                                  |     |
|--------------------------------------------------|-----|
| 〈그림 3-18〉 전북 식생활형편에 따른 주관적 건강수준과 삶의질(2019) ..... | 50  |
| 〈그림 3-19〉 아동급식 지원체계 지원 흐름 .....                  | 54  |
| 〈그림 3-20〉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내용 .....                   | 67  |
| 〈그림 3-21〉 전주시 ‘엄마의 밥상’ 먹거리 돌봄 프로그램 사례 .....      | 68  |
| 〈그림 3-22〉 부산 동구 ‘어린이식당’ 먹거리 돌봄 프로그램 사례 .....     | 69  |
| 〈그림 4-1〉 익산 어양동 한소반 냉장고 .....                    | 101 |
| 〈그림 4-2〉 청년의 식생활 상태 설문 .....                     | 104 |



# 1

장

## 서론

Jeonbuk Institute

---

제1절 연구목적 및 내용

제2절 연구 방법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목적 및 내용

### 가.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21세기의 식품 생산은 고도로 산업화한 글로벌 식량 시스템의 지배 아래 놓여있음. 식량은 상품으로 변화되었고, 이윤을 추구하는 대규모 다국적 기업들이 먹거리의 재배, 생산, 운송, 마케팅 및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까지도 결정하는 상황으로 변화
- 먹거리에 대한 이윤 중심적인 접근에 대항하여, 복미를 중심으로 ‘먹거리 정의’와 ‘먹거리 주권’과 같은 운동이 진행 (Wittman et al. 2010)
  - ‘먹거리 정의’는 소외된 집단의 건강한 식품에 대한 접근을 요구하는 사회정의 운동과 연계되어, 보다 공평하고 지속 가능한 식량 시스템을 위한 조건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권리 기반의 정치 운동 (Holt-Gimenez and Shattuck 2011).
  - ‘먹거리 주권’의 개념은 1996년 풀뿌리 국제 소규모 농민 운동인 La Via Campesina (International Peasants’ Movement)에서 시작되어, 농민권리 기반, 농촌에 초점을 맞춘 소규모 생산자 관점에서 접근 (Renting 2012)

〈표 1-1〉 대안 먹거리 운동의 방향

| 담론         | 먹거리 정의(Food Justice)                                                                                                                  | 먹거리 주권(Food Sovereignty)                                                                                                                                       |
|------------|---------------------------------------------------------------------------------------------------------------------------------------|----------------------------------------------------------------------------------------------------------------------------------------------------------------|
| 정치적 지형     | 진보적 (Progressive)                                                                                                                     | 급진적 (Radical)                                                                                                                                                  |
| 주요기관, 활동세력 | 공정거래 및 슬로우 푸드 운동 단체; 지역사회 식량 안보 운동 조직(organizations in the Community Food Security Movement); 식량 정책위원회와 청소년 식량 및 정의 운동; 농업노동자 및 노동 단체 | 국제 농민 운동(La Via Campesina), 식량 주권에 관한 국제위원회 (International Planning Committee on Food Sovereignty), 여성을 위한 세계 행진(Global March for Women); 많은 식량 정의와 권리에 기반한 운동 |
| 지향점        | 권한강화(Empowerment)                                                                                                                     | 자격(Entitlement)                                                                                                                                                |

자료: Booth & Coveney. 2015: 15

- 먹거리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먹거리 돌봄 지원체계 구축이 요청
- 현 정부 이전의 농정은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농업의 규모화와 산업화, 상품개발 등에 집중되어 있는 생산주의 농정이었다면, 문재인 정부의 농정은 농업·농촌·농민의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측면에서의 포용적 먹거리 정책으로 전환되었음. 이로써 지속가능농정으로 전환하여 사람(국민 전체와 미래세대) 중심으로 농정 이념으로의 전환(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2019)
-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 2015년 UN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설정하고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추구해야할 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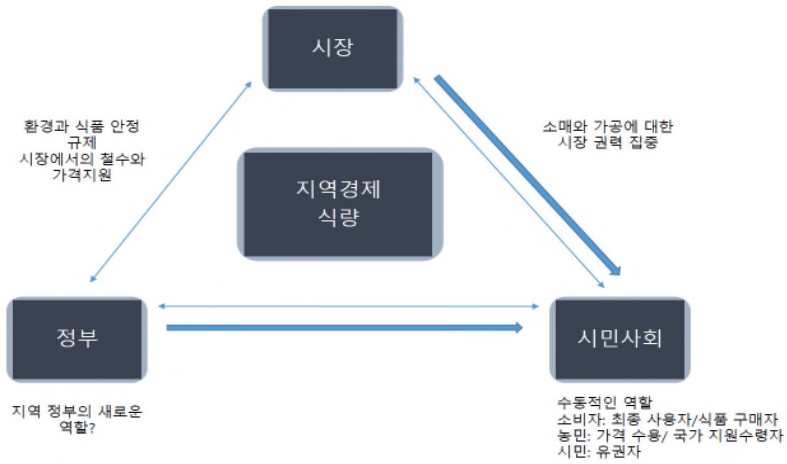
〈그림1-1〉 과거와 현재의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

|             | (과거) 생산주의 농정   | (현재) 지속가능 농정      |
|-------------|----------------|-------------------|
| <b>이념</b>   | 성장, 경쟁, 효율의 농정 | 지속가능성, 포용, 혁신의 농정 |
| <b>목표</b>   | 농업의 경쟁력 향상     | 국민의 삶의 질          |
| <b>대상</b>   | 농업, 농업인        | 국민 모두와 미래세대       |
| <b>추진방식</b> | 중앙집권, 하향식      | 자치분권, 협치          |

자료: 오현석(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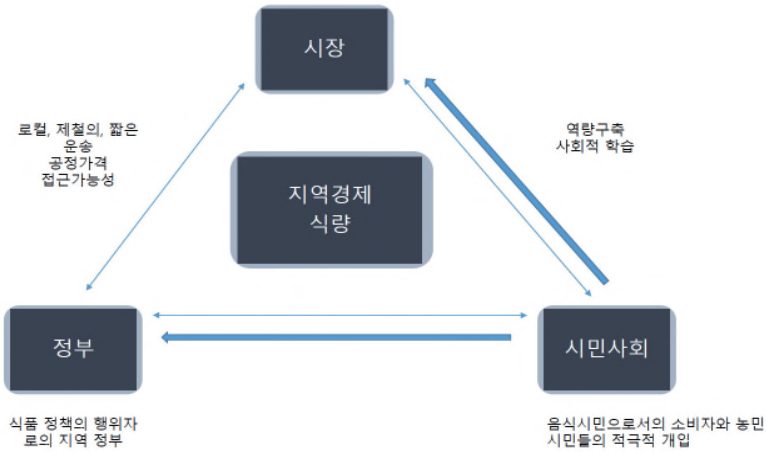
- ‘먹거리시민(Food Citizenship)’은 민주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공정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식량 시스템을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주체들로, 수동적인 소비자에서 적극적인 먹거리시민으로의 전환이 요청(Booth & Coveney, 2015: 3, 16)
- 시장과 정부가 시민사회를 통제하고 영향을 주는 먹거리 시스템에서 시민사회 주도의 먹거리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

〈그림1-2〉 현재의 지배적인 먹거리 시스템



자료: Booth & Coveney. 2015: 17

〈그림1-3〉 대안적인 시민사회 주도의 먹거리 시스템



자료: Booth & Coveney. 2015: 18

- 정부는 2019년부터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건강, 의료, 돌봄이 결합된 커뮤니티케어)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나, 주로 복지와 보건의료 영역에 치중되어 있으며 먹거리를 매개로 하는 돌봄서비스는 보편화되어 있지 않음
-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장기지속에 따른 먹거리 취약계층의 증가에 대응하는 안전하고 양질의 먹거리 지원과 보장 등의 돌봄 지원체계 강화 요청. 학교급식 중단, 노인 및 장애인 등 복지시설 운영 중단, 무료급식소 폐쇄 등으로 먹거리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이에 대한 지원방안 모색 필요
  - 먹거리의 양적 증가에도 사람들이 먹거리 빈곤을 경험하는 것은 생산의 문제가 아니라 분배에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먹거리 정의의 실현은 분배 문제에 집중해서 접근할 필요
- 인권에 기초한 먹거리 보장을 통한 식생활 개선, 공동체성 증진을 통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 방안 제언
- 우리 사회는 소득에 따라 먹거리에 따른 지출 비중이 차이가 있어 먹거리 부담에 관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소외된 집단에게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식량 시스템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 나. 연구내용

### 1) 먹거리 불균형 관련 논의 및 실태 분석

- 먹거리 불균형 극복과 먹거리 정의실현, 돌봄지원 방안에 관한 논의와 정책 동향 분석
- 전라북도 내 기초 생활 수급자 등 먹거리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 파악

### 2) 먹거리 안전망 확보 사례 분석

- 타지역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먹거리 및 사회안전망 확보 사례 조사
  - 지역단위 일반인 및 먹거리 취약계층 대상 식생활 교육, 공유부엌, 전주지역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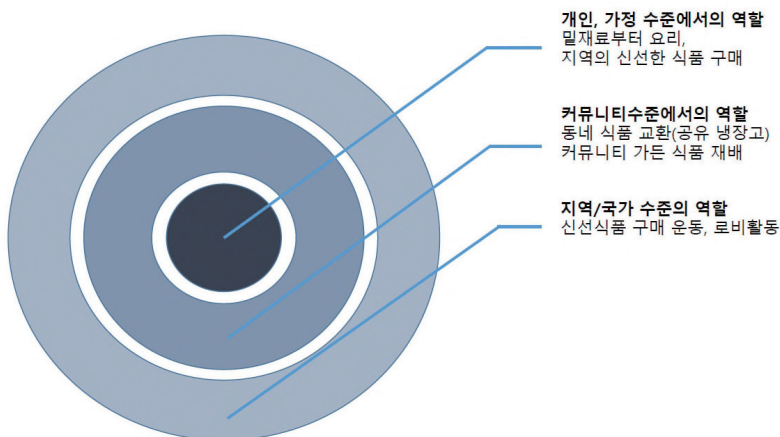
공사례인 엄마의 밥상, 부천의 마을 공동체 소란, 수원친환경무상급식, 공동체 텃밭 실험 등 다양한 지역 사업 조사

-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가족·노동·복지 정책 등과 연계한 먹거리 돌봄 체계 검토
  - 생애주기에 따른 먹거리 지원 사업
  - 공공급식, 농산물 바우처, 임산부 꾸러미, 학교농축수산물 꾸러미 등의 먹거리 돌봄 사업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검토

### 3) 지역의 먹거리 돌봄 지원을 위한 체계 및 거버넌스 구성

-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 속에서 지역의 실정을 고려한 먹거리 돌봄 방식, 급식서비스를 비롯한 통합 지원 서비스로 영양관리 시스템 마련
-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권리와 지속가능한 공급과 소비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사회를 기반으로 한 먹거리 체계 구축 방안 연구
  - 개인, 커뮤니티, 지역, 국가 수준의 역할과 협력방안 모색
  -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의 상황에서 먹거리 접근성, 가용성,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을 바탕으로 먹거리 돌봄 체계를 구성

〈그림1-4〉 먹거리 민주주의의 작동



자료: Booth & Coveney. 2015: 22

## 제2절 연구 방법

### 가. 정보조사 및 분석방법

#### ○ 관련 문헌 및 자료 분석

- 먹거리 정의 관련 개념 및 제도, 계획, 그리고 실천 등에 대한 선행연구 및 타 지역 사례 검토
- 먹거리 취약계층에 대한 통계 자료 검토
- 문헌 및 행정자료 분석은 중앙과 지방정부의 먹거리돌봄 관련 정책과 사업을 중심으로 조사 실시

### 나. 조사계획

#### ○ 심층면접조사

- 먹거리 돌봄 사업 관련 담당자 의견 수렴을 위한 심층면접조사
- 조사대상: 취약계층 먹거리 돌봄 사업 관련 담당자
- 조사방법: 반구조화된 조사표를 이용한 심층 인터뷰
- 조사내용: 먹거리 돌봄 사업의 효과 및 정책요구 사항 등

### 다. 전문가 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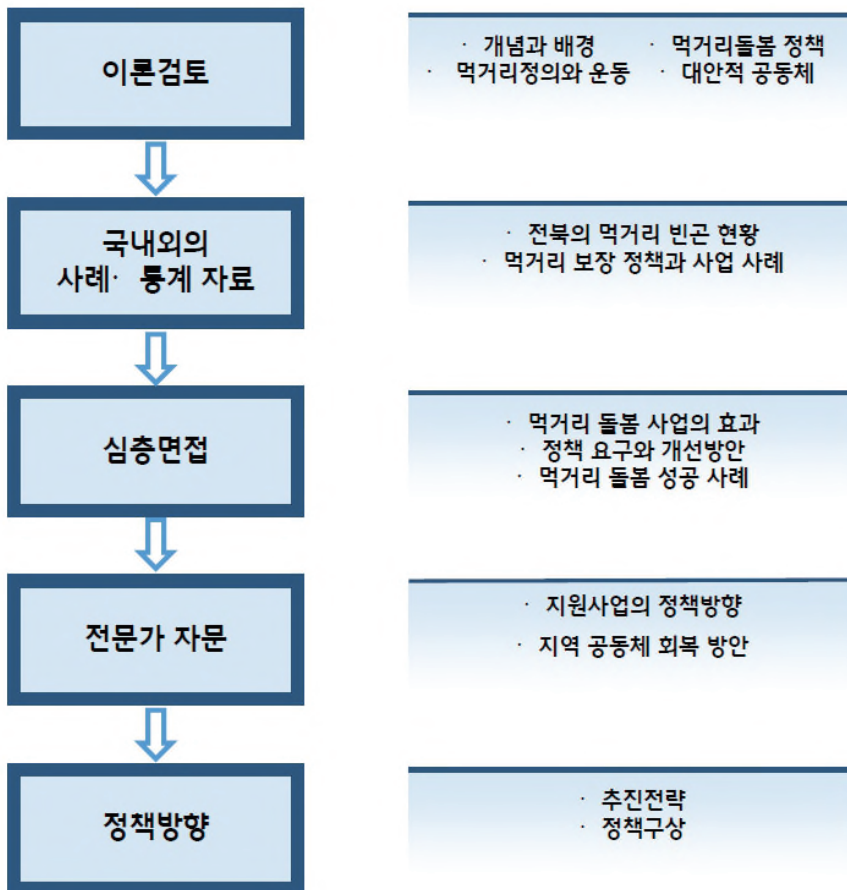
- 먹거리돌봄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회의 또는 서면으로 자문 진행하여 연구 방향과 범위, 내용 구성, 심층조사의 질문지 문항과 대상자 선정, 먹거리 돌봄 관련 정책 제언 등에 대한 의견 및 자문
- 먹거리 돌봄을 지원하는 대표자 및 활동가 자문을 통해 먹거리 돌봄 관련 사업들에 대한 실제적 요구사항과 개선점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먹거리돌봄 관련 정책 제안의 실효성과 적절성을 높임



## 라. 기대효과

- 전라북도 먹거리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하고 양질의 먹거리 지원체계 제안
- 생애주기별 먹거리 돌봄체계에 있어서 중앙정부 차원과 지역 차원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정책 방향과 사업 제안

## 마. 연구추진체계





# 2

## 장

# 먹거리 정의와 돌봄의 의미와 차원

Jeonbuk Institute

---

제1절 먹거리 정의와 돌봄의 의미

제2절 먹거리 정의와 돌봄의 실천

제3절 먹거리 돌봄 관련 선행연구

제4절 해외의 먹거리 보장 프로그램



## 제 2 장 먹거리 정의와 돌봄의 의미와 차원

### 제1절 먹거리 정의와 돌봄의 의미

#### 가. 먹거리 정의

- 먹거리 기본권에 대한 논의는 1948년 세계인권선언 25조 1항의 규정과 1966년 국제인권규약에서 시작되어, 2015년 UN의 17개 목표 (United Nati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UN SDGs) 발표와 밀라노도시먹거리정책협약(Milan Urban Food Policy Pact)에 이르기까지 확대되면서 발전
- 세계인권선언에서는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절한 생활수준(a standard of living adequate for the health and well-being)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에는 먹거리(Food), 의복, 주거, 의료,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사회 서비스 등을 누릴 권리가 포함된다”라고 규정(조효제 2013: 270)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11조는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적절한 음식,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을 위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그러한 취지에서 자유로운 동의에 입각한 국제적 협력의 본질적인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 권리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한다”라고 정의(조효제 2013: 270-1)
- 1999년 유엔 인권기구인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위원회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ESCR)은 ‘적절한’ 먹거리 기본권은 “남녀노소 모든 사람이 단독으로, 또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함께, 적절한 먹거리 및 그것의 확보 수단에 대한 물리적·경제적 접근성을 가질 수 있을 때만 실현”된다고 규정(제6조) (김소연

2020: 233)

- CESCR은 먹거리기본권의 핵심내용으로 가용성(availability), 접근성(accessibility),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규정(제7조) (김소연 2020: 233)

## 나. 먹거리 돌봄

- 먹거리 보장에 대한 접근은 1970년대는 농업생산량의 증대, 1980년대는 양적 접근성 확대, 1990년대에는 질적 접근성이 추가되는 경향으로 발전
- 현재에 이르러 먹거리보장은 1996년 세계식량회의(World Food Summit) 합의에 따라, “모든 사람이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양과 그들의 기호를 만족하게 하는 정도의 충분하고 안전하며 영양가 있는 먹거리에 대한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접근성을 언제나 가지는 상태”로 정의(김소연 2020: 234)
-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먹거리와 농업과 관련하여 SDG1 빈곤 끝내기, SDG2 굶주림 끝내기, SDG13 기후 행동 등을 살펴볼 수 있고, 우리나라는 UN SDGs를 바탕으로 K-SDGs를 수립·발표하여, 취약계층 먹거리 문제 해결과 먹거리 안보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

〈그림 2-1〉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출처: 지속가능발전포털 홈페이지(<http://www.ncsd.go.kr/ksdgs?content=3>)

- 밀라노도시먹거리정책협약에서는 ① 시민·지역·현장 주도 ‘먹거리 정책 거버넌스’ 발전, ② 지속가능한 식생활과 영양, ③ 먹거리 취약계층 대상 사회경제적 형평성 증진, ④ 생태복원을 통한 먹거리 생산 확대, ⑤ 먹거리의 공급과 유통, ⑥ 먹거리 자원순환을 위한 먹거리 폐기 방안에 이르기까지 6가지 핵심 내용으로 구성되어, 먹거리 정의를 실현하고자 함(문은숙 외. 2017)
- 현재의 먹거리 돌봄은 중앙정부의 다양한 사회복지 지원정책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나, 먹거리 기본권과 정의의 관점에 비추어 식재료 및 식사 지원, 영양관리, 식생활 교육 등의 개별사업이 아닌 먹거리를 중심으로 한 통합돌봄의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함
- 이를 통해, 먹거리 돌봄은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전국민으로 대상으로 하는 관점으로 확대되어서 수행되면서, 먹거리 시민들이 주도하는 먹거리 시스템과의 연관 속에서의 먹거리 돌봄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먹거리 돌봄체계의 구축은 시혜나 자선 차원의 선별적 식품 제공이 아닌 보편인권 차원의 먹거리 보장으로 전환되면서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러한 돌봄의 일차적인 역할은 먹거리 취약계층을 비롯한 지역 주민에게 양과 질에서 우수한 먹거리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공은 단순히 먹거리 만이 아닌 다른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연관되어서 통합되어 제공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음(김홍주 2014)
- 먹거리보장을 이루기 위해, 기업먹거리체계에 의존하게 된다면 이는 농업생산량의 증대, 자유무역시장체계의 확대, 국제 원조 등의 방식은 환경적 측면과 사회정의적 측면에서 구조적 모순을 발생시킴
  - 환경적으로는 대규모 화학농업과 긴 수송거리에 기반한 생산은 생태계와 생산자는 물론 소비자의 건강에 악영향
  - 사회정의적으로는 생산량이 증대되어 먹거리가 충분한 나라에서조차 경험하고 있는 먹거리 빈곤과 영양 불균형의 문제가 발생하고, 농장노동자의 인권문제 역시 발생

- 농업생산량 증대가 목적으로 작동하면, 생산과 폐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의 환경적, 사회적 부정의의 발생을 막을 방안이 부재
- 기업먹거리체계를 비판하며 등장한 대안운동 역시 특정 생산자에게 집  
중되면서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를 보이거나 주류시  
장을 변혁시키는데 한계가 존재(김소연 2020)
- 정부는 국민건강증진법과 국민영양관리법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  
수명 증가를 위한 영양관리 및 식습관 개선을 위한 사업 진행

〈표 2-1〉 국민건강증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 함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신체활동장려,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  
의 실천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 “보건교육”이라 함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  
는 교육을 말한다.
3. “영양개선”이라 함은 개인 또는 집단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시키는 것을 말한다.
4. “신체활동장려”란 개인 또는 집단이 일상생활 중 신체의 근육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자발적으로 적극 수행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
5. “건강관리”란 개인 또는 집단이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강한 상태를 유  
지하는 것을 말한다.
6. “건강친화제도”란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직장 내 문화 및 환경을 건강친화적으로 조성하고,  
근로자가 자신의 건강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상담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것  
을 말한다.

**제3조(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  
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혼인전에 혼인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확인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영양개선)**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상태를 조사하여 국민의 영양개선방안을 강구하  
고 영양에 관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영양교육사업  
2. 영양개선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3. 기타 영양개선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업



**제19조(건강증진사업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요원 및 시설을 확보하고,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2. 영양관리
3. 신체활동장려
4. 구강건강의 관리
5.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6.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7.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③보건소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를 행한 때에는 이용자의 개인별 건강상태를 기록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시설·운영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A%B5%AD%EB%AF%BC%EA%B1%B4%EA%B0%95%EC%A6%9D%EC%A7%84%EB%B2%95#iBgcolor1>

## 〈표 2-2〉 국민영양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
2.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국민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영양관리사업”이란 국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상담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영양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영양·식생활 교육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양·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양·식생활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사업
3. 생활습관질환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A%B5%AD%EB%AF%BC%EA%B1%B4%EA%B0%95%EC%A6%9D%EC%A7%84%EB%B2%95#undefined>

○ 제2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및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영양)의 목표에 따라, 본 성과지표의 달성을 위한 영양 사업이 추진됨

〈표 2-3〉 제2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성과지표

| 목표                      | 성과지표                            | 구분 | 현황<br>(2019) | 목표치<br>(2021) |
|-------------------------|---------------------------------|----|--------------|---------------|
| 건강식생활 실천 인구 비율 증가 또는 유지 | 1. 적정 수준의 지방 섭취 인구 비율 증가        | 조율 | 57.5%        | 50.0%         |
|                         | 2. 나트륨 2,000mg/일 이하 섭취 인구 비율 증가 | 조율 | 26.6%        | 31.0%         |
|                         | 3. 적정 수준의 당 섭취 인구 비율 증가         | 조율 | -            | 80.0%         |
|                         | 4. 과일·채소 500g/일 이상 섭취 인구 비율 증가  | 조율 | 31.3%        | 41.2%         |
|                         | 5. 가공식품 선택 시 영양표시 이용 인구 비율 증가   | 조율 | 28.8%        | 30.3%         |
|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강화           | 6. 아침결식을 감소                     | 조율 | 28.1%        | 18.0%         |

자료: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1

〈표 2-4〉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30 영양 분야 성과지표

| 연번 | 성과지표                                      | 현황<br>(2018) | 목표치<br>(2020) | 목표치<br>(2030) |
|----|-------------------------------------------|--------------|---------------|---------------|
| 1  | 식품 안정성 확보 가구분율(대표지표)                      | 96.9%        | 95.0%         | 97.0%         |
| 2  | 소득 1-5분위<br>식품 안정성 확보 가구분율 격차(형평성 대표지표)   | 11.4%p       | -             | 7.0%p         |
| 3  | 포화지방산을 적정수준으로 섭취하는 인구 비율<br>(만3세 이상)      | 56.5%        | -             | 74.0%         |
| 4  | 나트륨을 1일 2,300mg 이하로 섭취하는 인구비율<br>(만9세 이상) | 33.2%        | 30.8%         | 42.0%         |
| 5  | 과일/채소를 1일 500g 이상 섭취하는 인구비율<br>(만 6세 이상)  | 29.3%        | 41.2%         | 41.0%         |
| 6  | 가공식품의 영양표시 이용률 (만7세 이상)                   | 26.4%        | 30.0%         | 31.7%         |
| 7  | 건강 식생활실천율 (만6세 이상)                        | 41.5%        | 48.6%         | 50.6%         |
| 8  | 칼슘 적정수준 섭취하는 인구 비율 (만1세 이상)               | 16.5%        | 21.0%         | 21.0%         |
| 9  | 비타민 A 적정수준 섭취하는 인구비율 (만1세 이상)             | 11.4%        | 49.2%         | 24.0%         |
| 10 | 영양섭취부족 노인 인구비율 (75세 이상)                   | 18.5%        | 26.3%         | 12.0%         |
| 11 | 가임기 여성의 빈혈 유병률                            | 13.1%        | 12.0%         | 11.0%         |

## 제2절 먹거리 정의와 돌봄의 실천

### 가. 한국의 먹거리 상황: 신자유주의적 지배 속 먹거리 빈곤

- 1997년 한국이 IMF위기를 거치면서 급속하게 진행된 신자유주의적 체제로의 전환은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 실직과 해고의 일상화, 차별이 테올로기의 확대, 시민 정치역량의 축소, 기후위기 심화 등을 발생 (지주형 2011)
- 먹거리 산업과 식생활문화 역시 변화하여,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들의 먹거리 선택권은 확대된 반면, 농민, 이주농업노동자, 급식노동자, 배송노동자들에게는 저임금과 생존권 위협이 직면
- 1인가구의 증가에 따라, 혼밥 역시 증가하면서 영양불균형이나 적절한 식사가 어려운 경우 역시 증가
-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가정 내에서 한국음식에 대한 강요와 모국음식 제한을 경험하며 먹거리권리가 위협(김소연 2020)

### 나. 코로나19 이후, 먹거리 빈곤 계층의 확대

- 코로나19 이후, 기본적인 먹거리가 보장되지 않는 먹거리 취약계층이 증가했으며, 이러한 사태는 코로나19의 영향력이 장기화된다면, 더욱 심화될 수 있는 상황임
- 현재 우리나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정책 중 먹거리에 특화된 지원이 부족하고, 주로 현물지원으로 이루어져, 먹거리 지원의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
- 청년층 빈곤 문제로 인해 돈이 없어 끼니를 거른 적 있다는 청년이 37%에 달한다는 보도는 코로나19 이후 더욱 심화되는 청년 빈곤 상황을 보여줌(동아일보 2021. 4 19일자)
  -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푸드플랜을 통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다양한 먹거리 문제 해결 노력이 요청
  - 취약 대상 먹거리 지원 사업에서 현물지원 중심의 방식으로 확대할 필요(농촌경

제연구원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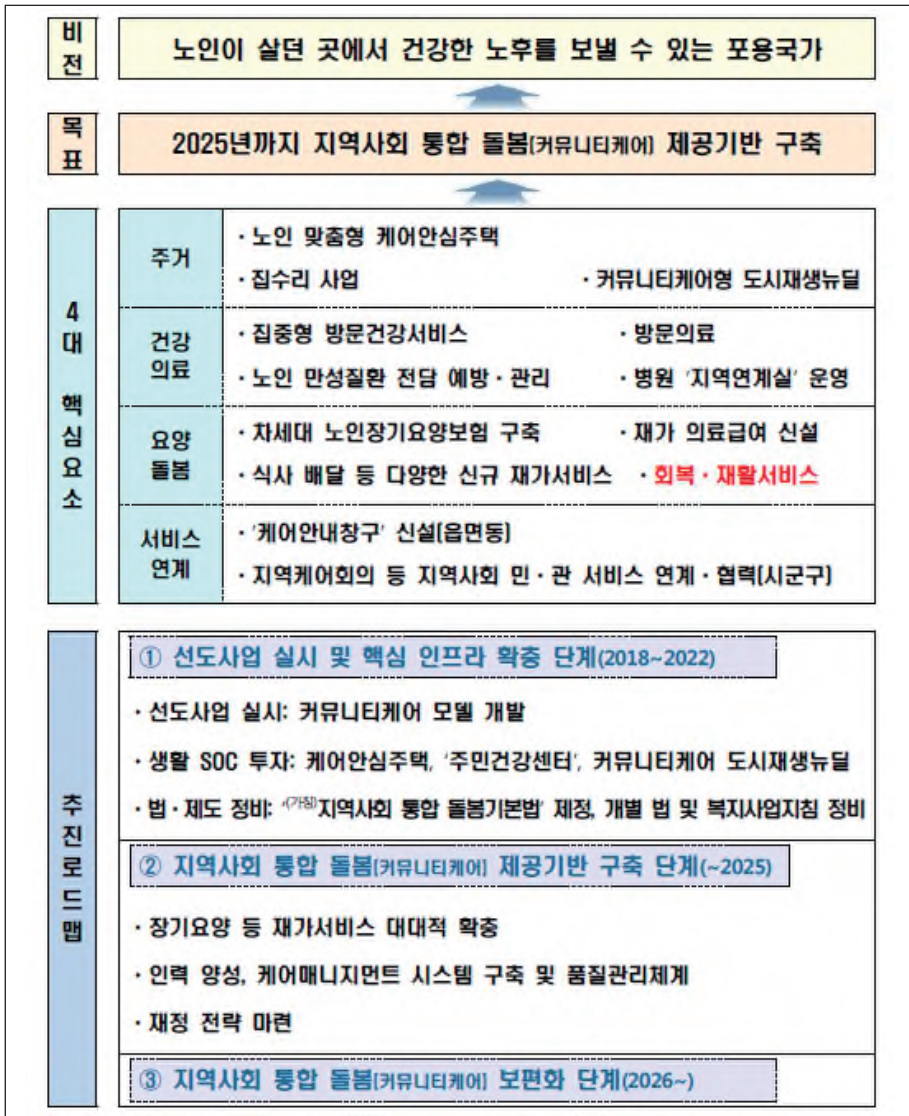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급식중단 등의 사태는 취약계층에서 먹거리를 제공하는 공적 먹거리 공급체계를 무력화시키고, 사회복지 대상이 아닌 사각지대의 문제가 심화되는 경험

## 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내 먹거리 돌봄

### 1) 지역사회 통합돌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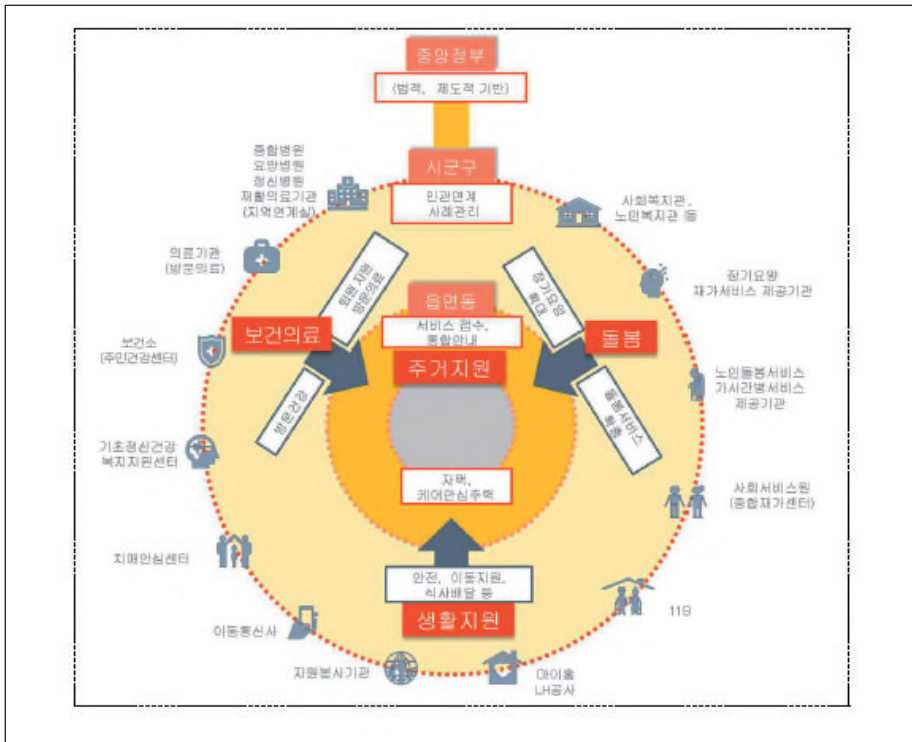
-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어르신,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이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개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같이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
  -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 개인의 돌봄불안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르신들이 자신이 살고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주거·의료·요양·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
  - 통합돌봄의 비전: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포용국가
  - 4대 핵심요소는 ① 주거지원 인프라 확충, ② 방문건강 및 방문의료 제공, ③ 재가 돌봄 및 장기요양, ④ 서비스 연계를 위한 지역 자율형 전달체계 구축임
- 효과적인 통합돌봄 제공을 위해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인 서비스가 아닌, 지역사회의 민간-공공 협력을 바탕으로 한 사람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 목표
  -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통해 각각의 주체들이 참여하고 연계하는 통합 플랫폼 마련

〈그림 2-2〉 지역사회 통합돌봄 비전 및 목표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18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안)”

〈그림 2-3〉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18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안)

## 2) 통합돌봄 내 먹거리 돌봄

- 통합돌봄의 중요한 축으로서의 요양돌봄에서 식사배달 등의 재가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아짐
  - 통합돌봄대상자는 ① 병원 및 요양시설에서 퇴소하여 지역사회에 복귀하기를 희망하는 사람, ② 급성기 질환으로 입원 후 퇴원하는 단기 돌봄 대상자, ③ 장기요양 등급 외 대상자 및 복합만성질환 미관리군, ④ 75세 도래자 및 고위험 선제가입대상자, 이외에 거동불편, 만성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노인, 돌봄사각지대 대상자 중 영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등임
  - 이들을 대상으로 급식, 가정으로 도시락 배달, 식품꾸러미 배달, 식품바우처 카드 등의 다양한 방식의 먹거리 제공에 대한 검토가 요청

### 제3절 먹거리 돌봄 관련 선행연구

#### 가. 취약계층과 농업연계 방안 관련 연구

- 식품지원제도를 다룬 이계임 외(2012)의 연구는 저소득계층을 비롯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식품소비 및 영양섭취 현황을 분석하고, 식품지원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성 확대를 다룬
  - 국민에 대한 안정적인 식품 공급을 위해 국내 농업 및 생산자 연계 기반 마련을 제언
  - 단기적으로는 식품 소비 및 영양 측면에서 취약한 계층에게 식품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식품 바우처 제도로 통합 확대 운영을 제언
- 이계임 외(2017) 연구는 취약계층의 영양섭취 상태 개선과 식품소비 증진을 위한 식품비 지원사업과 밑반찬 지원 사업 등이 국내 농업과 연계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지속가능성과 상호이익의 관점에서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국내 농업 및 생산자와의 연계가 필요함을 지적
- 이계임 외(2019)의 『농식품 바우처 지원 실증연구』는 취약계층 식생활 지원 사업이 농식품 소비의 증대와 연결될 수 있도록, 농식품을 현물로 제공하는 농식품 바우처의 지원제도를 검토함
  - 농식품 바우처 지원제도가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실제 사업 진행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자 함
  - 춘천시와 완주군의 대상가구를 통해 바우처 지원 이전 시점과 이후 시점의 가계부 비교를 통해 농식품 바우처를 통한 식품소비 행동을 추적하여, 실제 농산물 소비 증대 효과 및 바우처 형태에 따른 이용 등을 점검
- 농식품 바우처에 대한 다른 연구로, 김상효 외(2019)를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연구는 농식품바우처 지원제도의 세부 추진체계의 검토를 통해, 농식품 바우처 사업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지역푸드플랜 및 식생활 교육과의 연계방안 역시 제언함
  - 농수산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의 기본 방향인 푸드플랜의 틀 안에서 수혜자 특성과 소비환경에 맞는 농식품 바우처 제공을 구상하여 제언



## 나. 영양플러스 사업 및 급식 관련 연구

- 양정선(2013) 연구는 미국의 WIC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실행되고 있는 영양플러스 사업에 대한 경기도 지역 사업 수행에 대한 평가를 담고 있음
  - 중앙부처에 대한 정책제언은 영양교육의 질적인 개선과 식품 패키지의 자율성 확대, 전자카드 도입, 사업관계자들의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제언하고 있음
  - 경기도 지역에 대한 정책은 보충식품 배송의 문제, 식품의 다양성, 수혜자의 사후 관리와 영양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위한 환경적 개선을 제언함. 또한 시군에 따른 사업의 차별적 적용도 제언하였음
- 이윤나 외(2014)는 영양플러스 사업 10년째를 맞이하여, 사업의 진행 현황을 검토하고, 사회와 환경의 변화에 따른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함
  - 사업지원체계에 있어 중앙지원조직의 필요함과 지역별 지원체계를 시도별 혹은 권역별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
  - 담당자 교육을 통해 중앙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과 지역별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
  - 교육 방법의 다양화를 통한 상담과 교육의 효과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언
- 송은영 외(2018) 연구는 전주시 영양플러스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호자의 영양지식과 영유아의 영양상태의 관계를 조사하여, 보호자 대상 효율적인 영양교육을 제언
  - 보호자의 영양지식은 식생활태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영양플러스 사업에 있어서의 영양관리 지식 및 실천 관련 교육의 강화가 요청
- 조미영 외(2019)는 베트남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한 영양플러스 사업 수혜에 따른 영양지식 및 식습관, 식사섭취상태를 비교 연구를 진행함
  - 결혼이민여성 중 영양플러스 수혜자는 비수혜자 대비 식습관, 식생활, 영양지식 면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임
  - 영양플러스 사업을 통한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한 영양교육을 통해 한국생활에 대한 순조로운 정착과 다문화가정 전체의 바람직한 식생활 영위에 도움을 기대



- 오민수 외(2019)는 경기도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지원사업,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사업, 제공기관 환경개선 사업 및 취사원 인건비 보조사업 등 대표 사업을 검토하고, 각 지원사업의 개선점과 효율화 방안 제시
  - 무료급식 대상자의 인원관리 체계화가 요청되고, 급식과 식사배달 사업에 필요한 지원인력 현실화 방안을 제언
  - 특히, 재정지원방식에 있어서 사업별 단가지원방식이 아닌 지역별 포괄보조 방식을 통한 시군의 수요와 현황에 따른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시
- 홍연아 외(2021)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시범사업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보완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연구임
  - 2020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을 통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임산부의 인식제고를 이루었고, 친환경농산물 소비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됨
  - 반면, 도시지역 대비 도농복합지역이나 농촌지역에서의 신청률이 저조하여, 임산부의 욕구를 적절히 파악하여 상품의 다양화와 이용절차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석재은 외(2017) 연구는 지역기반 노인통합돌봄서비스 지원체계를 다루면서, 지역의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를 위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체, 사회적경제조직을 통한 돌봄을 구축할 필요성에 대해 역설함
  - Aging in Place, Aging in Community의 노인통합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내에서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연구로 먹거리 돌봄을 비롯한 포괄적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급식전달에 있어서도 대면관계의 형성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
  - 노인들의 근육 퇴화에 따른 식사의 어려움 등에 대한 이해와 그에 대응한 급식의 표준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
- 송원규(2020)의 연구는 한국의 대안농식품 운동이 1세대의 생협운동, 2세대의 위탁급식의 직영화와 학교급식 지원조례로 나타나는 학교급식 운동, 3세대의 로컬푸드 운동 등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먹거리 정책을

결정하는 민간 영역과 공공 영역의 협동의 가능성을 분석함

- 동시에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공모방식이 가지는 행정주의의 팽창과 과잉 제도화에 대한 우려 역시 언급
-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이 네스티드 마켓<sup>1)</sup>을 형성하면서 발전하는 과정을 통한 대안적 방향성을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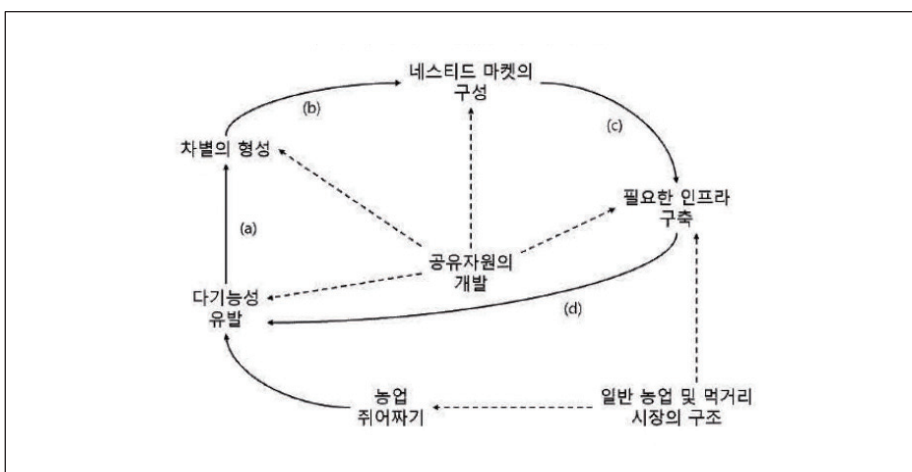
○ 김선휘 외(2012) 연구는 푸드뱅크 사업의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실제 커뮤니티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에서 분절성이 나타나고, 지속성이 부족한 점을 지적함

- 성공적인 푸드뱅크 수행을 위해서는 운영에 대한 책임성 강화, 주민참여의 확대, 전문인력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

○ 김홍주 외(2013)의 푸드뱅크에 대한 연구 역시 양적인 성장에 비해 그 효과가 확대되지 못하는 원인을 추적하고 먹거리 연대의 한 축으로 푸드뱅크가 성장하기 위한 조건을 제언

1) 네스티드 마켓 (nested market): 플루흐(van der Ploeg, 2015: 17)는 ‘nested market’을 더 넓은 일반시장 안에 동지를 둔 시장으로서 일반시장의 부분이지만 그 내부의 동학, 생산자-소비자 상호관계, 거버넌스 형태, 가격 차이, 유통의 메커니즘, 그리고 전반적인 영향 등에서 차별화된 시장이라고 정의함. 예를 들면, 1990년대 유럽연합 내에서 규제철폐, 신자유주의 세계화, 그리고 농업에 대한 가격하락과 비용상승의 이중적 압박에 대응으로 더 높은 부가가치가 담긴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을 추구했던 흐름을 예로 들 수 있음

〈그림 2-4〉 네스티드 마켓 구성의 개념적 흐름도



자료: van der Ploeg(2015), 송원규 2020 재인용

- 푸드뱅크에서 제공되는 먹거리가 산업화된 먹거리가 아닌 지역 기반 먹거리일 필요가 존재
- 사업 대상자를 취약계층에 한정할 것이 아닌 지역 주민 전체로 확대하여, 먹거리 보장 시스템이 보편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함을 주장
- 푸드뱅크 사업을 좀 더 확대하여 공공급식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른 예산지원이 필요함을 언급
- 이형진 외(2018) 연구는 서울시의 먹거리 취약계층의 실태와 정책 요구도를 조사하여, 서울시 취약계층 대상 먹거리 정책 및 사업을 제시
  - 서울시 식생활 지원 사업 관련 실태 조사를 통해, 수요에 비해 지원 서비스의 공급이 부족한 현실을 파악
  -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과 인력이 요청되며,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
  - 취약계층별 대상자 특성과 활동 능력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지원이 요청된다고 분석
- 서동희 외(2019) 연구는 학교 과일 간식 지원사업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어린이 건강 증진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부수적인 목표로 설정하는 것을 제안
  - 건강한 식습관 형성 및 국산 과일에 대한 친밀성 증진을 통해 궁극적으로 농가 소득 증대가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이를 최종 목표로 설정하는 것에 대해 주의를 요청
  - 과일 간식 지원에 있어 알레르기 유발위험에 따른 관리가 필요하고, 친환경 과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수급 계획 마련이 필요
  - 과일 간식 지원을 위한 학교 내 인프라 구축과 책임 인력이 마련될 필요성을 제언

#### 다. 푸드플랜의 통합적 관점에 따른 먹거리 돌봄 연구

- 김홍주 외(2012)는 한국사회의 먹거리 보장에 대한 인식이 먹거리 취약계층에게 먹거리를 지원하는 정도로만 파악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먹거리 문제를 개인의 차원이 아닌 생산자에서 소비자에 이르는 먹거리의 순환과 연계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

- 경제, 사회, 환경, 건강, 교육, 문화에 이르는 전방위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먹거리를 인식하고, 시장정보다는 공공적인 접근으로 먹거리 문제에 다시 접근할 필요성을 역설
- 윤병선 외(2018) 연구는 푸드플랜의 먹거리 생산, 유통, 가공, 소비 그리고 재활용 및 폐기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순환적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푸드플랜의 관점에 따른 서울시의 공적 조달체계를 분석
  - 공공급식과 학교급식의 통합을 통한 자치구의 공공급식 확대 방안 제언
  - 생산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산지 생산자의 조직화 확대
  - 공공급식센터의 기능 확대를 통한 먹거리 취약계층 사업의 결합을 제언함
- 김광남 외(2018)는 옥천 지역을 농촌마을 민주주의공동체 운동을 중심으로 먹거리의 생산, 유통, 소비에 이르는 과정에서 어떻게 다양한 주체들이 스스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의 사례를 통해 소개
  - 지역의 민주주의 기반으로서의 지역언론과 환경에 대한 고민을 실천하는 농민조직 등을 통한 민관 거버넌스의 구축으로 순환과 공생의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과정을 추적
  - 지역공동체와 사회적자본이 구축·순환되는 지역 생태계의 모델의 전국적 확산을 제언
- 임영훈(2020)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사회, 국제 환경의 변화가 먹거리 부족과 식량위기는 더 이상 최빈국의 문제만이 아닌 우리의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먹거리 분야의 불확실성,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해 먹거리 생산-유통-소비 전주기에 대한 변화의 방향을 구상해야 한다고 제언
  - 특히 한국과 같이 식량자급률이 낮은 경우, 식자재 수급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는 자급적 식문화의 확대와 착한 소비 등이 대두하고 있음을 지적
  - 기존의 생산 안정이나, 제조 유통에 있어서의 안전은 물론, 안심 소비를 통해 다양한 주체가 적극적으로 먹거리 패러다임에 참여할 것을 제언
- 황윤재 외(2021) 연구는 코로나 시대의 먹거리 문제를 진단하고, 먹거리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함
  - 먹거리 문제는 식량 공급의 불확실성의 확대, 취약계층의 증가 및 먹거리 불안정성의 심화, 먹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푸드플랜의 중요성의 대두로 파악함

-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는 양질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식량 안보를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이 필요함을 지적
  - 먹거리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현금지원 대신, 조리할 수 있는 계층에게는 현물지원을 조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에게는 도시락이나 반찬 배달 등을 통해 지원 확대를 제언
- 황영모 외(2020)의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연구』에서는 생산에서 폐기에 이르는 먹거리 가치사슬과 사회·경제·환경·건강 등의 정책이 어떻게 교차하면서 그 가치를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을 제언함
- 먹거리 돌봄에 관련한 영역에 있어, 생애주기에 따른 먹거리 보장의 강화와 먹거리에 기반한 공동체의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음
  - 생애주기 먹거리 보장은 농수산식품바우처 제도의 전면적 도입, 영양플러스 사업의 확대, 청년 커뮤니티 푸드 지원으로 구분되어 제안됨
  - 공동체의 활성화는 커뮤니티 케어에 있어 먹거리 연계의 강화, 생활SOC 연계 먹거리 기반 확충, 먹거리 관련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으로 3가지 방안을 주장함

〈표 2-5〉 생애주기 먹거리 보장 강화와 먹거리에 기반한 공동체 활성화 과제

| 농식품바우처<br>제도 전면 도입                                                                                                                                                   | 영양플러스사업<br>개편과 확대                                                                                                                                                                             | 청년(대학생)<br>커뮤니티푸드 지원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먹거리 취약계층<br/>기준·범위 경제적·사회적<br/>적용·확대</li> <li>· 현금·현물지원 결합한<br/>지원내용으로 변경</li> <li>·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 및<br/>실행체계 일원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양 플러스 지원대상<br/>확대(어르신·먹거리<br/>취약계층 등)</li> <li>· 지역 푸드플랜과 연계하여<br/>지역농축수산물 기반<br/>보충식품 공급체계 마련</li> <li>· 보충식품 질적 개선 위한 지침<br/>및 공급방식 개선</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처 협업의 청년(대학생)<br/>결식해소와 건강·영양 증진<br/>정책 추진</li> <li>· 청년·대학생 삼시세끼 바우처<br/>정책 도입</li> <li>· 청년 1인 가구 위한 공유부엌 등<br/>지원·추진</li> </ul> |
| 먹거리 연계<br>커뮤니티케어 추진                                                                                                                                                  | 생활SOC 연계<br>먹거리 기반 확충                                                                                                                                                                         | 먹거리 기반<br>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용한<br/>커뮤니티케어 협력모델<br/>(센트럴킴) 마련·운영</li> <li>· 사회적경제 조직 담당<br/>지역사회 먹거리 돌봄 모델<br/>추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SOC 복합화 사업 메뉴에<br/>먹거리 시설 포함</li> <li>· 농축수산물·가공품 직판장,<br/>커뮤니티키친, 먹거리 교육문화<br/>공간 등 포함 먹거리<br/>복합공간 조성 운영</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먹거리의 생산·유통·가공·소비<br/>단계 사회적경제 방식의<br/>사업조직 활동 지원</li> <li>· 먹거리 기반 지역공동체<br/>프로그램 지원으로 사회적경제<br/>조직 육성</li> </ul>                   |

자료 : 황영모 외(2020) 235, 252

## 제4절 해외의 먹거리 보장 프로그램

### 가. 미국의 음식 지원제도

- 미국의 경우, 먹거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비상식품지원 (Immediate Food Assistance), 보충영양프로그램(SNAP:The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코로나19 사태 대응 푸드스탬프와 식사 제공 프로그램(Food Stamps and Meal Program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영유아와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영양 프로그램(WIC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 아동 학교 무상 급식 (Free School Meals for Children), 노년층을 위한 무료 급식 프로그램 (Free Food Programs for Seniors), 긴급사태 대응 보충영양프로그램 (D-SNAP Helps With Food Costs After a Declared Disaster) 등을 제공 (<https://www.usa.gov/food-help#item-213705>)
- 비상식품지원 (Immediate Food Assistance) 프로그램은 핫라인을 통해 기아에 직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까운 지역 푸드뱅크나 푸드 저장소(food pantry)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임
- 보충영양프로그램(SNAP:The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은 푸드 스탬프로 기존에 알려졌던 사업으로, 소득이 낮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채소, 과일, 정육, 유제품, 빵이나 시리얼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카드(an EBT card: a plastic electronic benefits transfer card)를 제공함
- 최근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보충영양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학교가 문을 닫음에 따라 부모들이 아이들이 집에서 도시락을 먹을 수 있도록 조정하는 등의 제도적인 지원 사업을 시행 중임
- 영유아와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영양 프로그램(WIC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은 임신과 출산, 영유아 시기의 건강한 식품과 영양 공급을 위해 저소득층 여성과 아이를 대상으로 지원

- 아동 학교 무상 급식(Free School Meals for Children)은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한 식사와 우유를 학교, 아동 돌봄 센터(childcare center), 방과 후 과정(after-school program)을 통해 제공
  - 학교 무상급식 프로그램에는 학교점심 제공 프로그램(The National School Food Program)과 아침 제공 프로그램(The School Breakfast Program), 우유 급식 프로그램(Milk to children at school), 여름 방학 음식제공 프로그램(Summer Food Service Program) 등이 있음
- 노년층을 위한 무료 급식 프로그램(Free Food Programs for Seniors)은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며, 노년층 파머스마켓 영양 프로그램(Seniors Farmers' Market Nutrition Program)과 매달 식품을 배달해 주는 식품보충 프로그램(Commodity Supplemental Food Program)으로 제공됨
- 긴급사태 대응 보충영양프로그램(D-SNAP Helps With Food Costs After a Declared Disaster)은 자신의 거주지역이 재난지역으로 선포 되었을 경우 긴급으로 음식을 보충영양프로그램(SNAP)의 한 달 정도의 금액을 지원해주는 사업

〈표 2-6〉 미국의 영양 및 식품지원제도

| 지원사업                                                                                       | 지원 대상         | 개요                                                                                                                |
|--------------------------------------------------------------------------------------------|---------------|-------------------------------------------------------------------------------------------------------------------|
| 비상식품지원 (Immediate Food Assistance),                                                        | 기아에 직면한 사람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화 핫라인으로 도움 요청</li> <li>• 지역의 푸드뱅크나 푸드저장소와 연결</li> </ul>                 |
| 보충영양프로그램(SNAP:The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 저소득층 대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푸드 스탬프 사업</li> <li>• 전자 카드로 야채, 과일, 정육, 유제품, 빵이나 시리얼 등을 구매</li> </ul> |
| 코로나19 사태 대응 푸드스탬프와 식사 제공 프로그램(Food Stamps and Meal Program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 기존 식품지원제도 대상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충영양프로그램 대상자들에게 지원 금액 증액 지급</li> </ul>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무료급식 아이들에게 도시락 제공을 통해 집에서 식사 가능</li> </ul>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 프로그램 온라인 등록 시스템 마련</li> </ul>                                         |

| 지원사업                                                                             | 지원 대상         | 개요                                                                                                                                              |
|----------------------------------------------------------------------------------|---------------|-------------------------------------------------------------------------------------------------------------------------------------------------|
| 영유아와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영양 프로그램(WIC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 |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강한 식품을 제공하고, 건강 및 복지서비스 등에 대한 상담 제공</li> </ul>                                                          |
| 아동 학교 무상 급식(Free School Meals for Children),                                     |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점심 제공 프로그램 (The National School Food Program)</li> </ul>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침 제공 프로그램 (The School Breakfast Program),</li> </ul>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유 급식 프로그램 (Milk to children at school),</li> </ul>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름 방학 음식제공 프로그램 (Summer Food Service Program)</li> </ul>                                                 |
| 노년층을 위한 무료 급식 프로그램(Free Food Programs for Seniors),                              | 저소득층 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년층 파머스마켓 영양 프로그램(Seniors Farmers' Market Nutrition Program): 노인들이 파머스마켓에서 신선한 음식을 살 수 있도록 지원</li> </ul>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달 식품을 배달해 주는 식품보충 프로그램 (Commodity Supplemental Food Program): 매달 식품꾸러미를 집으로 배달</li> </ul>               |
| 긴급사태 대응 보충영양프로그램(D-SNAP Helps With Food Costs After a Declared Disaster)         | 긴급재난지역 거주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신의 거주 지역이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을 경우 긴급으로 음식을 보충영양프로그램(SNAP)의 한달 정도의 금액을 지원</li> </ul>                             |

자료: USA. gov <https://www.usa.gov/food-help#item-213705>

이계임 외. 2017

## 나. 일본의 영양 및 식품 지원제도

- 일본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농림수산성에 “푸드뱅크”와 “학교급식우유 지원사업”을 제공하고, 후생노동성은 “생활보호제도”, “생활곤궁자립지



원제도”, “아동부양수당”, “어린이 생활·학습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문부과학성에서는 “학생중식지원사업”을 수행함

- 일본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푸드뱅크”, “모자영양식품 지원사업”, “어린이 지원사업”, “일시 생활지원사업”, “고령자 대상 배식서비스” 등의 사업을 시행 중임
- 푸드뱅크는 생활지원을 필요로 하는 개인에게 음식(조리식품, 통조림, 면류, 곡류, 채소, 과일 등)을 제공
- 학교급식우유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가구의 우유급식비용 지원하고, 낙농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농림수산성에서 시행
- 후생노동성은 직접적으로 식품을 지원하는 대신, 식품비를 지원하는 방식 시행
- 생활보호제도는 최저생계비에서 소득을 뺀 차액을 보호비용으로 지원하는 제도
- 생활곤궁자자립지원제도는 현재 생활보호를 받지 않지만,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3개월에서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
  - 식품지원관련 사업은 “생활곤궁자 일시 생활지원사업”으로 일정기간의 숙박, 식사, 의류 및 기타 일상 용품을 대여하거나 제공
- 아동부양수당은 한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해 수당 지급
- 어린이생활·학습지원사업은 한부모 가정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방과 후 식사 제공
- 문부과학성은 학생중식지원사업을 통해 “요보호자<sup>2)</sup>”와 “준보호자”가구 아동에게 중식비 제공
- 일본 지방정부에서 시행하는 모자영양식품지원 사업은 임산부 및 1세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우유를 지급

---

2) “요보호자”와 “준보호자”는 각각 한국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함

- 어린이 식사지원사업은 대부분 민간에서 운영되는데, 지자체에서 어린이 식당 등을 마련하는데 교부금을 지원하는 곳이 증가하는 추세임
- 고령자 대상 배식서비스는 자치단체가 직영 또는 민간업체 위탁을 통해 일상적인 식사가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식사를 제공

〈표 2-7〉 일본의 영양 및 식품지원제도

| 지원사업            | 지원 대상                  | 개요                                                 |
|-----------------|------------------------|----------------------------------------------------|
| 푸드뱅크            | 생활지원을 필요로 하는 개인        | • 개인, 농가, 제조업체에서 식품을 제공받아, 개인에게 지원                 |
| 학교급식 우유지원사업     | 저소득층 가구                | • 저소득가구의 우유급식<br>• 비용 보조 및 낙농산업 진흥                 |
| 생활보호            | 생활보호대상자                | • 최저생계비에서 소득을 뺀 차액을 지원                             |
| 생활곤궁자 일시 생활지원사업 | 생활곤궁자                  | • 일정기간 숙박, 식사, 의류 및 일상용품을 대여하거나 제공                 |
| 아동부양수당          | 한부모 가정                 | • 가정의 생활안정·자립                                      |
| 어린이 생활·학습 지원사업  | 한부모 가정 어린이             | • 방과 후 식사 제공                                       |
| 학생중식지원사업        | 요보호자 및 준보호자 가구 아동      | • 학기 및 방학 중 중식지원                                   |
| 모자영양식품지원사업      | 임산부 및 영유아              | • 우유 또는 분유 지원                                      |
| 어린이 지원사업        | 지역의 어린이                | • 대체로 민간 운영<br>• 지자체에서는 어린이 식당 등의 공간 마련을 위한 교부금 지원 |
| 고령자대상 배식서비스     | 일상적인 식사가 어려운 고령자 및 장애인 | • 자치단체가 직영 또는 민간업체 위탁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식사 제공           |

자료: 이계임 외. 2017

## 다. EU의 극빈층 지원제도

- EU는 1987년에서 2013년까지는 유럽연합 지역사회 극빈층 식품분배 프로그램 (MDP: Food Distribution Programme for the Most Deprived Persons of the Community)가 시행되었으나, 2014년부터 유럽 극빈자 지원기금(FEAD: Fund for European Aid to the Most Deprived)로 변형

- 유럽 극빈자지원자금은 EU 회원국들이 극빈자에게 음식과 필수품을 보급하는 것을 지원<sup>3)</sup>
  - 지원 품목에는 음식, 의류 및 비누와 신발 등의 개인 필수품이 포함
  - 물질적인 지원과 사회적 통합을 유도하는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각 회원국은 극빈자가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비물질적 지원도 함
  - 극빈자지원자금을 통해, 빈곤과 사회적 배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걸음을 도움
-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여, 2014-2020년의 FEAD 기금은,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투자 이니셔티브 플러스 (CRII+: Coronavirus Response Investment Initiative Plus) 패키지의 일부로 2022년까지의 추가 지원 예정
- 식료품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닌, 극빈자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비물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임(이계임 외 2017)

---

3) European Commission 홈페이지:  
<https://ec.europa.eu/social/main.jsp?catId=1089&langId=en>



# 3

## 장

# 먹거리 돌봄의 실태

---

제1절 먹거리 취약계층 실태

제2절 먹거리 보장 프로그램

제3절 전라북도 먹거리 돌봄 관련 공무원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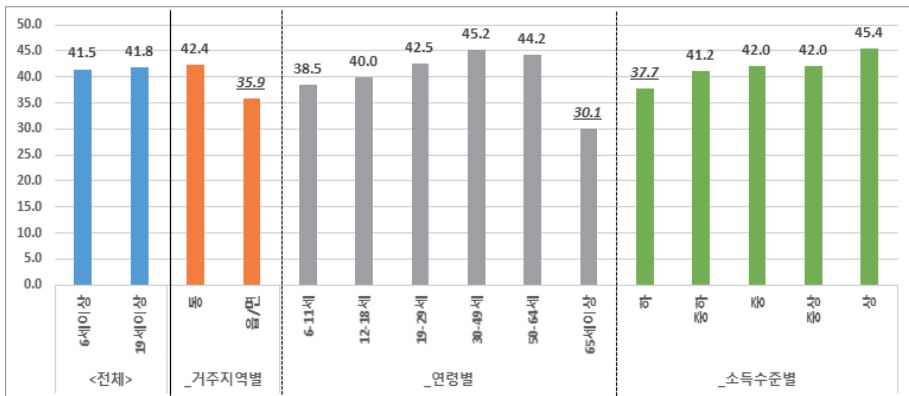


## 제3장 먹거리 돌봄의 실태

### 제1절 먹거리 취약계층 실태

- 하루에 섭취하는 전체 칼로리 중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이 15-25%인지 (지방 지표), 나트륨 섭취량이 2000mg 이하인지(나트륨 지표), 과일/채소 섭취량이 500g 이상인지(과일/채소 지표), 가공식품을 살 때 영양표시를 확인하는지(영양표시 지표) 등 네 지표 중 둘 이상을 만족하는 ‘건강식생활실천율’을 보면 41.8%로 절반이 채 되지 못함
  - 연령대를 아동·청소년기까지 포함해서 살펴보면, 41.5%로 낮아짐
  - 건강식생활실천율은 거주지역별로는 농촌지역,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노령층, 그리고 6~11세 아동,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수준이 낮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더욱 낮은 상황임
- 이러한 잘못된 식습관 등 먹거리와 관련된 질병으로 추정되는 비만, 당뇨, 고혈압 등의 유병률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먹거리에 기인한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다(이수행·박정지,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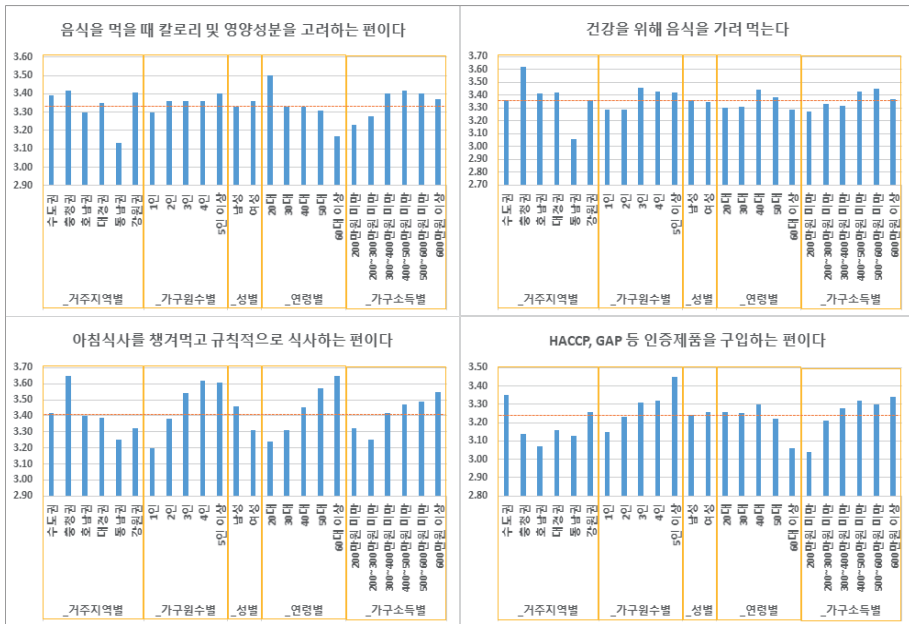
〈그림 3-1〉 전국 건강식생활실천율(2018)



주) 건강식생활실천율: 지방, 나트륨, 과일 및 채소, 영양표시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을 만족하는 분율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2018).

- 평소 식생활 스타일에 대한 자가 평가(5점만점)를 살펴보면, “음식을 먹을 때 칼로리 및 성분을 고려함”, “건강을 위해 음식을 가려먹음”, “아침 식사를 챙겨먹고 규칙적으로 식사함”, “식품인증 제품 구입함” 등의 평가에서 지역별로는 호남권, 가구원수별로는 1인가구,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가구소득별로는 저소득층 가구에서 대체적으로 낮게 나타나, 취약계층 먹거리 돌봄 마련이 필요

〈그림 3-2〉 전국 식생활 스타일 문항별 자가 평가(202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가공식품소비자태도조사(2020).

- 에너지 섭취량이 필요추정량(또는 영양권장량)의 75% 미만이면서, 칼슘, 철, 비타민A, 리보플라빈의 섭취량이 영양권장량의 75% 미만인 분율을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청소년(17.6%)과 노령층(14.4%)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임
- 특히, 소득수준 상위그룹이 10.5%였던 반면, 소득수준 하위그룹에서는 16.3%로 나타나 약 6%p 차이가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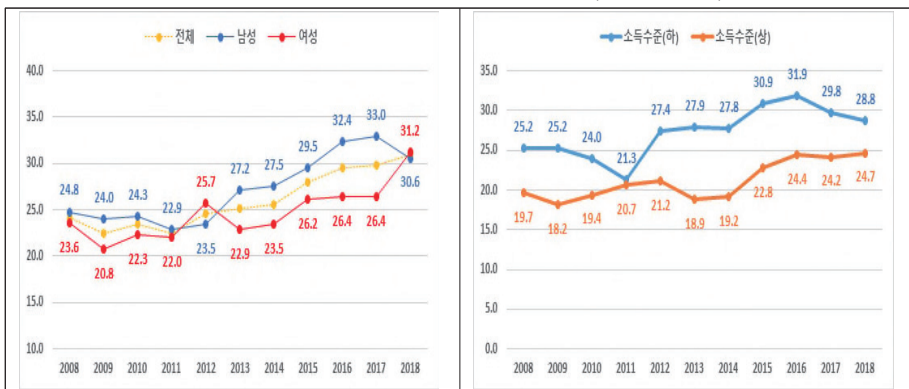
〈그림 3-3〉 전국 취약계층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2018)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2018).

- 아침식사 결식률은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추이를 보이거나 여성의 경우, 2017년 대비 2018년 크게 증가하여 남성보다 높게 나타남.
-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결식률이 높아짐

〈그림 3-4〉 전국 아침식사 결식률 추이(2008~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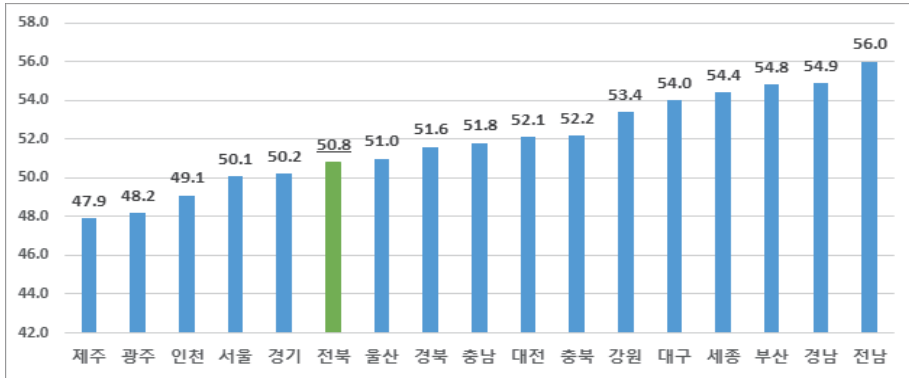
주) 아침식사 결식률: 조사 1일전 아침식사를 결식한 비율.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2008~2018).

- 한편, 최근 1년간 아침식사를 일주일에 5회 이상 먹은 사람의 비율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남이 56.0%로 아침결식 예방인구 비율이 가장 높았고, 제주가 47.9%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전라북도의 경우 50.8%로 전체 도민의 약 절반가량만 아침식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장 높게 나타난 전라남도에 비해서는 약 -6%p 낮음.
- 서울을 비롯한 주요 특·광역시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며, 자치도 중에서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3-5〉 전국 시도별 아침결식 예방인구 비율(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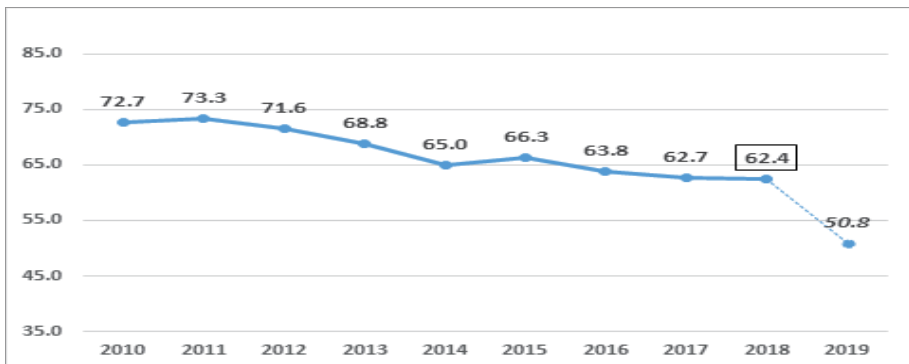
주1) 아침결식 예방인구: 최근 1년간 아침식사를 일주일에 5회 이상 먹은 사람의 비율.

주2) 표준화율 기준임. 표준화율은 지역간 비교를 위해 인구구성 차이에 따른 영향을 표준인구로 보정한 결과임.

자료: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2019).

- 전라북도의 아침결식 예방인구 비율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0년 72.7%에서 2018년 62.4%로 -10.3%p 감소

〈그림 3-6〉 전북 연도별 아침결식 예방인구 비율 추이(2010~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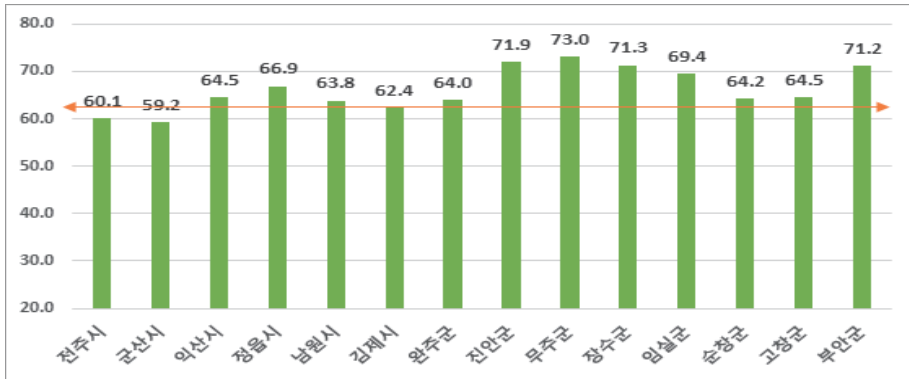
주1) 아침결식 예방인구: 최근 1년간 아침식사를 일주일에 5회 이상 먹은 사람의 비율.

주2) 해당 문항은 2010년부터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2019년 문항 변경으로 시계열 단절.

자료: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2010~2018).

- 2018년을 기준으로 전북 14개 시·군별로 살펴보면, 전주시(60.1%), 군산시(59.2%), 김제시(62.4%) 등이 전북 평균(62.4%) 이하로 나타남
- 그 외 대체적으로 군 지역에서 아침식사가 시 지역보다 높은 경향을 보여, 진안군(71.9%), 무주군(73.0%), 장수군(71.3%), 부안군(71.2%) 등은 70%를 상회

〈그림 3-7〉 전북 시·군별 아침결식 예방인구 비율(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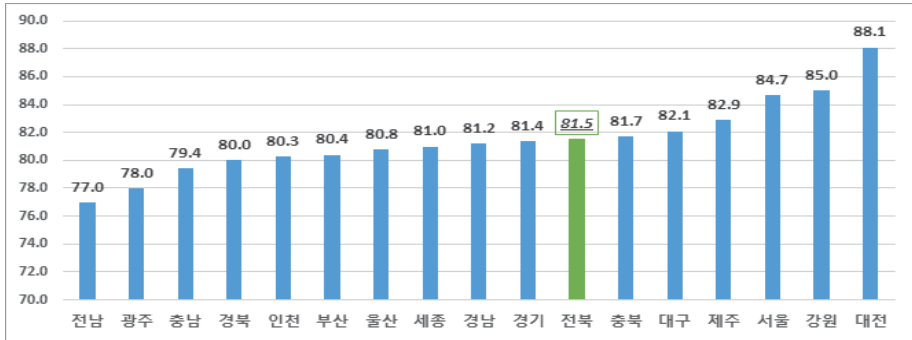


주) 아침결식 예방인구: 최근 1년간 아침식사를 일주일에 5회 이상 먹은 사람의 비율.

자료: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2018).

- 먹거리의 영양표시를 읽는 사람 중 영양표시 내용이 가공식품을 사거나 고를 때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을 살펴보면, 대전이 88.1%로 가장 높았고, 전남이 77.0%로 가장 낮음
- 전북의 경우 81.5%로 전국에서 7번째로 높은 편이었고, 전북도민 100명 중 약 82명은 영양성분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보여짐

〈그림 3-8〉 전국 시도별 영양표시 활용률(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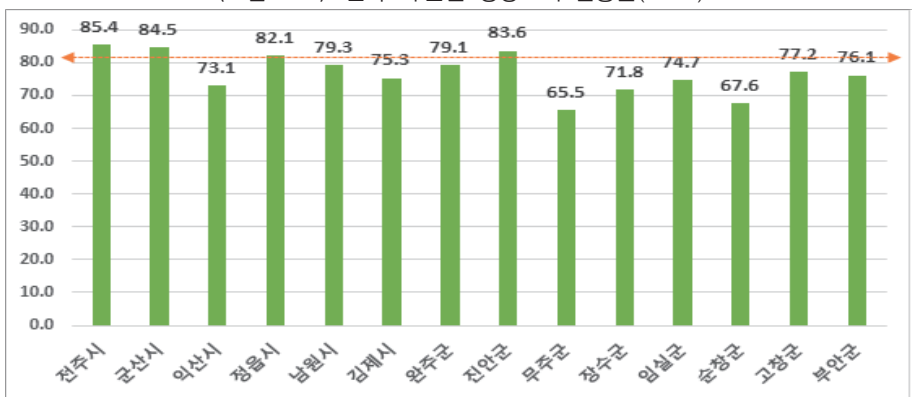


주) 영양표시 활용률: 영양표시를 읽는 사람 중 영양표시 내용이 가공식품을 사거나 고를 때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자료: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2019).

- 2019년을 기준으로 전북 14개 시·군별로 살펴보면, 전주시가 85.4%로 가장 높았던 반면, 무주군이 65.5%로 가장 낮음
- 시 지역의 평균은 80.0%, 군 지역의 평균은 74.5%로 대체적으로 영양표시 활용률은 시 지역에서 높은 경향을 보였고, 군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여 아침결식 예방인구 비율과는 반대의 양상이 나타남
- 시 지역에서는 물리적 끼니의 횟수보다는 먹거리의 질적 측면을 좀 더 중시하는 것으로 추측 가능

〈그림 3-9〉 전북 시·군별 영양표시 활용률(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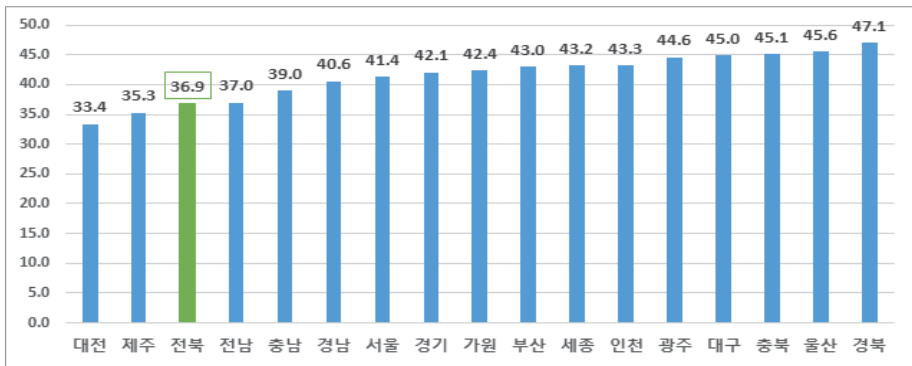


주) 영양표시 활용률: 영양표시를 읽는 사람 중 영양표시 내용이 가공식품을 사거나 고를 때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자료: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2019).

- 평소 식습관 혹은 조리음식 등에서 저염을 선호하는 사람의 비율을 살펴보면, 경북이 47.1%로 가장 높았고, 대전이 33.4%로 가장 낮게 나타남
- 호남·제주권역에서도 저염선호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북의 경우 저염선호율이 36.9%로 전국에서 3번째로 낮았으며, 가장 높게 나타난 경북(47.1%)과는 약 10%p 차이를 보임
- 전북도민 100명 중 불과 37명만이 저염식 먹거리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이를 다시 14개 시·군별로 살펴보면, 전주시(41.1%)와 남원시(40.4%)가 저염선호율이 가장 높았고, 익산시(26.9%)와 순창군(28.3%)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
- 저염선호율은 시 지역과 군 지역이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시 지역은 평균은 36.4%, 군 지역은 35.4%로 시 지역이 조금 더 높음

〈그림 3-10〉 전국 시·도별 저염선호율(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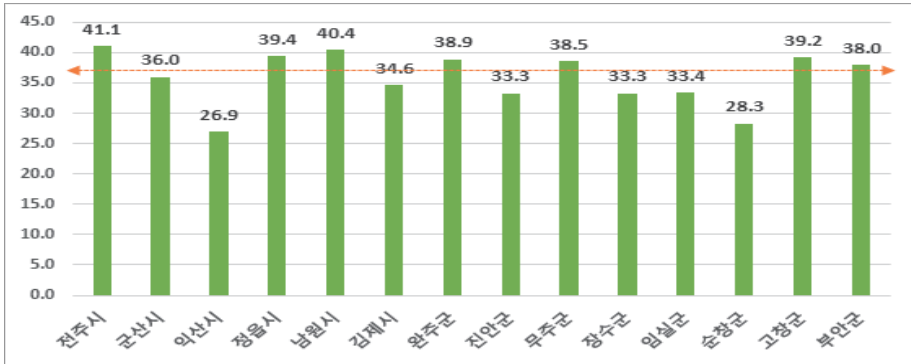


주1) 저염 선호율: 평소 식습관, 조리음식 등에서 저염을 선호하는 사람의 비율.

주2) 표준화율 기준임. 표준화율은 지역간 비교를 위해 인구구성 차이에 따른 영향을 표준인구로 보정한 결과임.

자료: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2019).

〈그림 3-11〉 전북 시·군별 저염 선호율(2019)



주1) 저염 선호율: 평소 식습관, 조리음식 등에서 저염을 선호하는 사람의 비율.

주2) 표준화율 기준임. 표준화율은 지역간 비교를 위해 인구구성 차이에 따른 영향을 표준인구로 보정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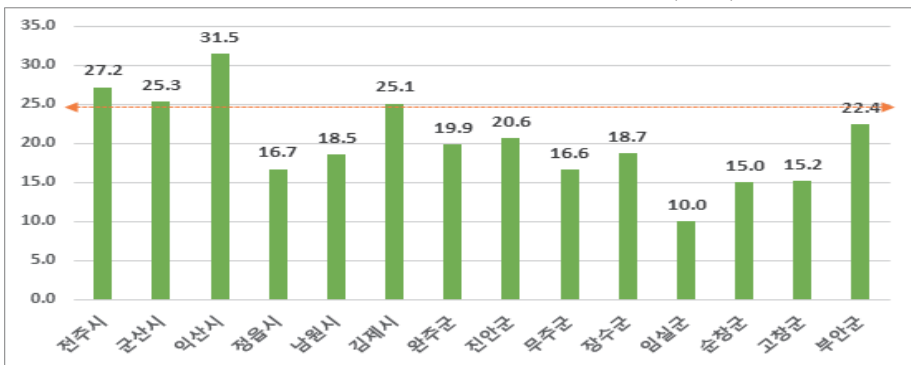
자료: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2019).

○ 전북도민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살펴보면, 도민의 24.7%가 먹거리에 대해 불안감(매우불안+불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여, 전북도민 100명 중 약 25명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시·군별로는 익산시가 31.5%로 가장 높았고, 임실군이 10.0%로 가장 낮음

- 전반적으로 군 지역보다는 시 지역에서 불안감이 더 높은 경향을 보여, 시 지역의 평균은 24.1%, 군 지역의 평균은 17.3%로 시 지역이 +6.8%p 더 높게 나타남

〈그림 3-12〉 전북 시·군별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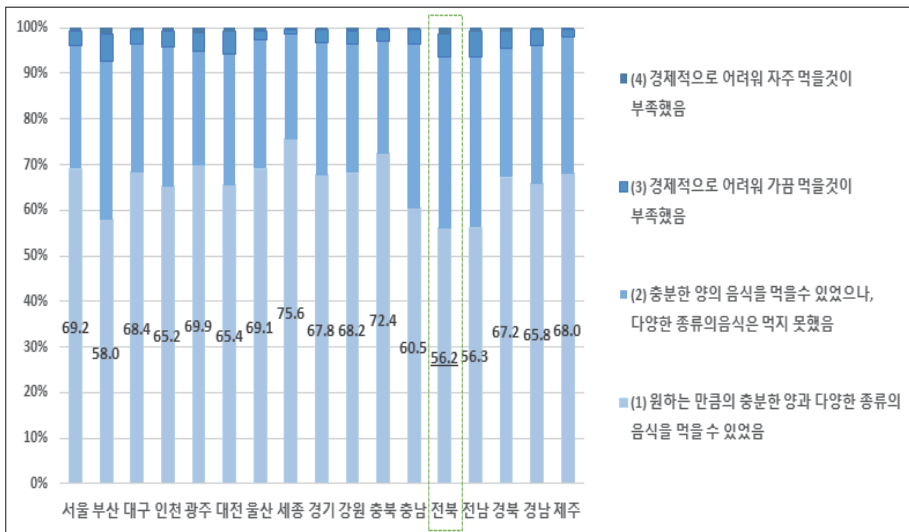


주) 불안감: 먹거리 안전에 대해 '매우불안+불안' 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자료: 전라북도, 전라북도사회조사(2019).

-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먹거리의 절대적인 양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구 비중은 전국 4.1%였으며, 시도별로는 부산(7.2%), 전남(6.5%), 전북(6.4%)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양과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비율은 세종이 75.6%로 가장 높았고, 전라북도가 56.2%로 가장 낮게 응답해, 전북의 식생활 문제를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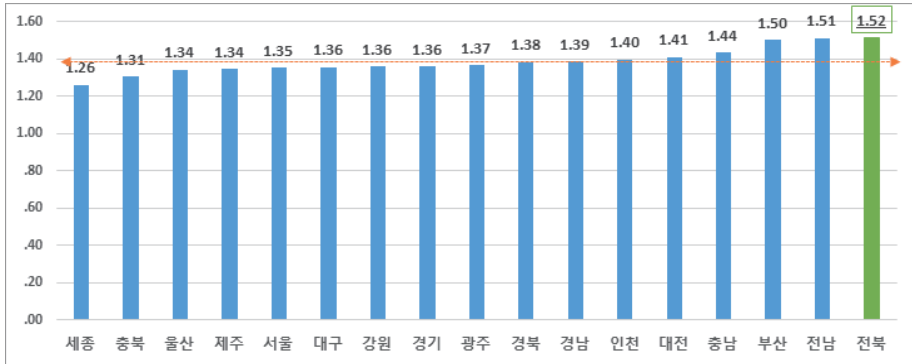
〈그림 3-13〉 전국 시도별 식생활 형편(2019)



자료: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2019).

- 한편, 시도별 식생활 형편에 대해 좀 더 명료하게 살펴보기 위해 문항을 4점의 등간격[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양과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을 수 있음(1점) ~ 경제적으로 어려워 자주 먹을 것이 부족함(4점)]이라 가정해 보면, 전국 평균은 1.39점으로 나타난 가운데, 시도별로는 전북이 1.52점으로 어려움 정도가 가장 높았고, 세종이 1.26점으로 가장 낮음

〈그림 3-14〉 전국 시도별 식생활 형편 어려움 정도(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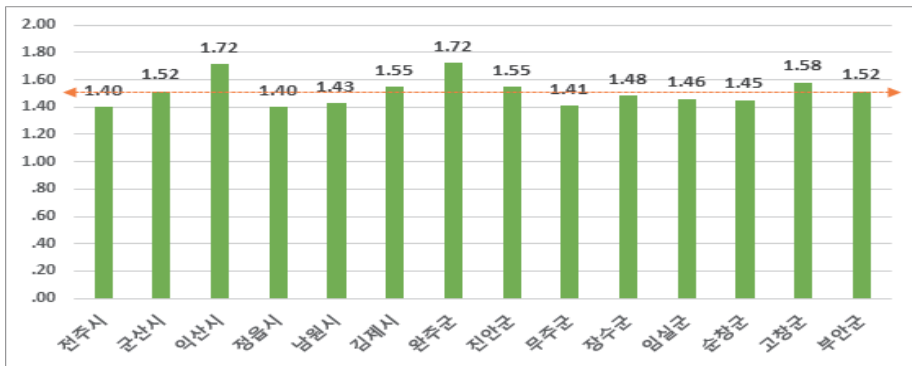
주) 점수가 높을수록 어려움을 겪는 정도가 높음 (4점기준)

자료: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2019).

- 전라북도의 식생활 형편의 어려움 정도를 14개 시·군별로 살펴보면, 익산시와 완주군이 각 1.72점으로 가장 어려움이 높았던 반면, 전주시와 정읍시가 1.4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고창군 등의 지역은 전북 평균(1.52점)을 상회

〈그림 3-15〉 전북 시·군별 식생활 형편 어려움 정도(2019)



주) 점수가 높을수록 어려움을 겪는 정도가 높음 (4점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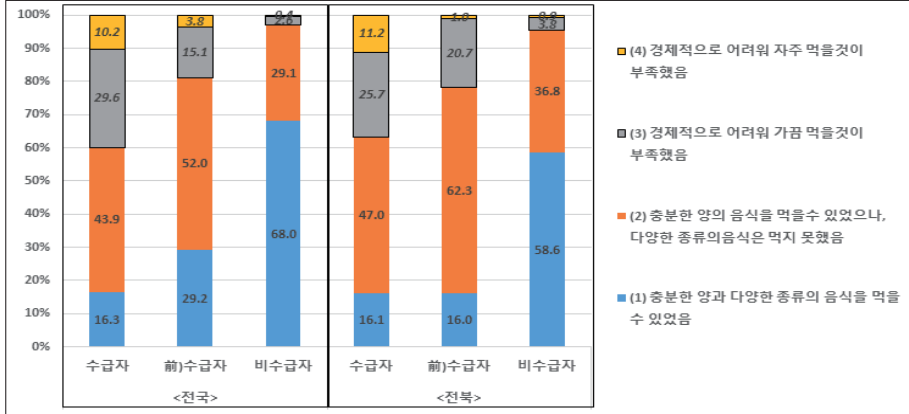
자료: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2019).

- 전북도민 가운데 경제적 취약계층일수록 먹거리 상황이 더욱 열악하여, 비수급자의 경우 영양섭취 부족자 비중이 4.6%에 불과했던 반면, 수급자의 경우 약 9배가 높은 36.9%에 달하였고,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2.9%p 낮음



- 현재 전복 수급자의 경우, 경제 사정상 가끔 먹을 것이 부족 25.7%, 자주 먹을 것이 부족이 11.2%임

〈그림 3-16〉 전국 및 전북의 취약계층 영양섭취 부족자 비중(2019)



자료: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2019).

〈표 3-1〉 전라북도 시군별 기초생활수급자 현황(2019)

| 구분  | 기초수급자(명) | 인구대비 비율 | 장애인(명)  | 인구대비 비율 | 독거노인(명) | 가구대비 비율 |
|-----|----------|---------|---------|---------|---------|---------|
| 고창군 | 3,143    | 5.7%    | 5,643   | 10.2%   | 4,863   | 20.6%   |
| 군산시 | 15,560   | 5.8%    | 17,889  | 6.7%    | 9,601   | 8.8%    |
| 김제시 | 7,312    | 8.7%    | 9,417   | 11.3%   | 6,206   | 17.9%   |
| 남원시 | 6,292    | 7.7%    | 7,812   | 9.6%    | 5,400   | 16.3%   |
| 무주군 | 1,291    | 5.3%    | 2,505   | 10.3%   | 1,914   | 18.7%   |
| 부안군 | 3,152    | 5.9%    | 5,260   | 9.9%    | 4,250   | 19.1%   |
| 순창군 | 1,587    | 5.6%    | 2,990   | 10.6%   | 2,344   | 20.2%   |
| 완주군 | 5,090    | 5.5%    | 8,043   | 8.7%    | 3,717   | 9.8%    |
| 익산시 | 18,727   | 6.5%    | 20,478  | 7.2%    | 10,994  | 9.3%    |
| 임실군 | 1,798    | 6.2%    | 3,183   | 11.3%   | 2,398   | 20.1%   |
| 장수군 | 1,319    | 5.9%    | 2,364   | 10.6%   | 1,759   | 19.1%   |
| 전주시 | 31,339   | 4.8%    | 33,743  | 5.2%    | 17,364  | 6.8%    |
| 정읍시 | 7,909    | 7.2%    | 10,179  | 9.2%    | 7,246   | 15.9%   |
| 진안군 | 1,436    | 5.6%    | 2,808   | 11.0%   | 2,028   | 19.5%   |
| 합계  | 105,955  | 5.8%    | 132,314 | 7.3%    | 80,084  | 10.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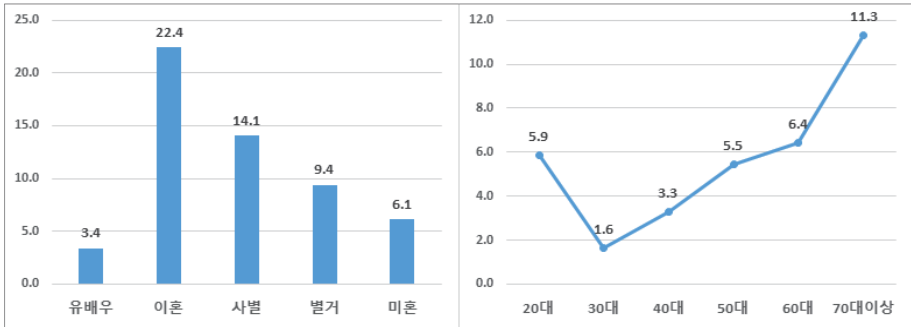
주) 기초수급자수 2019년, 장애인수 2020년 2월, 독거노인수 2018년 기준.

자료: 배균기 2020, 전라북도 홈페이지 사회복지과·노인장애인과 공개자료(2020), 인구총조사(2019)

○ 전북도민의 혼인상태 및 연령대별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을 살펴보면, 우선 혼인상태별로는 ‘이혼’가구에서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이 22.4%, 사별 14.1% 순으로 높았고, 이혼가구는 유배우(3.4%) 가구에 비해 약 7배가 더 높음

- 연령별로는 20대에 5.9%였다가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30-40대에 감소하였다가 60대부터 증가하여 70대에는 11.3%까지 상승하는 모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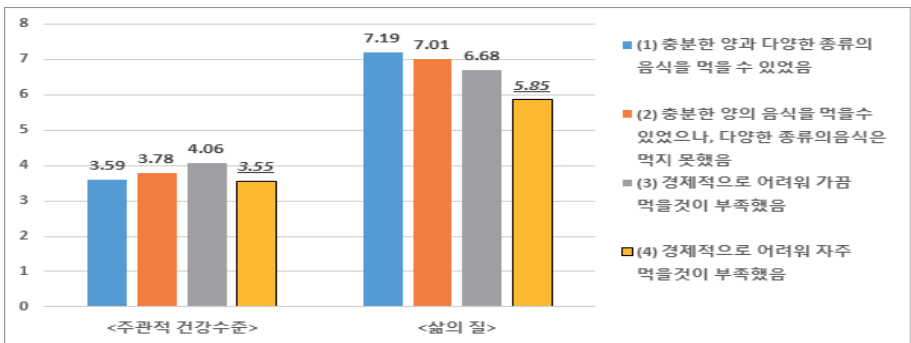
〈그림 3-17〉 전북 혼인상태 및 연령대별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2019)



주)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 경제사정으로 인해 가끔 또는 자주 먹을것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  
자료: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2019).

○ 전북도민의 식생활 형편은 주관적 건강 수준과 삶의 질에도 영향을 주어, 경제적으로 어려워 자주 먹을 것이 부족한 그룹의 건강 수준과 삶의 질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8〉 전북 식생활형편에 따른 주관적 건강수준과 삶의질(2019)



주1) 주관적 건강수준: 평소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평가. 매우나쁨(1)~매우좋음(5)

주2) 삶의 질: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본인의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에 대해 매우불만족(1)~매우만족(10)

자료: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2019).

## 제2절 먹거리 보장 프로그램

- 우리나라의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정책은 크게 복지관련 정책과 건강관련 지원정책으로 구분 가능(황영모 외 2020: 237)
  - 복지관련 지원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복지용 쌀 공급(정부양곡 할인지원), 우유무상급식지원,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 아동급식지원, 노인급식지원등을 볼 수 있음
  - 건강관련 지원으로는 영양플러스사업(임산부/영유아 대상), 저소득층 어린이·청소년 건강과일바구니 사업, 학교기반 건강과일바구니 사업, 실버 건강 식생활사업 등을 들 수 있음
- 최근에는 생애주기에 따른 돌봄의 관점으로 분류되어 임산부 및 영유아, 어린이 및 청소년, 일반성인, 노인, 기타 등으로 요약정리되고 있음. 중앙정부 추진 돌봄정책은 주로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각각의 관련 법률은 여러 정부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소관이 나누어져 있음. 먹거리 돌봄과 관련된 주요 법률은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영양관리법」, 「아동복지법」,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노인복지법」, 「사회보장기본법」 등이 있음

〈표 3-2〉 생애주기별 먹거리 돌봄 관련 정책사업

| 구분        | 주요 정책사업                                                                                                         | 관련 법률                                                                                                                                           |
|-----------|-----------------------------------------------------------------------------------------------------------------|-------------------------------------------------------------------------------------------------------------------------------------------------|
| 임산부 및 영유아 | - 영양플러스사업<br>- 어린이집/유치원 기반 영양관리사업                                                                               | · 국민건강증진법(제3조, 제6조, 제15조, 제19조)<br>· 국민영양관리법(제3조, 제10조, 제11조)                                                                                   |
| 어린이 및 청소년 | - 결식아동 지원프로그램<br>- 저소득층 어린이*청소년 대상 건강과일바구니 사업<br>- 학교기반 건강과일바구니 사업<br>-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협력<br>-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 · 아동복지법(제35조, 시행령 제36조)<br>· 국민건강증진법(제3조, 제6조, 제15조, 제19조)<br>· 국민영양관리법(제3조, 제10조, 제11조)<br>·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br>·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침 |
| 일반성인      | - 건강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맞춤형 영양관리사업                                                                                      | · 국민건강증진법(제3조, 제6조, 제15조, 제19조)<br>· 국민영양관리법(제3조, 제10조, 제11조)                                                                                   |
| 노인        | - 어르신 영양관리사업<br>- 실버건강식생활사업(취약계층)<br>- 결식우려 노인급식프로그램                                                            | · 국민건강증진법(제3조, 제6조, 제15조, 제19조)<br>· 국민영양관리법(제3조, 제10조, 제11조)<br>· 노인복지법(제4조)                                                                   |
| 기타        | - 다문화가족 영양관리사업<br>- 저소득층 지원프로그램(푸드뱅크, 푸드마켓)<br>- 농식품바우처 지원(시범)사업                                                | · 국민건강증진법(제3조, 제6조, 제15조, 제19조)<br>· 국민영양관리법(제3조, 제10조, 제11조)<br>·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4조)<br>· 사회보장기본법(제22조)                                      |

- 취약계층 대상 주요 먹거리 지원 프로그램의 예산을 살펴보면, 노인급식(경로식당, 식사배달)을 제외하고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매칭으로 구성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지원, 정부양곡할인, 영양플러스 사업 등은 중앙정부 예산 비중이 높은 편임

〈표 3-3〉 취약계층 대상 주요 먹거리 지원제도 예산 비중

| 제도명        | 예산총액(2016년)   | 예산비중(2016년) | 비중   |      |      |      |
|------------|---------------|-------------|------|------|------|------|
|            |               |             | 중앙정부 | 광역   | 기초   | 민간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1,528,390,452 | 78.6        | 81.1 | 11.9 | 7.0  | -    |
| 긴급지원(생계지원) | 35,823,332    | 1.8         | 77.2 | 9.0  | 13.8 | -    |
| 정부양곡할인지원   | 71,067,765    | 3.7         | 86.0 | 6.5  | 7.5  | -    |
| 노인급식       | 경로식당          | 54,349,770  | 2.8  | -    | 49.8 | 50.1 |
|            | 식사배달          | 36,793,129  | 1.9  | -    | 44.3 | 55.7 |
|            | 소계            | 91,142,899  | 4.7  | -    | 47.3 | 52.6 |
| 결식아동 급식지원  | 189,207,939   | 9.7         | 3.1  | 50.3 | 46.6 | -    |
| 영양플러스      | 26,671,555    | 1.4         | 43.1 | 17.4 | 39.4 | 0.1  |
| 건강과일바구니    | 1,113,415     | 0.1         | 16.8 | 49.4 | 33.8 | -    |
| 합계         | 1,943,417,357 | 100.0       | 69.3 | 17.1 | 13.6 | 0.0  |

## 가. 결식아동지원프로그램

-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의 아동급식 지원사업이 중심(보건복지부 2021a)
  -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 지원을 통한 결식 예방 및 영양개선을 목적으로 함
  - 지원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는 조식, 석식, 토·공휴일 및 방학 중 중식지원을 담당하고, 교육청은 학기 중 중식을 학교 급식을 통해 지원
  - 「아동복지법」 제 35조 (건강한 심신의 보존) 제2항 제3호 및 제4항에 따라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을 지원
  - 2000년 아동급식(석식) 사업을 시작으로, 2001년부터 조식지원, 2004년부터 방학, 토·공휴일 중 취학아동 중식지원 사업을 교육부에서 주관, 겨울방학 중식 지원 대상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급식단가를 올려 2021년 6,000원 이상으로 조정
  - 지원대상: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등의 아동

△ 결식이 발견 되는 우려되는 아동\*\*

△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등 추천에 따라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정

〈표 3-4〉 연도별 아동급식 지원대상 아동

(단위: 명, %)

| 연도   | 계       | 기초             | 차상위            | 기타*            |
|------|---------|----------------|----------------|----------------|
| '15년 | 426,594 | 145,400(34.1%) | 112,591(26.4%) | 168,603(39.5%) |
| '16년 | 385,597 | 193,245(50.1%) | 38,078(9.9%)   | 154,274(40.0%) |
| '17년 | 364,079 | 176,564(48.5%) | 32,503(8.9%)   | 155,012(42.6%) |
| '18년 | 357,127 | 171,494(48.0%) | 30,608(8.6%)   | 155,025(43.4%) |
| '19년 | 330,014 | 162,754(49.3%) | 27,080(8.2%)   | 140,180(42.5%) |
| '20년 | 308,440 | 166,198(53.9%) | 20,676(6.7%)   | 121,566(39.4%) |

출처: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보건복지부 2021a

\*한부모, 긴급복지, 중위소득 52% 이하, 지역아동센터·복지관 이용

## ○ 급식제공 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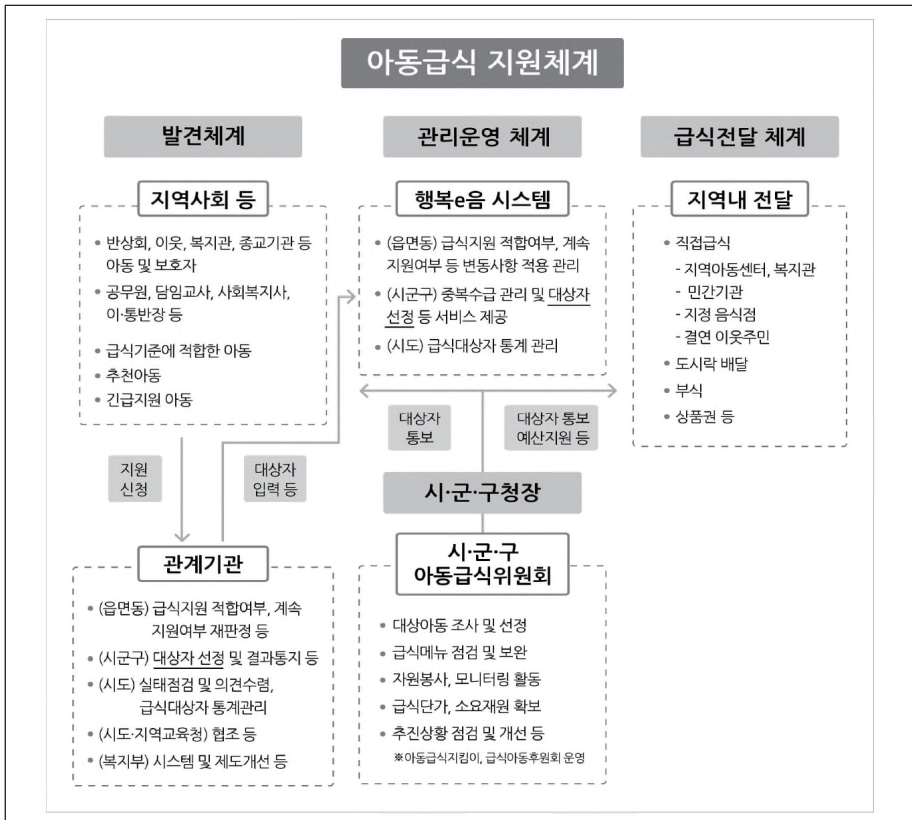
- 취학아동의 경우 연중 조·석식은 지방자치단체, 학기 중 중식은 교육청(학교급식)으로 지원
-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은 교육청으로부터 시·도교육비 특별회계를 지원받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
- 방학 중 중식 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표 3-5〉 학기에 따른 급식제공 주체

| 학기 중   |     |        |     | 방학중    |
|--------|-----|--------|-----|--------|
| 평일     |     | 토·공휴일  |     |        |
| 조·석식   | 중식  | 조·석식   | 중식  | 조·중·석식 |
| 지방자치단체 | 교육청 | 지방자치단체 | 교육청 | 지방자치단체 |

자료: 보건복지부 2021a: 27

〈그림 3-19〉 아동급식 지원체계 지원 흐름



자료: 보건복지부 2021a

### ○ 급식제공 유형

- 지원대상 아동 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아동의 영양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
- 기타 급식 제공유형
- 편의점 급식: 아동의 신체 발달을 고려, 영양가있는 도시락 등 식사 종류를 지원하기 위해 유해품목과 간식류, 안주류, 조미료, 비식품 등을 제외하고 모든 품목 구매 가능
- 부식지원: 지역 특성상 다른 급식 제공이 어려울 경우, 부식지원이 가능
- 식품권 지원: 오지, 산간벽지, 도서지역 등 급식 현물제공이 곤란한 경우 지원

〈표 3-6〉 급식제공 유형

| 급식유형   | 지정 대상 및 고려사항                                                                                                                                                                                                                                                                                                                                                                                                                                                                                                                                                                          |
|--------|---------------------------------------------------------------------------------------------------------------------------------------------------------------------------------------------------------------------------------------------------------------------------------------------------------------------------------------------------------------------------------------------------------------------------------------------------------------------------------------------------------------------------------------------------------------------------------------|
| 단체급식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지관, 대형업체 직원 식당을 사회 기여 차원에서 참여 유도</li> <li>·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종교 및 민간단체, 학교급식 시설 지정</li> <li>· 방학기간 중에는 특정 학교급식시설을 이용 협의</li> <li>※ 지자체가 지역교육청·학교와 협의하여 지역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정</li> </ul>                                                                                                                                                                                                                                                                                                                                                               |
| 일반음식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 메뉴에 편중하지 말고 다양한 메뉴의 음식점 지정·모범업소 및 협력음식점 지정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참여 유도</li> <li>* 지자체 내 위생과와 음식업협회 등 관련단체의 협조를 통해 추진</li> <li>· 지역 내 모든 일반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는 전자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제공</li> </ul>                                                                                                                                                                                                                                                                                                                                                                |
| 도시락 배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활근로사업(도시락배달사업), 공공근로사업 등을 아동급식사업과 연계</li> <li>* 자활근로인력을 급식 취사 및 배달인력으로 활용하여 추진</li> <li>· 지역·계절적 여건 및 대상아동의 의사(사전 수요조사)에 따라 밥·반찬 일체형 외에 반찬형도 가능</li> <li>· 도시락·반찬 등 배달의 경우 배달 장소 및 시간 등을 사전에 약속하여 분실 되거나 상온에 오래 방치되지 않도록 주의</li> <li>· 하절기 도시락 등 배달 시 음식이 부패되지 않도록 일일배달 및 직접인수</li> <li>· 급식지원 가정에서 사람이 없어 도시락 전달을 못 한 경우 하절기에는 약속된 장소 등에 도시락을 두고 오지 말고 차후에 다시 배달하여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li> <li>· 영양가 및 아동 취향 등을 고려하여 식단 운영하고, 아동의 정서교양을 위한 수단 병행(예) 희망을 주는 격언, 지역 시인의 도움을 받아 “사랑의 편지” 등을 동봉</li> <li>· 자원봉사자, 급식단체 등과 연계하여 원활하게 도시락 배달</li> </ul> |
| 기타     | · 그 밖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급식방법                                                                                                                                                                                                                                                                                                                                                                                                                                                                                                                                                            |

자료: 보건복지부 2021a: 28-9

〈표 3-7〉 급식제공 유형에 따른 장단점

| 구분            | 장점                                                                                             | 단점                                                                                                                                    |
|---------------|------------------------------------------------------------------------------------------------|---------------------------------------------------------------------------------------------------------------------------------------|
| 단체급식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 식사 제공</li> <li>· 전달 용이</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낙인현상 인식으로 급식률 저하</li> </ul>                                                                  |
| 도시락 배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변 노출 방지로 낙인감 해소</li> <li>· 완제품 배달로 높은 편의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송비용 추가소요</li> <li>· 보온·보냉 유지 어려움</li> <li>· 급식내용물 부실 가능</li> <li>· 하절기 식중독 사고 위험</li> </ul> |
| 부식 배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미에 맞는 조리하여 급식 가능</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리 가능자가 없을 경우 문제</li> <li>· 급식내용물 부실 우려</li> </ul>                                           |
| 아동급식카드, 식품권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식품 선택 가능</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양불균형 문제</li> <li>· 식품 외 물품 구입 등 전용우려</li> </ul>                                             |

자료: 보건복지부 2021a: 31

## 나. 결식우려 노인 급식프로그램

### 1) 노인 급식지원의 목적 및 지원기관

- 노인 급식지원의 목적: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기초수급자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그 이상의 일정한 능력을 갖춘 노인들에게는 실비로 식사를 제공(보건복지부, 2021c)
- 경로식당 무료급식,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등의 사업은 2005년부터 지방정부로 이양되면서, 지역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음

### 2) 급식대상 및 급식기관

#### 가) 경로식당 무료급식

-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 대상
- 경로식당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20인 이상, 주 3회 이상 급식을 하는 곳을 급식 기관으로 지정. 다만, 지역의 여건에 따라 이용자가 20인 이상 (읍·면지역은 10인 이상)이고, 주 1회 이상 급식을 하는 곳도 지원 가능
-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독거노인 포함)에게는 무료 제공하고, 그 이상의 일정한 능력을 갖춘 노인의 경우 실비 수준의 급식비 징수 가능

#### 나)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 **급식대상:**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미만인 가구의 60세 이상 노인으로서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 대상 및 기타 독거노인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노인



- 급식내용: 노인의 건강, 영양상태, 서비스 욕구 등을 고려하여, 밥, 국, 밑반찬, 죽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
- 많은 노인들이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 치료식(당뇨병, 고혈압)을 제공방안 모색 및 식생활 지도도 필요
-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독거노인 포함)에게는 무료로 제공하고, 그 이상의 일정한 능력을 갖춘 노인의 경우에는 실비수준의 급식비 징수 가능(보건복지부, 2020)

#### 다) 노인돌봄서비스사업과 연계

- 취약 노인을 대상으로 도시락 배달을 하는 경우, 노인들의 기본적인 건강상태 및 안전 여부를 확인하여,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지자체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수행기관에 통보하여 보호장치로 작동할 수 있도록 업무 협조

### 3) 전북지역의 노인급식 프로그램

- 전북지역의 무료경로식당은 총 50곳이 운영 중이나,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고, 주 1회를 지급하는 곳도 있어, 노인들이 급식으로 식사를 완전히 해결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표 3-8〉 무료경로식당 현황(2020년)

| 구분   | 사업기관명     | 운영기관명         | 급식일 |
|------|-----------|---------------|-----|
| 전라북도 | 전북노인복지관   | 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   | 주6회 |
| 전주시  | 서원노인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금산사복지원 | 주5회 |
| 전주시  | 기린봉노인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금산사복지원 | 주5회 |
| 전주시  | 안골노인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중부복지재단 | 주5회 |
| 전주시  | 노송천노인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중부복지재단 | 주5회 |
| 전주시  | 금암노인복지관   | 사단법인 나누는사람들   | 주6회 |
| 전주시  | 덕진노인복지관   | 사단법인 나누는사람들   | 주5회 |
| 전주시  | 양지노인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   | 주5회 |
| 전주시  | 꽃발정이노인복지관 | 이랜드복지재단       | 주6회 |

| 구분  | 사업기관명       | 운영기관명              | 급식일  |
|-----|-------------|--------------------|------|
| 전주시 | 전주종합사회복지관   | 전주종합사회복지관          | 주5회  |
| 전주시 | 평화종합사회복지관   | 평화종합사회복지관          | 주6회  |
| 전주시 | 학산종합사회복지관   | 학산종합사회복지관          | 주6회  |
| 전주시 | 전북불교회관      | 사회복지법인 금산사복지원      | 주6회  |
| 전주시 | 한국대학생선교회    | 한국대학생선교회           | 주5회  |
| 군산시 | 군산경로식당      | 사회복지법인 원봉공회        | 주7회  |
| 군산시 | 나온종합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 주5회  |
| 군산시 | 금강노인복지관     | 군장대학교 산학협력단        | 주5회  |
| 군산시 | 군산노인종합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 주5회  |
| 익산시 |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신광복지재단      | 주5회  |
| 익산시 | 부송종합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 주5회  |
| 익산시 | 솔솔송자원봉사대    | 솔솔송자원봉사대           | 주5회  |
| 익산시 | 신광노인복지센터    | 사회복지법인 신광복지재단      | 주5회  |
| 정읍시 | 정읍시노인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        | 주5회  |
| 정읍시 | 정읍시북부노인복지관  | 대한성공회유지재단          | 주5회  |
| 남원시 | 남원사회복지관     | 남원사회복지관            | 주6회  |
| 남원시 | 남원시노인복지관    | 남원시노인복지관           | 주5회  |
| 김제시 | 김제사회복지관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br>유지재단 | 주5회  |
| 김제시 | 김제제일사회복지관   | 김제제일사회복지관          | 주5회  |
| 김제시 | 김제노인종합복지관   | 대한성공회 유지재단         | 주5회  |
| 김제시 | 금구교회        | 금구교회               | 주 2회 |
| 완주군 | 구이노인복지센터    | 구이노인복지센터           | 주1회  |
| 완주군 | 운주노인복지센터    | 운주노인복지센터           | 주2회  |
| 완주군 | 화산교회        | 화산교회               | 주1회  |
| 진안군 |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 | 진안군                | 주5회  |
| 무주군 | 무주종합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 주5회  |
| 장수군 | 장수읍경로당      | 장수읍노인회             | 주1회  |
| 장수군 | 산서면경로당      | 산서면노인회             | 주1회  |
| 장수군 | 번암면경로당      | 번암면노인회             | 주1회  |
| 장수군 | 장계면경로당      | 장계면노인회             | 주1회  |
| 장수군 | 천천면경로당      | 천천면노인회             | 주1회  |
| 장수군 | 계남면경로당      | 계남면노인회             | 주1회  |

| 구분  | 사업기관명       | 운영기관명      | 급식일         |
|-----|-------------|------------|-------------|
| 장수군 | 계북면경로당      | 계북면노인회     | 주1회         |
| 임실군 | 임실군노인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 주3회         |
| 임실군 | 원불교오수교당봉공회  | 원불교오수교당봉공회 | 주5회         |
| 임실군 | 임실군북부권노인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 주3회         |
| 순창군 | 순창읍교회경로식당   | 순창읍교회      | 장날(1일,6일)   |
| 순창군 | 쌍치면분회경로당    | 쌍치면분회노인회   | 5일장날(4일,9일) |
| 순창군 | 순창천주교       | 순창천주교      | 주1회         |
| 고창군 | 고창원광노인복지센터  | 고창원광노인복지센터 | 주5회         |
| 부안군 | 대한노인회부안군지회  | 대한노인회부안군지회 | 주6회         |

자료: 전라북도 노인장애인과 공개자료(2020)

## 다. 영양플러스사업

- 영양플러스 사업 목적: 임산부 및 영유아 양육자를 대상으로 영양교육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 문제(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를 해소하고, 올바른 식생활을 유도하여 식생활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건강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함
- 영양평가를 후, 영양위험요인이 발견된 대상자에게 월 1회 이상의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보충식품패키지 제공
- 2005~2007년까지 시범사업 후, 2008년부터 전국 보건소로 확대하여, 2018년 총 8만 2,045명(영아 30,712명(37.4%), 유아 24,393명(29.7%), 임신부 8,169명(10.0%), 출산·수유부 18,771명(22.9%))에게 보충식품 제공 및 영양교육·상담서비스 제공

〈표 3-9〉 영양플러스 대상자 선정 기준

| 구분     | 내용                                                                |
|--------|-------------------------------------------------------------------|
| 대상     | 만 6세(72개월)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수유부                                   |
| 거주기준   | 사업 운영 보건소 관할지역 내 거주                                               |
| 소득 수준  | 기준중위소득 대비 80% 이하                                                  |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 요인 보유자 (사업 참여 6개월 후 재평가) |

자료: 보건복지부 2019

〈표 3-10〉 영양플러스사업의 주요내용

| 구분     | 내용                               |
|--------|----------------------------------|
| 핵심사업   | 영양 교육상담 서비스 및 보충식품 제공 (최대 1년)    |
| 교육방법   | 개별상담, 집단 교육, 가정방문 교육 (월 1회 이상)   |
| 보충식품공급 | 맞춤형 식품패키지(6종) 제공 (월 2회, 가정배달 원칙) |

자료: 보건복지부 2019

- 영양플러스 사업을 통해 빈혈 유병률이 현저히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고, 영양지식이나 영양태도 역시 향상됨

〈표 3-11〉 영양플러스 사업을 통한 영양개선 결과

| 번호 | 항목                   | 년도   | 수혜 전  | 수혜 후  | 비고       |
|----|----------------------|------|-------|-------|----------|
| 1  | 빈혈 유병률               | 2016 | 51.7% | 26.3% | 25.4%p ↓ |
|    |                      | 2017 | 51.5% | 26.4% | 25.1%p ↓ |
|    |                      | 2018 | 50.1% | 26.0% | 24.1%p ↓ |
|    |                      | 2019 | 47.6% | 23.9% | 23.7%p ↓ |
| 2  | 신체계측에 의한 성장불량 영유아 비율 | 2018 | 49.5% | 21.5% | 28.0%p ↓ |
| 3  | 영양소 섭취 적정도(MAR)      | 2018 | 0.73점 | 0.83점 | 0.1점 ↑   |
| 4  | 영양지식(10점)            | 2018 | 7.87점 | 8.32점 | 0.45점 ↑  |
| 5  | 영양태도(10점)            | 2018 | 8.29점 | 8.63점 | 0.34점 ↑  |

자료: 보건복지부 2019,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0

- 영양플러스 대상확대를 위한 노력도 강화: 다문화 가구용 과정(중국어, 베트남어) 총 10개 과정 개발 (2019)
- 영양플러스 사업 종료시 진행하는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수준을 보임

〈표 3-12〉 영양플러스 사업 만족도 (2018)

| 대상자 선정과정 | 보충식품 공급 | 영양교육 | 사업 전반적 질 | 사업 전반적 만족도 | 사업 신뢰도 | 총 만족도 (100점 환산) |
|----------|---------|------|----------|------------|--------|-----------------|
| 9.13     | 9.01    | 9.30 | 9.28     | 9.30       | 9.49   | 92.45           |

자료: 보건복지부 2019

- EBS육아학교 누리집(홈페이지)(<https://www.ebspin.co.kr/#home>)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영양플러스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표 3-13〉 2018 영양플러스사업 온라인 교육과정 개설과목

| 차시 | 제목                       | 세부 내용                                                             |
|----|--------------------------|-------------------------------------------------------------------|
| 1  | 모유수유 성공비결                | -모유수유의 효율성<br>-모유수유의 장점<br>-모유수유의 성공 조건<br>-모유수유의 기준선<br>-모유수유 기간 |
| 2  | 성공적인 모유수유를 위한 유방관리       | -모유수유를 위한 준비 과정<br>-유방관리 이론 및 실천 방법                               |
| 3  | 출산·수유부의 건강식생활            | -출산 후 영양관리의 중요성<br>-출산·수유부의 식생활 지침<br>-수유부의 건강 밥상 포인트             |
| 4  | 이유식 성공비결                 | -이유식 손쉽게 시작하기<br>-이유식 실천 요령<br>-이유식, 이런 것이 궁금해요                   |
| 5  | 유아식 성공비결<br>(다문화용 과정 개발) | -유아식 손쉽게 시작하기<br>-유아기 주요 영양문제와 대처 방법<br>-유아식, 이런 것이 궁금해요          |
| 6  | 영유아 변비 예방법               | -변비란?<br>-배변의 기전<br>-변비의 원인, 기능적 변비의 발생 원인<br>-변비의 예방 및 개선 방법     |

자료: 보건복지부 2019

#### ○ 영양플러스 사업 문제점

-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관리를 위해 식생활 및 영양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업 대상자의 특성상 집합교육 참여가 어렵고,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에 대한 요구, 수혜자 확대가 필요

#### ○ 영양플러스 사업의 향후 추진 방향(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0: 100)

- 지역사회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 확대: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확대 및 지역사회 취약계층 발굴 지원 강화
- 특히, 과체중·비만 대상 영양플러스사업 시범사업 운영 계획
- 영양플러스사업 참여 접근성 강화: 온라인 기반 영양교육프로그램 개발로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 유도

- 영양플러스 사업 운영 지원체계 강화: 정기 교육 프로그램 마련 및 표준 영양 상담 및 교육 매체 개발

## 라. 저소득층지원프로그램(푸드뱅크, 푸드마켓)

### 1) 푸드뱅크의 기원과 확산

- 푸드뱅크는 국가 재정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나타나는 결식 완화를 위해 민간의 참여에 기반하여 확대
  - 정부는 잉여식품을 사회적 자원으로 환원하고, 민간자본의 기부를 통해 복지 총량의 확대, 사회적 결식 문제 해소 등의 효과를 위해, 푸드뱅크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이석환, 권진. 2020: 548)
- 푸드뱅크의 기원은 1965년 미국 John van Hengel이 Soup Kitchen에서 잉여식품을 기부받아 결식 대상자에게 제공한 것에서 시작하여, 1967년 미국 최초이자 세계 최초로 푸드뱅크 St. Mary's Food Bank가 설립
  - 1986년 Food Banking 주식회사가 설립되고, 2006년 Global Banking Network로 명칭이 변경되며, 아프리카, 동유럽 등 본격적으로 전 세계 확대
- 한국은 1998년 서울, 부산, 대구, 과천 등 4개 시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 2000년 전국푸드뱅크 및 광역푸드뱅크 설치, 이후 2006년 법률 제정을 거쳐, 2015년 기부식품 관리시스템을 도입,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양적으로도 큰 성장(이석환, 권진. 2020: 548)
  - 푸드뱅크는 사회복지의 물적 자원 전달체계로 성장하여, 최근 몽골과 베트남에 '한국푸드뱅크 모델'을 전수하기에 이룸(중앙일보 2019. 10.10일자, 박미현 외. 2020)

〈표 3-14〉 국내 푸드뱅크(기부식품제공사업)의 발전 흐름

| 구분  | 기간      | 내용                                                                                                                                                                    |
|-----|---------|-----------------------------------------------------------------------------------------------------------------------------------------------------------------------|
| 태동기 | '99~'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77 전화설치</li> <li>• 연구수행</li> <li>• 시범사업 실시</li> <li>• 전국확대</li> </ul>                                                      |
| 성장기 | '01~'0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li> <li>• 사업의 지자체 이관</li> <li>• 각 지자체별 지원</li> <li>• 외국의 현황 파악 세미나 등 개최</li> </ul>                              |
| 도약기 | '08~'1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지자체별 발전모델 개발</li> <li>•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li> <li>• 기부량 증대 모색</li> <li>• 차세대 '기부물품 관리 시스템(FMS)' 구축</li> </ul> |
| 확대기 | '1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li> <li>• 기부범위 개인위생에 관한 생활용품까지 확대</li> <li>• 평가제도 도입</li> </ul>                                  |

자료: 이석환, 권진 2020: 549 에서 인용

## 2) 푸드뱅크의 개념

- 보건복지부는 푸드뱅크를 “여유 식품을 무상으로 기탁받아 음식이 부족하여 굶거나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 및 사회복지 체계를 통칭”한다고 정의(이석환, 권진, 2020: 548)
-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전국푸드뱅크를 통해 사업을 수행 중임

〈표 3-15〉 전국푸드뱅크의 푸드뱅크 소개

|                                                                                             |
|---------------------------------------------------------------------------------------------|
| 01. 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부받아 결식아동, 독거노인 등 저소득 소외 계층에게 지원하는 물적 나눔제도                       |
| 02. 1960년대 후반 미국에서 생겨났으며, 우리나라 푸드뱅크는 1998년 IMF 경기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한 노숙인 및 결식아동의 급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 |
| 03. 전국푸드뱅크(중앙물류센터) - 17개 광역푸드뱅크 - 450여개 기초푸드뱅크·마켓으로 조직된 우리나라 최대의 물적나눔 시스템                   |

자료: 전국푸드뱅크 <https://www.foodbank1377.org/introduce/foodbank.do>

- 전국단위에는 전국푸드뱅크가 설치되고, 시·도단위에서는 광역푸드뱅크, 기초지자체단위에서는 기초푸드뱅크 조직이 설치되어 체계화(박미현 외, 2020)
- 기부식품 등의 제공사업은 전국기부식품지원센터(전국푸드뱅크)-광역기부식품지원센터(광역푸드뱅크)-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기초푸드뱅크·푸드마켓)으로 구성되어 추진

〈표 3-16〉 운영형태별 푸드뱅크 현황('20.12.31 기준)

| 구분 | 전국지원센터 | 광역지원센터 | 기초   |      | 계   |
|----|--------|--------|------|------|-----|
|    |        |        | 푸드뱅크 | 푸드마켓 |     |
| 개소 | 1      | 17     | 310  | 130  | 458 |

자료: 보건복지부 2021d. 2021년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

- 현재, 전국기부식품지원센터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각 시·도광역기부식품지원센터는 시·도사회복지협의회 또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시·군·구 단위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은 사회복지관 등의 사회복지시설에 설치

〈표 3-17〉 운영주체별 푸드뱅크 현황 (전국지원센터 제외, '20.12.31 기준)

(단위: 개소)

| 운영주체 | 사회복지법인 | 재단법인 | 사단법인 | 종교법인 | 학교법인 | 시·군·구 | 개인 | 비영리민간단체 | 계   |
|------|--------|------|------|------|------|-------|----|---------|-----|
| 개소   | 202    | 16   | 61   | 12   | 2    | 6     | 92 | 66      | 457 |

자료: 보건복지부 2021d. 2021년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

- 푸드뱅크 사업은 실적 변화에서도 그 성장세를 볼 수 있음. 총 이용인원은 2016년 1,655,946명에서 2018년 1,758,091명으로 빠른 시간에 크게 증가하였고, 기탁액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표 3-18〉 푸드뱅크 사업 실적 변화 추이

| 년도   | 총 (누적)이용인원 | 건수         | 수량          | 기탁액(천원)     |
|------|------------|------------|-------------|-------------|
| 2018 | 1,758,091  | 12,351,616 | 253,199,487 | 218,037,289 |
| 2017 | 1,656,033  | 10,759,859 | 191,186,327 | 188,934,009 |
| 2016 | 1,655,946  | 9,711,286  | 152,398,841 | 171,582,716 |

자료: 보건복지부 2021d. 2021년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



- 전북의 경우 광역지원센터 1개소, 시·군 단위 푸드뱅크 19개소, 푸드마켓 8개소 등 총 28개 조직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특광역시와 경기도를 제외하고 자치도 가운데는 설치율이 높은 편임

〈표 3-19〉 지역별 푸드뱅크 현황 (전국지원센터 제외, '20.12.31 기준)

|    | 광역지원센터 | 기초푸드뱅크 | 기초푸드마켓 | 계   |
|----|--------|--------|--------|-----|
| 서울 | 1      | 5      | 30     | 36  |
| 부산 | 1      | 18     | 16     | 35  |
| 대구 | 1      | 12     | 8      | 21  |
| 인천 | 1      | 15     | 14     | 30  |
| 광주 | 1      | 15     | 2      | 18  |
| 대전 | 1      | 10     | 9      | 20  |
| 울산 | 1      | 7      | 2      | 10  |
| 세종 | 1      | 1      | 0      | 2   |
| 경기 | 1      | 76     | 17     | 94  |
| 강원 | 1      | 20     | 1      | 22  |
| 충북 | 1      | 25     | 5      | 31  |
| 충남 | 1      | 20     | 6      | 27  |
| 전북 | 1      | 19     | 8      | 28  |
| 전남 | 1      | 24     | 3      | 28  |
| 경북 | 1      | 21     | 3      | 25  |
| 경남 | 1      | 20     | 4      | 25  |
| 제주 | 1      | 2      | 2      | 5   |
| 계  | 17     | 310    | 130    | 457 |

자료: 보건복지부 2021d. 2021년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

### 3) 푸드뱅크의 방향

-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푸드뱅크 운영에 있어 지역간 격차가 큰 점이나, 특히 기초 단체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지지 못한 열악한 근무 환경 등이 문제로 지적 (이미라 외. 2017: 61-2)
  -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행정기관과의 유기적 관계 구축이나 기부물품의 원활한 공급과 수급을 위한 물류창고 등과 같은 물리적 기반도 한계로 지적됨
- 또한 기부식품의 안전의 문제는 법적으로 규제되기 때문에 보장되는 반면, 기부품의 선택이나 배분의 문제 역시 고려가 요청

- 푸드뱅크의 양적 성장에 대한 강조에서 나아가, 지역 네트워크와 신뢰구조 구축과 호혜적인 자원교환이 필요
- 지역화된 먹거리를 중심으로 하는 푸드뱅크가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대상에 있어서도 저소득층만이 아닌, 지역주민 모두의 먹거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방향 전환이 필요(김홍주·이현진 2013)

## 마. 농식품바우처지원(시범)사업

- 농식품바우처지원(시범)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과 건강 상태 개선을 위해 농식품바우처(과일, 채소 등)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식품접근성 강화, 먹거리 복지를 실현할 뿐만 아니라, 지역농산물에 대한 지속가능한 소비체계를 구축하여 농업인 소득 보장으로 경제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음. 2021년 현재 경남 거제시와 밀양시, 전북 김제시, 충남 당진시와 청양군, 충북 괴산군, 경북 예천군, 강원 평창군, 전남 해남군 등 9개 시·군이 선정되어 1년간 지원함
- 상대적으로 농식품에 대한 소비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꾸러미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식생활 교육기관(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과 연계하여 취약계층의 식생활습관과 인식개선 교육도 함께 진행됨
- 사업예산의 경우 2020년 시범기간(3개월)에 국고 100%로 지원되었다가, 2021년 현재 12개월로 연장하여 국고 지원율 50%와 지방비 50%로 매칭으로 지원함. 지원금은 1인가구 기준 4만원이며, 카드(전자바우처) 방식으로 현물을 구매할 수 있음

〈표 3-20〉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지원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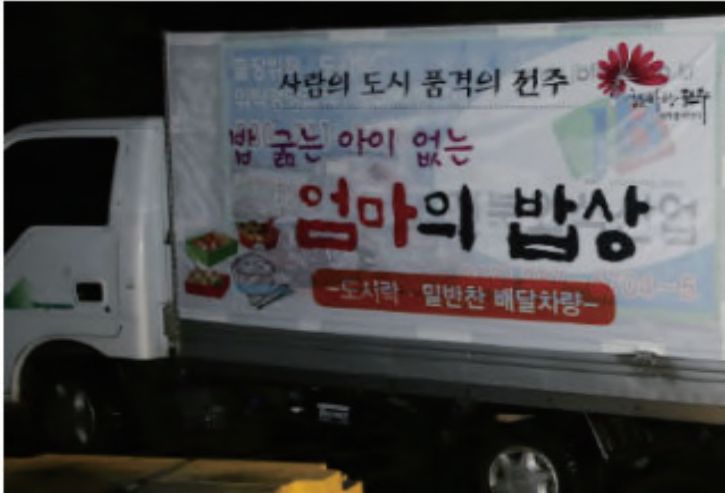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 | 지급기간 |
|-------|---------|---------|---------|---------|-----|------|
| 지급금액  | 40,000원 | 57,000원 | 69,000원 | 80,000원 | ... | 12개월 |

- 지원금(바우처)의 사용은 지역 내 지정된 농협 하나로마트 및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채소류, 과일류, 흰우유, 계란 등 4개 품목만 구입 가능하며, 2021년부터 교통약자 및 거동불편자 등은 찾아가는 서비스 ‘꾸러미

### 〈그림 3-20〉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내용

바. 지자체 시책사업 및 지역특화사업(민·관협력) 사례

〈그림 3-21〉 전주시 '엄마의 밥상' 먹거리 돌봄 프로그램 사례



- (경상남도 '농촌마을 공동체 식당') 농촌 마을공동체식당은 경상남도 농식품유통과에서 실시하는 시설지원 사업으로 마을 공동조리장 운영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지역농산물 선순환 및 조리식품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농촌 고령화에 따른 먹거리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권 강화 및 공동체 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함. 농촌마을 부녀회 등의 인력을 통해 공동급식을 실시하여 농민들의 가계소득에 기여하는 기능도 있음. 무엇보다 마을 노인들이 함께 밥을 먹기 때문에 독거노인들도 외롭지 않게 식사가 가능하여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어 각 가정으로 도시락 형태로 배달을 하고 있음
- 마을 공동급식시설(취사시설이 포함된 마을회관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일 10명 이상, 연 60일 이상의 급식을 제공하는 농촌마을 공동체가 대상임
- 사업근거 법령은 「경상남도 농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농어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및 「경상남도 먹거리 기본조례(도시사의 책무)(재정지원)」를 통해 2021년 기준 도비20%, 군비 50%, 자부담 30%로 1개소당 최대 30백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음(마을단위로 지원함)

- **(대전 대덕구 ‘한밭레츠’)** 대전광역시 대덕구는 지역품앗이공동체(한밭레츠)와 돌봄 협력 네트워크를 맺고 아동·청소년에게 식사를 제공함. 본 사업은 ‘로컬푸드 기반 커뮤니티키친’ 지원사업으로 지역사회 먹거리 돌봄 체계의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음. 특히, 코로나19로 아동·청소년의 돌봄 및 안전한 먹거리 중요성에 대해 지역공동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먹거리 돌봄 어린이식당 : 건강한 급간식 제공
- 먹거리 돌봄 꾸러미 : 로컬푸드 농산물 및 반찬꾸러미 배달
- 바른 식생활 먹거리 교육 : 로컬푸드의 중요성과 안전한 식생활 교육

- **(부산 동구 ‘동구어린이식당’)** 부산광역시 동구는 지역사회단체(복지관, 종교기관, 문화센터)와 협력하여 지역 내 총 4개소가 주1회 운영되고 있음. ‘동구어린이식당’은 지역 내 아동의 먹거리 기본권을 실현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식생활 교육뿐만 아니라, 환경교육 등도 함께 진행되고 있음. 또한, 생산에서 유통, 그리고 아동에게 제공되기까지의 과정을 통해 생산자와 공생할 수 있는 방안에 기여하고 있음. 한편,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밀키트’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데, 피크닉 키트, 여름 맞이 콩국수화재만들기 키트 등 아동·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되고 있음

〈그림 3-22〉 부산 동구 ‘어린이식당’ 먹거리 돌봄 프로그램 사례



- **(수원시 '공유냉장고')** 수원시와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마을이 함께 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수원시 공유냉장고” 프로그램을 진행함. ‘먹거리 보장(접근권)’은 지역에서의 접근방법이 중요한 의제로 대두됨에 따라 수원시는 2017년 민·관 공동선언을 계기로 지역특성에 맞춘 ‘수원시 지속가능발전목표(S-SDGs)’ 10개를 수립하였음. 이에 먹거리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에게 주목하였고, 수원시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하나인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통한 먹거리보장 의제 수립과 ‘마을연대’라는 공유가치를 도출함
  - 먹거리 보장의를 통해 먹거리 생태적 순환, 음식물쓰레기 감소, 먹거리기본권 보장, 복지사각지대 해소, 마을먹거리복지 구축, 공동체 복원, 사회적 공유가치 실현 등 환경·경제·사회의 다양한 문제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매개체이며 지속가능발전목표 실천사업이 바로 수원시 공유냉장고 사업 추진계기가 되었음
  - 2018년 첫 번째 공유냉장고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시작되었고, 현재 19개 공유냉장고가 저소득층, 노인가구, 다문화가구 밀집지역에 설치되어 농민 기부에 의한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신선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있음

〈표 3-21〉 수원시 공유냉장고 프로젝트 사례

| 구 분         | 기 본 원 칙                                                                                                        |
|-------------|----------------------------------------------------------------------------------------------------------------|
| 설 치 위 치     | ·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및 노인가구, 다문화 가구 밀집지역 설치 (학교, 임대아파트 지역 등 유형별 사례에 따라 확장 가능)<br>· 접근성, 관리상 안정성, 낙인효과를 배제할 수 있는 장소 고려 |
| 관 리 자       | · 심층면접을 통한 책임감 있는 시민자원 운영자 선정                                                                                  |
| 지 원 체 계     | · 동 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산하 중간지원조직<br>· 도시농업네트워크, 식생활교육시민네트워크 등 시민단체<br>· 마을별 상점, 식당, 개인, 가정 등 상시지원              |
| 먹 거 리       | · 농민기부에 의한 관내 로컬푸드 직매장에서의 신선한 먹거리 공급<br>· 마을별 자원관리자가 음식물 가공 및 원재료 공급 등 판단 후 공유                                 |
| 이용자 모니터링    | · 공유냉장고 이용한 마을 이용자들의 만족도 등 모니터링                                                                                |
| 운 영 자 회 의   | · 운영자, 시민단체, 사회복지관, 먹거리공급자 등 운영자 간 정기회의                                                                        |
| 지 원 체 계 회 의 | · 민·관 간 지원체계 점검 등을 위한 정기적인 회의<br>· 지속가능발전목표 실천사업으로서 4번 목표위원회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



### 제3절 전라북도 먹거리 돌봄 관련 공무원 실태조사

#### 가. 심층면접조사 개요

##### 1) 심층면접 방법 및 조사내용

- 심층면접 기간: 2021년 8월 4일-8월 11일
- 심층면접 대상: 전라북도 6개 시군구의 취약계층 담당 공무원
- 심층면접 방법
  - 심층면접은 상황에 따라 단독으로 혹은 2인이 같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
  - 면접시간은 45분에서 1시간 정도가 소요
  - 면접 장소는 시군구
  - 심층면접 대상자 중 참석이 어려운 2인에 대해서는 이메일 조사로 진행
- 주요질의 내용
  - 취약계층 식생활 평가, 평가 원인, 취약계층 상태 진단, 선호 서비스와 지원형태, 선호 식생활 정책, 지원 필요 대상, 서비스 만족도, 지역 내 지원단체의 존재와 역량, 식재료 구매장소, 지역적 특성과 돌봄 정책 성격 등을 문의

〈표 3-22〉 심층면접 조사내용

| 구분              | 조사내용                                                                                                                                                                                               |
|-----------------|----------------------------------------------------------------------------------------------------------------------------------------------------------------------------------------------------|
| 취약계층 식생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약계층 식생활에 대한 주관적 평가</li> <li>• 평가 원인</li> <li>• 식생활이 건강하지 못한 이유</li> <li>• 경제적 지원 외의 다른 요인</li> </ul>                                                     |
| 취약계층 선호 식생활 서비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호 서비스의 형태(현금, 바우처, 현물, 급식시설, 일반음식점 등)</li> <li>• 현물 지급시 선호 형태</li> <li>• 원재료 지급시 필요 식품</li> <li>• 조리식 지급시 필요 식품</li> </ul>                               |
| 취약계층 식생활 정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약계층 선호 식생활 정책</li> <li>• 취약계층 필요 식생활 사업</li> </ul>                                                                                                       |
| 식생활 지원 대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장 도움이 필요한 대상</li> <li>• 취약계층 성별에 따른 차이</li> </ul>                                                                                                        |
| 식생활 지원 사업 만족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생활 관련 서비스 업무 만족도</li> <li>• 지역내 식생활 서비스 정도</li> <li>• 지역 내 식재료 구매 장소 접근 용이성</li> <li>• 식생활 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안 및 방향</li> <li>• 지역내 돌봄 공동체 단체의 존재 여부</li> </ul> |

| 구분                  | 조사내용                                 |
|---------------------|--------------------------------------|
| 지역 특성과<br>먹거리 돌봄 사업 | • 지역의 특성(도시, 도농복합, 농촌)과 먹거리 돌봄 사업 요구 |
| 기타                  | • 먹거리 돌봄 사업을 위한 제언                   |

## 2) 심층면접 응답자

- 대상자 선발에 있어서 도시, 도농복합, 농촌의 지역에 대한 배려와 담당 취약계층을 고려하여 선발
- 시지역으로는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를 군지역으로는 완주군, 장수군, 고창군을 인터뷰 하였으나, 담당 지역에 따라 시와 군지역에서도 도농 복합지역의 경우를 볼 수 있었음
- 취약계층에 대한 담당은 결식아동, 장애인, 노인, 저소득, 아동급식, 장애인시설, 노인급식 등의 다양한 복지 분야의 공무원을 만나려고 노력하여 진행
-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의 경우,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 외에 기존에 다른 영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각 영역에 대한 비교와 분석을 통한 통합적인 의견도 제시하여 주기도 함

〈표 3-23〉 심층면접 대상자

| 연번 | 지역  | 담당분야         | 연번 | 지역  | 담당분야      |
|----|-----|--------------|----|-----|-----------|
| 1  | 시지역 | 지역복지         | 11 | 시지역 | 결식우려 아동급식 |
| 2  | 시지역 | 아동급식         | 12 | 시지역 | 결식우려 아동급식 |
| 3  | 시지역 | 장애인 거주시설     | 13 | 시지역 | 노인 맞춤형돌봄  |
| 4  | 시지역 | 장애인 재활시설     | 14 | 시지역 | 장애인 시설    |
| 5  | 시지역 | 재가장애인, 시설장애인 | 15 | 군지역 | 아동급식      |
| 6  | 시지역 | 노인급식         | 16 | 군지역 | 아동급식      |
| 7  | 시지역 | 아동급식         | 17 | 군지역 | 장애인 복지관   |



| 연번 | 지역  | 담당분야   | 연번  | 지역  | 담당분야              |
|----|-----|--------|-----|-----|-------------------|
| 8  | 군지역 | 저소득 노인 | 18* | 군지역 | 경로식당<br>재가노인 식사배달 |
| 9  | 군지역 | 지역아동센터 | 19* | 군지역 | 경로식당<br>재가노인 식사배달 |
| 10 | 군지역 | 결식우려아동 |     |     |                   |

\* 이메일 인터뷰 진행

## 나. 심층면접을 통한 전북지역 먹거리 돌봄 실태 분석

### 1) 취약계층 식생활

- 취약계층 식생활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분야에 따라 조금 다른 응답을 보임
- 취약계층에 따른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전반적인 만족도 조사에서 만족도가 높은 편으로 나타나는 사례를 볼 수 있음

만족도 조사를 해요...설문지랑 12 가정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만족도 어찌나 그래서 어떤 분은 해서 나이드신 분은 짬뽕 싫은 사람은 짬뽕싫어요. 딱딱 해요 그러면, 반찬가게가 두개가 있어요. 말을 해요. 딱딱하다 짜다 부드러운걸로 넣어달라 이렇게 해서 만족도가 구십프로 이상이 되요. 구십삼프로, 구십오프로 1년에 두 번해요. 상반기 하반기(심층면접 1)

- 노인의 경우에는 아동급식대비 지원 금액이 적어서 식생활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많음

예산도 더 수반이 되어야되서 식사비도 늘어나면 좋겠고 단가도 높여서 아까 뭐 아동수준에 맞춰서 6천원까지 정말 정말 잘나온다라고 할 정도로 일반 급식도 그렇고 반찬도 그렇고,(심층면접 14)

이게 어르신들이 경로식당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천5백원이면은 너무 단가가 낮아요. 그래서 완전한 부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 만으로도 균형잡힌 식사는 어려우시더라구요.(심층면접 8)

또한, 어르신들의 경우, 음식을 오래오래 두고 드시기도 하고, 식사를 여러 가지 영양소 있는 음식들을 드시기보다는 대개 한 두가지 반찬만 가지고 드시는 일이 많고, 식사 시간도 규칙적이지 않아서 건강에 문제가 생길까 염려스럽다는 언급도 있었음(심층면접 19)

이제 아무래도 영양불균형이고 혼자 차려서 배우자가 있으면 모를까 혼자 차려 드시기도 그렇고(심층면접 14)

- 그에 비해, 아동의 경우는 실제 결식을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문제는 거의 사라진 상황인데 비해, 건강한 영양섭취나 조리의 문제 등을 경험하는 것에 대한 응답을 살펴볼 수 있음

식생활에서 나타나는 질병문제가 엄청 크거든요? .... 실질적인 시스템적으로 특히, 부식지원하는 애들 중에 부식에 관련해서 우리가 가정위탁세대나 소년소녀가장들이 신청을 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가정들 뿐만 아니라 부모가 장기출장을 자주한다거나 사업상 그렇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애들이 되게 많더라구요.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는 부모들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에 늦게 들어오는 부모들도 있고, 애네 부식을 갖다줘도 지들이 해먹을 수 소시지 같은 거는 데워먹으면 되는데, 당근도 넣고 해야하는데, 그냥 후라이팬만 볶아먹는 경우도 있고.(심층면접 7)

저희 쪽 취약계층이라 대부분 수급자나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이라서 학교에 돌봄교실이나 방과 후 교실이나 이런 지역아동센터같은 외부 기관들을 거의 다 이용하는 아이들이라서 사실 그렇게 떨어지는 위치는 아니거든요. 가정방문을 다녀보면은 이제 아이들이 안챙겨먹어서 그러지 사실 그런걸 못먹는 여건은 아니여서(심층면접 11)

- 먹거리 돌봄 취약계층이 건강한 식생활을 하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음식의 부족보다는, 그 가정내 형편에 따른 조리할 사람이나 돌봄 노동을 제공해 줄 사람의 부재의 문제가 더욱 크게 작용

독거노인이나 독거 중장년층의 경우, 식사를 조리할 사람이 없거나 혹은 요리법을 몰라 간단하게 해결하는 상황이 많아, 식생활에 대한 건강이 염려가 되는 상황임(심층면접 18, 19)

아동의 경우도, 보호자의 부재나 맞벌이 가족 내에서의 건강한 식생활 보장의 어려움을 언급

아무래도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재정적인 문제도 있을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동 급식같은 경우에는 보호자가 부재하거나 맞벌이 애들이니까 가정의 저소득층 아동들이니까 아무래도 챙겨줄 수 가 없고, 애들이 조리해서 먹을 수 없으니까 그런 건강한 식생활을 하지 못하지 않을까(심층면접 15)

## 2) 취약계층 선호 식생활 서비스

- 취약계층의 선호 식생활 서비스는 심층면접으로 그 선호를 정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지역(도시, 도농복합, 농촌), 마트나 상점과의 접근성, 세대 등에 따라서 다양한 요구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도시지역에서는 마트를 지정해서, 사후에 결제해 주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수행하기도 함

매달 식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일자별로 한끼당 단가 6천원씩 해서 각자 식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만큼 담당 직원이 월초에 금액을 알려주고, 그만큼 보호자랑 아이들이 가서 물건을 술, 담배 같은 금지품으로 제외하고 사가지고 오시면, 그 다음 달에 마트에 영수증을 보고 담당직원이 결제를 해주는거예요. 금지품목같은 경우는 결제를 해주지 않고(심층면접 12)

- 실제 복지를 지급하는 입장에서도 수요자층에 따른 다양한 요구가 존재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나름의 배려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함

이게 갭이 있어요. 이게 그 수요가층이 갭이 있는게 뭐가 있냐면, 어떤 가구는 신선식품 위주로 재료를 해가지고, 자기가 차려주는 걸 원하는 수급자들이 있고, 반대로 내가 그걸 차려 줄 수 없는 결식우려인 상태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데우고 할 수 있는 가공식품을 원하는 계층들이 있어요. 이것을 저희가 가구 가구마다 개별적으로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왜그냐면 정해진 예산 안에서 그렇게 하기에는 어느 지자체든 번거로울거예요. 그 부분을 다 해드리기는 뭐하고, 단,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되는 가구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왜그냐면 아토피가 있어가지고 가공식품을 못먹는 다거나 뭐 이런 경우는 저희가 서류적으로는 이제

공통된 건적을 받아도 업체 쪽에 따로 부탁을 해서 자체적으로 건적을 바꿔가지고 해당 물품에 맞게 맞춤형으로 지원되는 가구는 몇 가구가 있기는 해요. 근데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통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죠. 어떻게 보면은 업체들 입장에서 배려를 해주고 있는거예요.(심층면접 2)

취약계층에게 음식물을 완성된 상태로 지급할 때는 도시락이나 부식서비스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볼 수 있었고, 원재료를 지급할 때 곡물, 육류, 유제품, 생선 등에 대한 질문에서 육류같은 경우는 대부분 어르신들이 치아가 좋지 않아서 잘 드시지 못하고, 남겨 두었다가 자녀 또는 가족이 방문했을 때 먹는다고 남겨두는 경우가 많다는 관찰도 살펴볼 수 있었음 (심층면접 19)

### 3) 취약계층 식생활 정책

○ 취약계층의 선호하는 식생활 정책에 대해서는 많은 경우 현금지급을 가장 선호한다고 응답이 많았고, 그 외에는 복지용 쌀공급에 대한 선호가 많다고 응답함(심층면접 18).

- 특히, 복지용 쌀 공급은 그 단가가 많이 낮아서, 취약계층의 경우 많은 분들이 복지용 쌀이 이미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기 때문에 부식류의 지원에 대해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함

10kg 한포대 2,500원 1.900원이니까 사실 이유가 없거든요. 어차피 이 가격대에 사실 이유가 없어서(심층면접 12)

- 연령대에 따라서는 노인 식사배달에 대한 요구가 많고, 그 다음이 아동급식 순으로 나타난다는 응답도 있음

보통 보면은 이제 뭐 1번 생계급여는 당연히 돈으로 그거는 따질 문제는 아닌 거 같고, 두가지가 가장 많아요. 첫번째는 노인식사배달 사업이에요. 이게 진짜 정말 많아요. 실제 대기자도 수십명이고 왜그냐면 정해진 한도 내에서 이 도시락배달이나 노인 밑반찬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이 없느냐 문의하는게 가장 많아요. 가장 많은데 실제 예산이 없어가지고 대기자로 관리하고 있는 현실이고, 그 다음에 많은게 아동급식인데, 아동급식은 그나마 예산적인 여유가 그나마 있는 편인데, 이거는 자격요건이 결식우려라는 자격요건이 동시에 따라가야 되니까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선정을 해야되는 부분이 있죠.(심층면접 2)

- 아동급식 카드의 이용에 있어서도, 카드 사용처의 확보가 중요해서, 지역에 따라 카드 사용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함

카드는 이렇게 먹을 수 있는데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도시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편의점이라 그런 음식점들이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시가지 쪽에는 가늠은 하지만은 조금만 벗어나도 힘들거든요. 애들이 와가지고 먹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카드도 아직까지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심층면접 15)

- 식생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교육과 실천과의 거리를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지속적인 교육과 가까운 병원과 연계하여 식생활 교육이 수행될 필요를 지적하기도 함

교육이 진짜로 교육해서 개선이 되면 좋은데, 그게 효과가 엄청 늦게 나타나는 거고, 효과가 없을 수도 있구요. 취지는 좋은데 효과는 좀 나타나는데 거 같아요. 한 번 한다고 되는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야되잖아요. 몇 년이 필요 할 수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심층면접 10)

교육받으면은 나쁠 것은 없죠. 사실 당뇨 교육, 고혈압 교육하면, 어르신들은 다 잊어버려. 자기 주관적으로 살아요.... 식단 관리 뭐 드세요, 뭘 주의하세요, 병원에서 해주시더라고요. 해주면 좋겠네 병원가는 김에 어르신들 왜냐면, 좋겠어. 다니는 병원에서 그런 거를 하나 만들어 일자리 창출도 되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예를 들어 당뇨병이면 식단을 어떻게 하세요 하는 것처럼 병원마다 관리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을거 같아요. (심층면접 1)

#### 4) 식생활 지원 대상

- 가장 취약한 식생활 지원대상에 대한 물음에는 많은 경우 돌봄영역 제도의 사각지대에 위치하거나, 혹은 독거 노인의 경우를 많이 지목하여, 이들에 대한 대책이 요청됨
- 정부의 지원사업의 분류에 들어있지 않은 경우는 주변에서 보기에는 도움이 필요하지만, 등급을 받을 수 없거나 혹은 연령에서 지원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가장 취약한 대상으로 전략하는 경우도 있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죠. 예를 들어서 중증장애인이면은 활동보조인이 들어가고, 완전 노인이면은 요양보호사 들어가는데, 중간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수혜를 받는 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등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힘들긴한데, (심층면접 17)

- 노인 중에도 특히 연로하여, 식사 준비가 어려운 계층을 언급하기도 함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계층이 노인 중에서도 아주 연로한 연로한 노인분들 계시죠. 본인이 밥을 차려줄 수 없는 상태인데, 요양원이나 병원은 안들어가시고 단순히 요양보호사 서비스만 이용하고 가구들도 많아요. 실제 그런 가구들은 할머니들이 이제 실제로 밥을 차려먹기 힘든 상태거든요. 요양보호사들 와가지고 반찬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하고 있기는 한데, 그분들이 실제로 이제 어떤 서비스들이 제공이 되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심층면접 2)

- 아동의 경우는 다양한 돌봄교실이나 지역아동센터 등을 통해 지원을 받는데 비해서, 장애를 가진 어르신이 가장 취약할 수 있다고 파악

사실 아동같은 경우는 결식아동 보호자가 있기때문에 그리고 요즘에는 지역아동센터나 돌봄교실에 가면 식사를 제공해주니까 정말 어려우면 다 연계를 해주니까 정말 굶는 아이까지는 없어요. 집안에서는 못먹어도 밖에 나오면 최소한 하루에 한 끼는 먹을 수 있으니까 점심먹고 저녁까지 두 끼는 먹을 수 있으니까 먹는 데 보편은 장애가 있는 어르신들이 제일 못먹더라구요. 이게 이제 요양보호사나 그런 분들이 모시지만, 그 분들이 24시간 상주하는게 아니라 오전이든 오후든 보통 반나절만 있다가시니까 (심층면접 12)

- 반면, 아동의 경우가 식생활에 대한 인식이 확립되는 중요한 시점이므로, 이들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함

아동이요. 왜냐면 (아이들은) 시작이에요. 이제 애네들이 정체성이 확립되고, 어느 정도 본인들이 식생활에 대한 의식주에 생활에 대한 자세가 확실히 확립이 되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나중에 점차 적립이 되는데, 지금 아동대상으로 먼저 시작부터 하지 못한다면(심층면접 7)

- 취약계층 성별에 따른 차이에 대해서는 특히 남자 독거 노인과 중장년 독거 남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언급

요리를 할 줄 모르고, 급식소에 나오거나 등의 활동성도 떨어지는 상황으로 생활 상태에 대한 우려가 많이 되는 집단으로 언급됨(심층면접 18)

남자 어르신들이 더 취약하죠 아무래도 음식 만들어서 먹는 것도 그렇고(심층면접 14)

할머니분들은 거동만 가능하면 뭐라도 해드시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식자재만 갖다줘도 본인들이 요양보호사한테 부탁해서 장을 갖다주면 다 드시거든요. 근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나라 정서에 남자 어르신들 그런 부엌 출입을 안 하시던 분들이라서 대개 다들 굶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싫어하시는 분은 맨날 생선탕만 끓이세요. 그게 제일 쉽다고(심층면접 12)

- 특히 남성 독거 어르신의 경우는 음식을 해먹기보다는 그냥 방치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여져, 요리교실 등의 수업을 통한 지원도 요청됨

쌀이나 기본물품을 김장을 해서 나눠드리고 해도 여자 할머니 어르신들은 그걸로 잘해서 드시고 막 그러는데, 남자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혼자 독거노인이신 경우는 다음에 방문을 해보면, 그대로 물품이 있더라고요. 쌀이나 김치는 다음에는 다른분에게 드리고 완제품으로 나오는 기본물품을 드리게 되고 이러더라고요.(심층면접 16)

## 5) 식생활 지원 사업 만족도

- 급식서비스의 경우는 저렴한 비용으로 식사를 제공하여, 노인과 장애인 등의 이용이 많은 편임

- 복지관에서 이루어지는 급식서비스의 경우는 재정 상태가 그다지 여유롭지 못해, 메뉴의 다양성이나 영양사의 상주 등이 어려운 점이 존재하고 있었음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다양한 메뉴를 선택해서 이런걸 해줘라그런거는 어려울거 같아요....그리고 저희 장애인복지관 같은데는 영양사도 지금 시간제로 고용

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있는게 아니고, 시간제로 하다보니까 제일 어려운데 그것이라 하거든요(심층면접 17)

○ 부식이나 도시락 배달 서비스도 많이 이루어지는데, 배송의 어려움으로 인해 배송기간을 한 달에 한 번으로 잡아 부식을 배송하는 경우와 배송 뒤의 관리의 문제 때문에 가공식품으로 구성되기도 함

- 아동급식의 경우 도시락이나 부식 배달에 있어서, 배송비용을 절약하고 효율화 하기 위해서 어떤 지역에서는 한달에 한번 부식 꾸러미를 만들어서 배송하는 경우도 있음

레토르트 식품, 밀반찬 몇가지가 같이 들어가요...평일에는 이제 학교에서 급식을 먹으니까 주말만 이제 나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 달에 배송이 딱 한 번만 가거든요. 한꺼번에 한 달 분이 같이 배송이 되요(심층면접 16).

지역도 넓고, 여건상 급식이 어렵다보니까 부식으로 하고 있는데, 더 좋은 방안이 나오면 바꿀 의향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부식꾸러미로 나갈 수 밖에 없는거 같아요.(심층면접 10)

- 실제 배송문제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특히 고기나 냉장, 냉동이 필요한 식품 등의 변질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 배송이 편리한 것 위주로 진행되는 경향이 나타나거나, 요리를 직접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완제품으로 배달되는 경우도 존재

대부분이 배송에 편리한 것을 위주로 할 수 밖에 없어요. 왜그러냐면, 시골에 보니까 고기나 냉동식품을 놔둬버리면 변하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렇다보니까 가공식품 대부분이 라면이라든지 그런거 있잖아요? 캔으로 된거? 이런 거에 취중할 수 밖에 없었어요.(심층면접 17)

가장 큰 문제가 아이들이 갔다주면, 바로 먹으면 좋은데, 업체가 오전이든 오후든 특정시간에 갖다주는데, 이 아이들이 그때 먹지 않고,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으면, 다 상하는데, 우리 아이들 같이 식습관이 지도가 될만한 애들이 없잖아요.(심층면접 12)



완제품으로 하는 이유도 이제 대상이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들한테 가는거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도 있어서 요리를 직접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완제품으로 나가는 그런 경향도 있다고 하더라구요(심충면접 16)

- 아동급식의 경우에 있어서도, 배달이 용이한 지역으로는 도시락이 제공되는 반면, 어려운 지역에는 부식지원을 병행하는 경우도 존재

왜냐면은 도시락으로 만들 수 없는 지역들이 있어요. 단체에서 해줘야되는데, 단체에서 이제 그 도시락을 만들여건이 안되가지고, 마트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부식으로 제공을 하는데가 있거든요? 지역마다 달라요.(심충면접 15)

- 장애인복지관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급식을 제공하는 형태였으나, 코로나로 인한 휴관으로 반찬 서비스와 같은 사업이 활성화되는 경우도 발생하여, 나름의 먹거리 돌봄 공백에 대응하는 모습을 확인 가능

장애인복지관에서 일단은 급식을 하는데, 코로나때문에 휴관이되잖아요. 그럼 공백이 생기니까 자체사업을 해가지고 식당을 만들어가지고, 도시락은 아닌데, 반찬, 밑반찬 서비스를 하시는거같더라구요. ...코로나때문에 휴관하면서 이런 사업이 더 활성화가 된거같아요. 그전에는 대부분이 장애인복지관 이용하는 사람들은 식당 자체가 운영이되니까 그럴 필요성이 없었는데, 휴관이 좀 되다보면은 이용을 못하니까 어려운 밑반찬서비스를 한다고 하더라구요(심충면접 17).

- 농산물 바우처나 전자카드 등의 이용에 대해서는 메뉴 선택의 자율성 등의 장점에 불구하고, 지역에 따라 접근 가능성이 낮은 경우가 있음

농촌지역의 경우는 읍면소재지에 나와야만 식품재료를 구입하거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데, 교통이 불편하고, 시간적인 문제도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지적하기도 함 (심충면접 18, 19)

식생활 지원 사업 개선을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제대로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필요하고, 음식을 조리하는 사람, 도시락과 반찬을 배달해 줄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신선한 음식의 제공이 가능하고, 어르신들도 끼니 걱정없는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의견을 내기도 함(심충면접 19)

지역 안에서 기부와 주민자치예산 등으로 식생활을 지원하는 종교단체나 사회 단체들이 많이 존재하고, 단체의 참여를 통해 먹거리 지원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는데 기여(심층면접 5)

## 6) 지역 특징과 먹거리 돌봄 사업

○ 거주지역의 특성(도시, 도농복합, 농촌)에 따라 먹거리 돌봄 사업에 대한 요구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신선한 채소나 과일에 대한 요구에 있어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은 확실한 선호도의 차이가 나타나, 농촌지역에서는 신선한 야채 등의 접근성이 높아, 식재료를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호가 떨어짐

(농촌에는)...조손가정이 많죠.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가 키우는 경우는 시골이 다보니까 특성상 식재료를 많이 재배해서 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채소같은거 주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고 과일 같은 경우는 사서 급식으로 넣어줄 수가 있겠죠. 그런 상황이죠. 대도시처럼 야채가 부족해서 야채를 넣어주거나 대부분 자가에서 기르다 보니까 굳이 그런 거까지는 신경을 잘 안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쪽에서도 그런 거 별로 원치는 않은거 같아요.(심층면접 17)

서로서로 얻고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농산물을 크게 원하지는 않을거같은데.(심층면접 15)

- 또한, 농촌지역은 지역 공동체의 돌봄망이나 연결관계가 잘 되어 있는 편이어서, 도시지역과는 달리 극단적 사각지대의 위험이 적다고 평가함

티브이 속에서 나오는 그런 가정은 그렇게 많이 없다. 거기에 만약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충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지역사회나 네트워크가 형성되서 충분히 거기에 지원 할 수 있는 기반이 있다고 봅니다.(심층면접 17)

- 로컬푸드가 잘 발달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아동을 위한 꾸러미 배송에 있어서, 로컬푸드가 많이 포함되어 실천되고 있다는 언급도 들을 수 있어, 실제 꾸러미 구성에 있어서 로컬푸드의 확대 가능성이 보여짐

한 달에 한 번 꾸러미 보름에서 월 말 사이에 배달하고, 그렇게 지원이 되고 이제 구성 꾸러미 구성은 이제 저희가 로컬푸드 지역이다 보니까 로컬식품류가 많고, 아이들 입맛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햄같은 이런 것들 들어가고요. 고기류, 육류, 과일 뭐 이렇게 계란 이런 것처럼 다양하게 이렇게 지원이 되요.(심층면접 \*4))

## 7) 제안사항

○ 먹거리 돌봄 사업의 확대를 위한 제언을 종합해보면, 촘촘한 서비스 지원과 재정 확대에 대한 의견을 많이 들을 수 있었고, 지역복지특화 사업 아이템의 확대, 지역 내 돌봄 공동체 활성화와 로컬푸드 이용 확대 등을 들 수 있음

- 무료경로식당의 경우는 한끼당 2,500원, 재가노인 식사배달의 경우는 한끼당 3,000원으로 이 단가에 맞추기 위해서는 영양있는 도시락 혹은 반찬을 제공할 수 없고, 질 좋은 서비스 제공도 불가하니, 적정수준까지의 예산 확대가 요청된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음(심층면접 19)

- 한 달에 한번 진행되는 배송주기를 변경하고 싶으나,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있음

네. 주기가 좀 최소 이주에 한 번 정도하면 좋겠는데 근데 업체의 사정이 있니까... 인건비 인건비 문제죠. 그 업체의 인력 한 번 가야될거 두 번가야되고 하니까 같은 노선을 두 번 돌아야되니까 또 이제 꾸러미 한 번 준비할거 두 번 준비하면 손이 더 많이 가니까 재료비도 조금 더 날 수도 있고(심층면접 10)

- 취약계층 식생활 지원에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만이 아닌, 부식 지원만이 아닌 아동방문 돌봄 형식으로 적절한 식재료의 보관 및 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돌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음

---

4) 지역의 구체성으로 인해, 인터뷰 참여자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 이 부분의 응답자는 \*표 처리함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게 우리 노인요양 방문 요양보호사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이 있고, 그런 분들이 요리를 어느 정도 해줘요. 우리도 부식을 애들한테 지원하는 걸로 끝나는게 아니라 일자리 창출 개념도 있을 뿐더러 인건비 지급을 하든지 해서, 아동방문 요양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케어서비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심층면접 7)

-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서의 긴급도우미 사업과 같이 정량적인 기준만이 아닌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정부에서 또 긴급도우미 사업이 있는데, 또 사각지대있잖아요.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있는 분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기준으로만 할 수 없잖아요. 어려운 사람 발생이 했는데, 그래서 국가에 있는 시책에 좀 미흡한 사람들 빨리 지원(심층면접 1)

- 명절음식 꾸러미를 구성해서 전달할 수 있는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이 외롭지 않은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함

이거는 추석명절 음식인데 송편 명절에 그 분들 장바구니 해다주는거예요. 이렇게 꾸러미 이렇게 사진 찍었는데, 한박스를 해줘요. 이렇게 거기다 소고기 이거 하려면 제가 엄청 많이 다녀야되요. 여기저기 방앗간에 가가지고, 송편 떡을 주문을 해야되요. 제가 잘하는 떡방앗간가가지고 많이주세요. 이거 어려운 사람한테 주는 건데 좀 많이 좀 담아주세요 하고 소고기도 착한가게 있잖아요. 착한가게 가서 우리가 여기 후원하는데서 해야지 좋은걸로 해주세요 하고 이런거 해주고 물품 과일 같은거 여러가지 넣어줘요. 명절에 뭐 드실 수 있는거 솔직히 외롭지 않도록 소외된 이웃이 누가 찾아오지도 않는데, 솔직히 말해서 누가 뭐 먹고 있으면, 나도 먹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티브이에서나 어디나 송편부터 나오는데 외롭지 않게 그런거(심층면접 1)

- 로컬푸드와 먹거리 돌봄 사업의 연계방안을 제시한 경우도 있었는데, 노인들이 경영하는 로컬푸드 식당을 제안하기도 함

다른 시군에는 로컬푸드 해가지고, 노인들이 식당을 운영해서 판매되는게 있더라고요. 일자리도 창출되고, 그거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로컬푸드로 해서 본인이 길러서 식당을 운영을 해서 노인끼리 운영을 하는거예요. 맛도 괜찮고, 소득활동도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심층면접 17)

- 먹거리 취약계층에게 도시락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시니어클럽과 같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면서, 아동과 노인의 연계를 통한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그 사업의 긍정적인 측면을 언급

시니어클럽이라고 해가지고 급식을 만들어가지고 도시락을 만들어 가지고 수익을 내는 노인일자리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연계를 하면서 여기서는 약간의 수익을 내야되니까 서로 좋은거잖아요. 애들한테는 반찬을 제대로 주고 여기서는 수익이냐고 그러니까 서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잘 주고 있어요.(심층면접 15)

- 지역특화돌봄사업들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지역사회 단체들과의 연계 확대를 통해 돌봄사업의 확장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음

읍면동 자체적으로 하는 공유 공간이라던가 그런 냉장고 사업 이런 것도 괜찮고, 맞춤형복지팀에서 부녀회 연결해가지고 하는 밑반찬 지원 이런 부분도 괜찮은 거 같더라고요. 좀 더 늘려서 이런 부분 가면 더 좋지않을까(심층면접 14)

## 다. 심층면접 결과

- 취약계층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에서,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분야는 물론, 기존의 다른 사업의 경험을 토대로 전북지역 먹거리 현황에 대한 통찰력 있는 분석을 제공
- 취약계층의 전반적 식생활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결식 상황의 문제는 많이 해소되었으나, 결식의 해소가 균형잡힌 식생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지적
- 건강한 식생활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원인으로는 가정 내 형편에 따라 음식을 준비할 사람이 없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낮시간에 보호자가 없는 아동의 경우나,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이나 독거장년층의 경우에서 볼 수 있음
- 취약계층이 선호하는 식생활 서비스는 도시, 도농복합, 농촌 등의 거주지역과 상점이나 식당과의 접근성, 세대 등에 따라서 다양한 요구를 확인할 수 있음

- 가장 취약한 식생활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돌봄 제도의 사각지대에 위치하여,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와 연로하거나 장애 등의 이유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경우를 많이 언급함
- 특히, 기성세대에서는 성별에 따른 먹거리에 대한 태도의 차이로 인해 남성들이 건강한 먹거리 접근성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급식서비스는 저렴한 비용으로 식사를 제공하여, 장애인들이나 어르신들에게 호응이 높으며, 부식배달 서비스는 호응도는 좋으나, 배송의 어려움으로 인해 한달에 한번 배송하거나, 관리의 문제로 가공식품 위주로 진행되는 상황임
- 어르신들의 경우는 아동에 비해 지원금액이 낮아서, 영양가있는 식품 제공에 어려움이 존재
- 제안사항으로는 사각지대 해소와 돌봄 서비스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방안 마련, 재원 확대, 지역복지특화 서비스의 확대 적용 등이 있음

# 4

장

## 전라북도 먹거리 돌봄 지원체계 구축방안

Jeonbuk Institute

---

제1절 먹거리 돌봄체계의 기본방향

제2절 먹거리 돌봄 체계 구축 추진전략 및 세부사업





## 제 4 장 전라북도 먹거리 돌봄 지원체계 구축방안

### 제1절 먹거리 돌봄체계의 기본방향

- 잠재적 먹거리 취약계층의 위험요인을 낮추고, 새로운 사회적 체계와 먹거리 사회적 돌봄 시스템 도입이 요청
  - 기존의 지원사업은 먹거리 취약계층에게 음식을 지급한다는 사회적 돌봄 관점이 많고, 영양소 공급에만 한정되어 있는 경향이 존재

〈표4-1〉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사업영역과 세부사업

| 사업영역                |           | 세부사업                                                                                  |
|---------------------|-----------|---------------------------------------------------------------------------------------|
| 건강식생활 실천<br>국민인식 제고 |           | · 나트륨 또는 당류 섭취 줄이기 캠페인<br>· 국민공동 식생활 지침 홍보 및 실천 캠페인                                   |
| 맞춤형<br>영양관리<br>서비스  | 임산부 및 영유아 | · 영양플러스사업*<br>· 어린이집·유치원 기반 영양관리사업<br>· 다문화가족 대상 영양관리사업                               |
|                     | 어린이 및 청소년 | ·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초·중·고등학교 기반 어린이 영양관리사업<br>· 학교 기반 영양관리사업<br>·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협력 |
|                     | 성인        | · 건강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맞춤형 영양관리사업                                                            |
|                     | 노인        | · 어르신 영양관리사업<br>· 실버건강식생활사업(취약계층 어르신 대상)                                              |
|                     | 기타        | · 다문화가족 영양관리사업                                                                        |
| 환경조성                |           | · 영양표시제도 시행·모니터링<br>· 학교 주변 그린푸드 존 시행·모니터링<br>· 건강음식점 시행·모니터링                         |

\*우선 권장사업: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및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내 영양플러스사업 내실화 및 대상자 확대 필요성에 의해 우선 수행 및 지속적 확대 권장

자료: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1

- 먹거리에 대한 권리는 근대의 시작과 함께 등장한 시민권이 마셜 (T. H. Marshall. 1950)의 주장과 같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영역으로 확대되는 과정의 연장선으로 파악 가능

- 이러한 관점에서 먹거리 수급의 문제는 산업적 형태의 푸드 시스템이 구조화되는 과정 속에서 개인의 선택만으로 설명될 수 없음에도, 개인에게 전가시키는 위험이 존재
  - 산업적 형태의 푸드 시스템이 확대를 통한 위험은 코로나19의 경험으로 가시화되었고, 시민으로서의 먹거리기본권이 침해되고, 먹거리 취약계층의 확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됨
- 시민에게 먹거리를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규범이나 체계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의 마련이 요청
- 현재 정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먹거리 돌봄 지원사업을 생애주기 및 지원형태로 구분하여 <표 4-2> 생애주기별 먹거리 돌봄 지원 사업을 작성

〈표4-2〉 생애주기별 먹거리 돌봄 지원 사업

|         | 임산부                                                                                                           | 영아                                                               | 어린이집, 유치원                 | 초, 중, 고등학생                                                                   | 청년 | 중장년                 | 노년                                | 다문화가족           |
|---------|---------------------------------------------------------------------------------------------------------------|------------------------------------------------------------------|---------------------------|------------------------------------------------------------------------------|----|---------------------|-----------------------------------|-----------------|
| 도시락/급식  |                                                                                                               |                                                                  | 어린이집<br>급식                | 급식 및<br>간식지원<br>학교급식                                                         |    |                     | 노인대상<br>공공급식                      |                 |
| 식재료와 과일 | 임산부<br>친환경농산물<br>지원 시범사업                                                                                      |                                                                  |                           | 건강과일<br>바구니시범사업                                                              |    |                     | 실버건강<br>식생활사업<br>(과일·우유<br>간식도시락) |                 |
|         | 영양플러스 사업<br>(보충식품패키지 제공)                                                                                      |                                                                  |                           |                                                                              |    |                     |                                   |                 |
| 보충제 제공  | 임산부 철분제·엽산제 지원사업                                                                                              |                                                                  |                           |                                                                              |    |                     |                                   |                 |
| 교육프로그램  | 건강식생활 실천 국민의식제고 (지역사회 전체 및 생활터별 주민을 대상으로 추진)                                                                  |                                                                  |                           |                                                                              |    |                     |                                   |                 |
|         | 맞춤형 영양관리서비스 (생애주기별 맞춤 영양교육·상담, 영양관리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개인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스스로 올바른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건강증진 도모) |                                                                  |                           |                                                                              |    |                     |                                   |                 |
|         | 영양플러스사업(교육제공)                                                                                                 |                                                                  |                           |                                                                              |    |                     |                                   |                 |
|         | 임산부·영유아 영양관리사업                                                                                                | 어린이집·유치원<br>영양관리사업(육<br>아종합지원센터와<br>어린이급식관리지<br>원센터를 통한<br>사업수행) | 저소득층<br>어린이·청소년<br>영양관리사업 | 건강위험개선을<br>위한 맞춤<br>영양관리사업<br>(성인특성별,<br>성별, 생활터별,<br>맞춤형<br>영양관리프로그램<br>제공) |    | 어르신을 위한<br>영양교육프로그램 |                                   | 다문화가족<br>영양관리사업 |
|         | 모유수유교실                                                                                                        |                                                                  | 학교기반<br>영양관리사업            |                                                                              |    |                     | 실버 건강<br>식생활사업                    |                 |

- 지역과 계층간의 먹거리 불평등을 해소하며, 도시와 농촌의 선순환 체계를 통한 먹거리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력 필요
- 취약계층 영양 불균형과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하고 회복력을 지닌 먹거리 보장 제도의 요청
- 먹거리 관련 지원 사업들에 대한 효과와 한계에 대한 점검을 통해 사업 보안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과 검토의 필요
- 먹거리 돌봄 시범사업 도입과 실험의 확대를 통한 새로운 사업의 발굴 요청
  - 지역민과 먹거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식생활 교육
  - 마을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공유부엌이나 공유냉장고 등의 도입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와 연계한 전북의 먹거리 돌봄 체계의 구축
  - 지역의 실정에 맞는 먹거리 서비스 및 지역 네트워크와의 연계 방안 마련
- 중장기적 목표로는 탈근대 시대의 모든 사람이 먹거리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대비한 사회적 돌봄 기반 마련
  - 탈근대 시대의 시민의 권리를 획득해 가는 투쟁의 과정으로 이해 가능
  - 먹거리 돌봄의 배경은 먹거리 기본권을 바탕으로 하는 식해력(Food Literacy)를 지닌 먹거리 시민(Food Citizen)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기존의 먹거리 돌봄의 정책은 정부부처에서 수급자에게 공급하는 일방적인 지원으로 이루어짐
  - 지원대상, 지원방식, 지원형태 등의 결정이 행정에서의 결정을 현장에서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중앙정부가 직접 공모 선발하는 방식에서 지역 정부로 그 선발과정을 일정정도 이양하여, 지역에서 실제 수급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의 확대가 요청
  - 먹거리 돌봄에 있어서, 정부와 개인이 가지는 관계는 명확하게 한정되어 있어, 그러한 일방향의 통행이 아닌 상호 소통을 위해서는 그 지원의 단위가 지역으로 내려올 필요가 존재
- <표 4-2> 생애주기별 먹거리 돌봄 지원사업에서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청년과 중장년에 대한 지원 사업이 부족하여, 결식 청년과 중장년

질환자, 특히 1인가구의 경우 먹거리 돌봄의 사각지대를 형성할 가능성을 보임

- 이러한 먹거리 돌봄 사업에 대한 검토에 따른 문제의식과 대응방향, 그리고 그에 따른 사업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은 표 <4-3>으로 정리할 수 있음
- 먹거리 돌봄 사업의 운영 주체는 일원화된 관리 주체를 통해 부서간 협력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
- 먹거리 취약계층 선발에 있어서 일괄적인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 지원하는 방식은 지역 공동체에 일정정도 자율성을 부과하여, 지역 내 취약계층 선발의 자율성을 일정정도 보장하고, 동시에 긴급지원 시스템을 통해 심사를 통한 지원 결정까지의 기간에는 긴급으로 먹거리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먹거리 돌봄 사업에 있어서 지역의 통합돌봄 역량 강화는 지역공동체 안에서 먹거리 돌봄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를 확장하는 방안과 먹거리 돌봄을 단순히 먹거리를 배달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먹거리를 매개로 신체와 정서적의 안녕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공동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돌봄에 있어, 노인이나 장애인 등과 같은 대상에게도 아동급식과 유사한 수준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동시에 먹거리에 대한 비용 산출에 있어서 먹거리 운송과 배달 등의 비용까지도 고려하여 재원을 마련할 필요
- 먹거리 돌봄 사각계층의 문제는 선발에 있어서의 자율성의 도입과 더불어, 먹거리 돌봄 사업의 지원대상에 있어 청년과 중장년의 경우 사업 대상에서 부재하여, 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한 고민이나 대응이 부족한 것이 사실임. 1인가구나 청년 빈곤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사업에 대한 발굴이 요청

〈표4-3〉 먹거리 돌봄 사업에 대한 문제의식, 대응방향, 그에 따른 사업 추진 방향

| 문제의식                    | 대응방향                      | 추진사업                                 |
|-------------------------|---------------------------|--------------------------------------|
| 먹거리 돌봄사업<br>운영 주체의 분절화  | 먹거리 돌봄사업<br>주체의 일원화       | 각 부처간 협력을 조율할 수<br>있는 일원화된 관리 주체     |
| 먹거리 취약계층<br>선발의 자율성 부재  | 취약계층 선정·지원<br>자율성 확대      | 지역 내 먹거리 취약층 선발<br>자율성 보장            |
|                         |                           | 긴급지원 시스템 마련                          |
| 지역공동체 중심의<br>통합돌봄 역량 강화 | 자율적 돌봄 참여주체<br>지원 강화      | 커뮤니티 돌봄 역량 강화<br>사업                  |
|                         |                           | 음식 나눔문화 확산<br>지역 돌봄 공동체 구축           |
|                         | 통합 돌봄 서비스                 | 만·관·산·학 연계 통합돌봄 및<br>맞춤형 식사와 영양관리 제공 |
|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br>재원 부족    | 취약계층<br>지원 재원 확대          | 아동 지원 금액 수준으로<br>취약계층 지원 상향          |
|                         |                           | 재원확대를 통한 부식 배달<br>서비스 등의 간격 단축       |
| 먹거리 돌봄 사각계층 존재          | 먹거리 취약계층<br>사각지대 해소 방안 도입 | 청년 빈곤 극복을 위한<br>로컬푸드와 함께하는 공유부엌      |
|                         |                           | 중장년 1인가구 대상 건강한<br>식생활 교육 및 요리교실     |

## 제2절 먹거리 돌봄 체계 구축 추진전략 및 세부사업

### 가. 중앙정부 차원의 먹거리 돌봄 추진 방향 제언

- 먹거리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과 지역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음
-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제도의 개선이나 지원 예산의 확대와 같은 시스템 변화가 필요한 사업에 대한 고려가 요청되면, 이 연구에서는 1. 취약계층 선정·지원에 있어서의 자율성 확대, 2. 자율적 돌봄 참여주체에 대한 지원 강화, 3.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재원 확대, 4. 먹거리 돌봄사업 주체의 통합 및 일원화를 통한 효율성 확대를 제안함

〈표4-4〉 중앙정부 차원의 먹거리 돌봄 추진방향

| 중앙정부 차원의 먹거리 돌봄 추진방향                                                                  |                                                                    |                                                                            |                                                                                 |
|---------------------------------------------------------------------------------------|--------------------------------------------------------------------|----------------------------------------------------------------------------|---------------------------------------------------------------------------------|
| 취약계층 선정·지원<br>자율성 확대                                                                  | 자율적 돌봄<br>참여주체<br>지원 강화                                            | 취약계층<br>지원 재원 확대                                                           | 먹거리 돌봄사업<br>주체의 일원화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내 먹거리 취약계층 선발 자율성 보장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커뮤니티 돌봄 역량 강화 사업</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 지원 금액 수준으로 취약계층 지원 상향</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 부처간 협력을 조율할 수 있는 일원화된 관리 주체</li> </ul> |

#### 1) 취약계층 선정·지원에서의 자율성 확대

- 먹거리 돌봄 사업은 영양플러스사업, 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 노인대상 공공급식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각각의 사업의 효율적 집행과 수행을 위해, 급식대상자의 엄격한 선정기준을 마련 적용
  - 그러나 결식아동급식지원에 있어서는 “⑦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을 포함하여, 취약 계층 선정 및 지원에 있어서의 일정정도 자율성을 보장하여, 실제 지원 현장에서의 필요를 포함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

〈표4-5〉 결식아동급식지원 지원 연령 및 지원대상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2조)
-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18세 미만인 학교 탈락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 지원대상

급식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하여야 함

-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 외국국적 아동의 경우에도 아래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지원
  - ※ 단,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제외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항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⑦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 불요
-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자료: 광명시 결식아동급식지원 [http://www.gm.go.kr/pt/partInfo/wf/wf04/wf04\\_1.jsp](http://www.gm.go.kr/pt/partInfo/wf/wf04/wf04_1.jsp)



- 결식아동지원 사업 외의 다른 먹거리 돌봄 사업에 있어서도, 현장에서  
의 추천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여, 돌봄 사각지대에서 먹거  
리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가능성 확보가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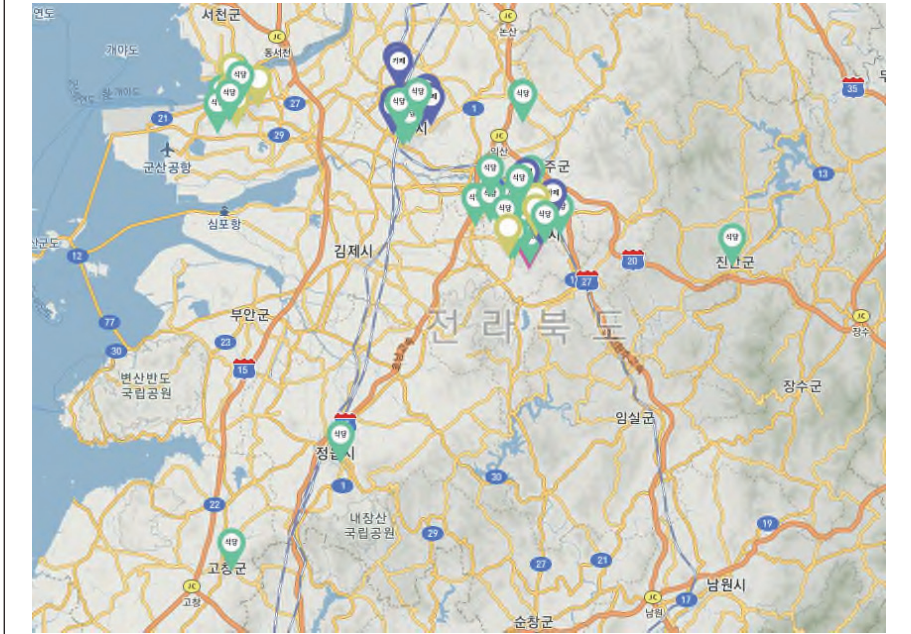
## 2) 자율적 먹거리 돌봄 참여주체 지원 강화

- 먹거리 돌봄을 위한 급식 활동을 하는 종교 혹은 시민 단체들이나 민간  
아동급식 사례로 보여지는 “선한 영향력 가게” 등이 먹거리 돌봄 거버  
넌스 구축에 있어서 중요한 한 축으로 작동 중임

〈표4-6〉 민간 아동급식 「선한 영향력 가게」

|                                                                                                                                                                                                                                                                                                                                                                                                                               |
|-------------------------------------------------------------------------------------------------------------------------------------------------------------------------------------------------------------------------------------------------------------------------------------------------------------------------------------------------------------------------------------------------------------------------------|
| <p><b>□ 선한 영향력 가게 정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급식 카드를 소지한 아동에게 무료로 음식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br/>자발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자 모인 가게</li> </ul>                                                                                                                                                                                                                                                                         |
| <p><b>□ 선한 영향력 가게 정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9.7.2. 서울 마포구 홍대 ‘진짜 파스타’(대표 : 오인태 氏)에서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확산</li> </ul>                                                                                                                                                                                                                                                                                     |
| <p><b>□ 선한 영향력 가게 안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털에서 ‘선한영향력가게.com’ 입력 후 검색</li> <li>• 「선한 영향력 가게」 누리집을 통해 선한 영향력 매장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17개 시·도의 「선한 영향력 가게」 정보* 제공</li> </ul> </li> <li>* 업체명, 전화번호, 주소, 영업시간, 제공대상, 제공품목</li> <li>※ 음식점, 안경원, 미용실, 사진촬영소, 카페 등 다양한 업종의 가게들이 동참하고 있음</li> <li>• 전국에서 2,721개, 전북에서 68개의 선한 영향력 가게가 등록 (21/ 8. 20일 검색)</li> </ul> |

### 〈전북지역 선한 영향력 가게 지도〉



자료: 보건복지부/ 2021. 2021년도 결식 아동 급식(지방이양) 업무 표준매뉴얼  
 선한영향력가게.com <https://xn--o39akkz01az4ip7f4xzwoa.com/goodshare/>

-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아동 무료급식 지원센터에 대한 공간이나 시설 지원과 같이 정부에서도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무료급식과 음식 돌봄에 참여하는 단체에 대한 시설 지원 등의 확대가 요청

### 3) 취약계층 지원 재원 확대

- 먹거리 돌봄 관련자와의 심층면접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된 바와 같이, 아동 급식의 경우 2021년 7월부터 1식당 지원 금액이 6,000원으로 상승한 반면, 노인에 대한 지원은 그 절반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음
  - 지원금액 상승에 따라 아동급식의 경우는 금액의 부족에 대해서보다는 식생활의 균형에 대한 논의와 방안 마련으로 사업의 수행의 방향이 전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그에 비해, 노인 급식의 경우는 한끼당 2,500원에서 3,000원 정도 수준으로 지원되고, 이러한 금액 역시 전액 식비로만 충원되는 방식이 아닌 급식소 운영

- 자금으로 지원 금액의 10% 정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실행되고 있음
- 이에 따라서, 균형잡힌 영양 지원이나 취약계층의 질병, 신체 상태 등에 따른 다양한 방식의 먹거리를 준비하는 것에 어려움이 존재
  - 아동 외의 다른 먹거리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 단가의 지속적 상승을 통한 먹거리 돌봄의 질적 전환 가능성 확대 요청

#### 4) 먹거리 돌봄사업 부서 일원화 및 연계 강화

- 먹거리 돌봄은 사업은 실제 그 지원 대상이 많고, 다양한 사업이 수행중에 있어, 각각의 부처가 그것들 담당하고 있는 실정임
-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의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고(김상호 외 2020), 공공급식의 식재료 공급과 품질관리 등의 업무에 있어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황윤재 외 2019, 황영모 2020에서 재인용)

〈표4-7〉 공공급식 관련 업무별 관계부처 현황

| 구분   | 식재료 생산·공급<br>품질관리 | 식재료·급식소<br>안전·위생 관리 | 식재료 이용<br>구매·계약 자원             | 급식 기관·시설<br>관리·감독                                                   |
|------|-------------------|---------------------|--------------------------------|---------------------------------------------------------------------|
| 관계부처 | 농림축산식품부<br>해양수산부  | 식품의약품<br>안전처        | 기획재정부(조달청)<br>행정안전부<br>중소벤처기업부 | 교육부<br>보건복지부<br>여성가족부<br>국방부<br>법무부<br>행정안전부(경찰청)<br>공공기관 소관부처<br>등 |

자료: 황윤재 외 2019, 황영모 2020에서 재인용

- 먹거리 돌봄 사업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각 부처간의 협력을 조율할 수 있는 일원화된 관리 주체가 요청

## 나. 전라북도 차원의 먹거리 돌봄 추진 방향 제언

- 먹거리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 연구과제에는 6가지 사업을 제언함
  - 공유냉장고 사업 확대
  - 통합돌봄 서비스에서의 먹거리 영역 확대
  - 로컬푸드와 함께하는 청년 공유부엌
  - 중장년 홀몸 남성 대상 건강한 식생활 교육 및 요리교실

〈표4-8〉 전라북도 차원의 먹거리 돌봄 추진방향

| 전라북도 차원의 먹거리 돌봄 추진방향                                                                      |                                                                                            |                                                                                                   |
|-------------------------------------------------------------------------------------------|--------------------------------------------------------------------------------------------|---------------------------------------------------------------------------------------------------|
| 공유 냉장고 사업 확대                                                                              | 통합 돌봄 서비스                                                                                  | 로컬푸드와 함께하는 공유부엌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음식 나눔문화 확산</li> <li>지역 돌봄 공동체 구축</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관·산·학 연계 통합돌봄</li> <li>맞춤형 식사와 영양관리 제공</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년 빈곤·결식 청년 문제 해결</li> <li>청년 대상 로컬푸드 연계 소셜 다이닝</li> </ul> |
| 건강한 식생활 교육 및 요리교실                                                                         | 명절과 생일 꾸러미                                                                                 | 로컬푸드 인식개선 사업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장년 남성 1인가구 대상</li> <li>사회적 단절 극복과 영양관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따뜻한 명절과 생일 기념</li> <li>로컬푸드로 꾸러미 구성 가능</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로컬푸드 홍보</li> <li>지역 공동체 구성의 연결물로의 로컬푸드</li> </ul>          |

### 1) 공유 냉장고 사업 확대

- 누구나 음식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음식물을 가져가서 먹을 수 있고, 나누고 싶은 음식물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공유냉장고 사업의 확대 요청
- 성공적인 공유 냉장소 사례로 수원시 공유 냉장고 프로젝트를 살펴볼 수 있음
  - 수원시민, 지역 기업,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으로 수원시 공유냉장고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32호점까지 운영 중

- 설치장소: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및 노인가구, 다문화 가구 밀집지역 주변 설치  
접근성, 관리 안정성, 낙인효과를 피할 수 있는 장소를 고려하여 냉  
장고를 설치
- 관리: 책임감 있는 시민자원 운영자를 선정하여 관리
- 지원체계: 민관 협력체계를 통한 지원 지역
- 정부조직: 동 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 시민단체: 도시농업네트워크, 식생활교육시민네트워크 등
- 민간 참여: 마을의 상점, 식당, 개인

○ 전라북도 안에서도 지역복지 특화사업으로 익산의 어양동 한소반 냉장고 사업을 살펴볼 수 있고, 음식의 나눔 문화의 확산을 통한 음식 돌봄 망 구축이 가능한 냉장고 사업의 확대가 요청

〈그림 4-1〉 익산 어양동 한소반 냉장고

- 사업목적: 나눔 냉장고 이용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 이용대상: 어양동 저소득층(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운영일: 매주 5일 운영(월~ 금/10:00~18:00)
- 사업내용: 식료품 지원 (김치, 라면, 반찬, 계란, 과일, 채소 등 기부물품)
- 이용인원: 1일 평균 7~10명(연인원 260여명)
- 물품후원: 반찬가게 및 음식점체, 봉사대, 기업체, 지역 주민 등
- 연간 총 후원 금액: 15개소/금20,210천원 상당(2021년 8월 3일 기준)

〈익산 어양동 행정복지센터 내 한소반 나눔 냉장고〉



## 2) 통합돌봄 서비스

-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 계획에서 먹거리 돌봄 사업은 주거지원에서 식사 배달 등 재가 서비스로 분류되어서 나타남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서는 노인들의 식습관, 신체상태, 현재 질환 등의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영양사가 설계한 개인맞춤형 식단과 영양관리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키친 ‘건강한 밥상, 온마을 사랑채’를 운영

〈표4-9〉 커뮤니티 키친 구성 절차

|                                                                                                                                                                                                                                                                                                                                    |
|------------------------------------------------------------------------------------------------------------------------------------------------------------------------------------------------------------------------------------------------------------------------------------------------------------------------------------|
| <p>식사 및 영양관리 사업 실현을 위한 체계적 준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9년 8월부터 ‘커뮤니티키친 운영’에 대한 논의를 시작</li> <li>• 내·외부전문가로 컨소시엄 구성</li> <li>• 범전마을센터 리모델링으로 장소 조성</li> <li>• 식사영양관리사업 기본계획수립</li> <li>• 연구용역 발주</li> <li>• 운영 보조사업자 선정</li> <li>• 운영에 참여하는 기관과 다자간 업무협약 체결</li> <li>• 식사·영양관리시범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예산확보 등</li> </ul> |
|------------------------------------------------------------------------------------------------------------------------------------------------------------------------------------------------------------------------------------------------------------------------------------------------------------------------------------|

자료: 부산일보 2021. 2. 2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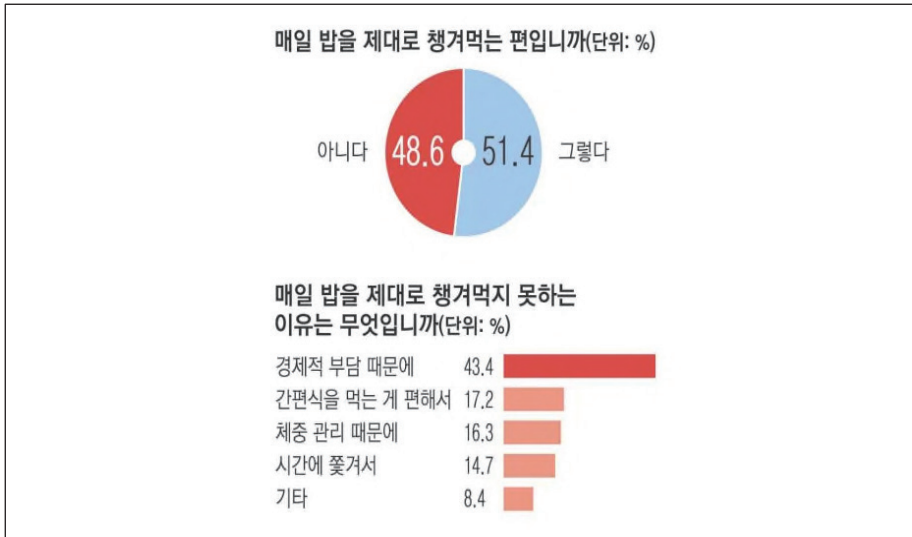
- ‘온마을 사랑채’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으로 부산진구에서 수행되며, 부산진구청·동의과학대학교·풀무원 푸드머스 등 민·관·학·산이 연계하여 재가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식사와 영양관리 서비스를 제공
- 어르신들의 저작능력의 저하와 시력 감퇴 등의 상황을 고려한 식품 개발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
- 실제 전북지역 취약계층 담당자 인터뷰에 있어서도 먹거리를 배달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닌, 실제 그들이 요리하고 식사하는 상황에 대한 관찰 등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개진됨
- 또한 어르신들의 경우만이 아닌, 결식아동급식지원 사업에서도 부식이나 식재료 배달이 이루어진 뒤에 냉장 보관과 같은 식품 관리 등의 지

원이 없어, 효과적인 먹거리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하는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 요청

### 3) 로컬푸드와 함께하는 청년 공유부엌

- 생애주기에 따른 먹거리 돌봄 지원제도에서 청년과 중장년층을 위한 제도가 미흡하여, 이들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 거의 없음
  - 경제적 능력과 활동이 왕성한 시기로, 먹거리 취약계층으로 구분되지 않지만, 실제 결식 청년 등의 청년 빈곤 문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임
  - 2021년 3월 20~29세 청년 60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현재 소득이 없다”는 답변이 30.5%에 달했고, 28.0%는 “월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라고 응답
  - 특히, 청년 10명 중 4명(37.1%)이 “생활비가 부족해 끼니를 챙기지 못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고, 이들 중 “1주일에 한두 번 이상 끼니를 못챙겼다”는 대답도 27.1%에 이르렀음(동아일보 2021. 4. 19b)
  -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부모와 떨어져서 학교를 다니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1인가구의 빈곤율은 19.8%로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8.6%)과 대비하여, 두배의 수준이었는데, 이러한 상황이 코로나19 사태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동아일보 2021. 4. 19b)
- 대학생 식비를 지원하는 기아대책의 ‘청년도시락’ 사업에 2021년 1학기 1645명이 지원하여, 239명이 지원했던 직전학기(2020년도 2학기) 대비, 8배 가량이 증가(경향신문 2021. 7. 20)
  - 청년도시락은 한 학기의 식사비용으로 35만원 지원하는데, 코로나19 이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지원했다면, 최근에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잃어 생활이 급격히 어려워진 청년 지원이 증가하는 추세

〈그림 4-2〉 청년의 식생활 상태 설문



자료: 경향신문 2021. 7. 20

- 1인가구 청년, 청년 빈곤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년 대상 소셜 다이닝 사업의 확산이 필요
  - 공유부엌은 세대가 만나는 장이 되기도 하고, 봉사활동으로 이웃의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이나 아동을 돕기도 하고, 공유부엌의 먹거리를 통해 농민과 소비자, 주민과 주민이 만나는 자리로 역할
- 서울 금천구의 “우리동네 커뮤니티센터”의 공유부엌의 경우, 건강한농부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하며, 센터 앞에서 열리는 장날, 직거래장터의 음식물을 이용하여, 장터에 오는 농민들과 지역주민이 만나는 장소로 작동 (한겨레21 2019. 3. 21)
- 전북의 청년 공유 주방에서도 빈곤 청년의 먹거리를 해결함과 동시에,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실천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지역의 농산물과 연계되어 실천된다면 그 의미가 깊을 것임



#### 4) 건강한 식생활 교육 및 요리교실

- 먹거리 취약계층의 경험에 관련된 심층면접과정 중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성별에 따라 먹거리 빈곤 경험이 크게 다르게 나타남
- 특히 먹거리 돌봄 사업에서도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 음식을 만드는 일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 1인가구 남성들의 경우, 먹거리 돌봄 사각지대로 식생활의 어려움을 경험
- 이러한 저소득 1인가구 남성들을 위한 생활요리교실 사업이 익산에서 지역복지 특화사업으로 시행 중임

〈표4-10〉 익산시 저소득 홀몸 남성 생활요리교실

- 사업명: '행복한 동행, 따뜻한 나눔 밥상' 생활요리교실
- 운영주체: 익산시 영등1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운영대상: 저소득층 중장년 홀몸 남성(15명)
- 운영기간: 2021년의 경우 4월-11월, 월 2회, 총 12회 진행
- 운영예산: 3,600천원/연
- 운영목표: 독거남성의 고독사 예방과 사회활동 촉진 및 집단상담·치료 등 통합사례 관리
- 운영현황: 2018년부터 4년째 지속되고 있는 사업으로,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중장년 홀몸 남성들의 식사 문제 해결 방안을 제안하고, 이들의 지역사회 참여 강화, 지지기반 마련을 위해 사업을 진행
- 기대효과: 외로움과 영양관리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중장년 홀몸 남성들의 문제를 요리교실을 통해 동시 해결 가능

자료: 익산시청 블로그 <https://blog.naver.com/hiksanin/222302299512>  
전북일보 2019. 2. 21

## 5) 명절 꾸러미 및 생일상 제공 사업

- 먹거리 취약계층에서 명절이나 생일 등의 기념일에 맞추어 명절꾸러미나, 생일밥상 등을 제공하는 사업의 호응 높은 편으로, 지역 복지특화사업으로 진행 중임
- 전라북도 관내에서도 익산 낭산면은 명절 맞이 식자재 꾸러미를 먹거리 취약계층에게 전달하는 사업을 진행

〈표4-11〉 익산의 명절꾸러미 전달 사업

- 운영사업: 사랑나눔 명정꾸러미
- 운영주체: 익산 낭산면 희망동행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꾸러미 구성: 8만 원 상당의 백미쌀(10kg), 소고기, 돼지고기, 떡국떡, 사과 등 11종, 8만원 상당으로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식자재로 구성
- 주민참여: 꾸러미 품목 중 떡국 떡에 필요한 쌀과 돼지고기, 계란은 지역 주민들의 기부로 마련
- 기대효과: 지역주민의 어려움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지역공동체 구성



자료: 익산열린신문 2021. 2. 8

- 명절 꾸러미 구성에 있어서 로컬 식자재와 지역의 식품 기업 제품을 활용하여 상생의 가능성 확대
- 생일밥상 차려주기 사업은 전라북도 남원 수지면에서 운영중임

〈표4-12〉 남원의 생일밥상 차려주기 사업

- 운영사업: '홀로어르신 생일밥상 차려주기'
- 운영주체: 남원 수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운영방식: 코로나19로 모임을 가지기 어려워, 생일도 혼자 보내는 지역의 17명의 어르신들에게 식사와 케익을 전달
- 기대효과: 관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복지 허브화 기반 마련

자료: 신아일보 2021. 2. 1

## 6) 로컬푸드 인식개선 사업

- 먹거리 돌봄 관련 인터뷰 조사에서 로컬푸드 이용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이 로컬푸드 사용하면 좋을 듯 하지만, 단가의 문제가 있어 사용하지 못한다는 응답을 많이 들을 수 있음
  - 그러나 실제로는 그 지역의 농산물을 도시락 준비나 부식을 마련함에 있어 사용하고 있어, 로컬푸드를 이용하면서도 로컬푸드에 대해 막연히 가격이 비쌀 것으로 생각하여 이용에 대해 심리적 부담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됨
  - 로컬푸드의 장점은 유통 과정을 생략하고, 화학비료 및 농약, 항생제 등의 사용을 감축하려는 노력 등을 통해 바른 먹거리와 지역먹거리의 중요성을 실천하는 계기기로 작동

〈표4-13〉 광의와 협의의 로컬푸드 개념

- 로컬푸드 개념: 로컬푸드는 장거리 수송 및 다단계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식품을 의미
- 로컬의 범위: 지역의 범위는 국가와 사람마다 다르게 규정하나, 행정구역인 시, 군이나 도의 경계 내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로컬푸드의 범위

**광의의 로컬푸드**

인접 시·군 및 로컬푸드 추진 타 지자체와의 제휴  
생산지 소비지 지차제 간 도·농 상생 등

**협의의 로컬푸드**

지역(시·군) 내 생산·소비체계

자료: 바로정보 홈페이지 <https://www.baroinfo.com/front/M000000298/content/view.do>

- 로컬푸드에 대해 비싸고 단가가 맞지 않은 농식품이라는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 공동체가 서로를 돌보는 커뮤니티 구성에 있어서의 중요한 연결매체로 로컬푸드가 자리잡을 수 있는 식생활 강의나 홍보 프로그램 요청

# 참고문헌



## 참고문헌

- 강순원. 2021. “코로나19와 먹거리돌봄”. 한살림제주모임회 코로나 19와 먹거리돌봄 토론회 『코로나 19시대, 먹거리돌봄 어떻게 할 것인가?』. 2021년 3월 16일
- 경향신문. 2021. 7. 20. “‘삼시세끼’도 사치인 현실, 냉동식품·라면이 주식 ‘하루 한끼’도 다반사”
- 관계부처 합동. 2018.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안): 1단계: 노인 커뮤니티케어 중심』
- 김광남·황민호. 2018. “먹거리 기반의 순환과 공생의 공동체, 옥천 이야기”. 『창작과 비평』 46(2)
- 김상효·이계임·임소영·허성윤·이옥직. 2019. 『농식품바우처 추진체계 구축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 김선희·주경희. 2012. “커뮤니티 기반 사회복지시설 전달체계 성공조건에 대한 탐색적 연구: 경기지역 푸드뱅크(Food Bank) 사업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정책』 Vol39, No2
- 김소연. 2020. “먹거리정의에 관한 탐색적 고찰: 이론적 쟁점과 실천적 함의”. 『농촌사회 30(2)』, 한국농촌사회학회
- 김홍주·이해진. 2012. “한국의 먹거리 보장 실태와 정책과제”. 『보건사회연구』 32(2)
- 김홍주·이현진. 2013. “푸드뱅크 사업과 먹거리 연대, 그 가능성과 한계”. 『한국사회』 제14집 1호
- 김홍주. 2014. “먹거리 대안체계와 공공급식 - 서울시 사례분석”. 『인문사회과학연구』 15(3)
- 농림축산식품부. 2020. 『가공식품소비자태도조사』
- 대한급식신문. 2020. 4. 28. “로컬푸드, 이젠 대학에도 적용해야”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6645>

- 동아일보. 2021. 4. 19a. “취업난 청년들 “아낄건 식비뿐”, 3000원 식당 찾고, 하루 두끼만“
- 동아일보. 2021. 4. 19b. “굶으며 버티는 청년...청년 37% ”돈 없어 끼니 거른 적 있어“
- 문은숙, 손창우, 문진영. 2017. 『밀라노먹거리협약'과 서울시 먹거리정책』, 서울연구원
- 박미현, 임은희, 임유진. 2020.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지방자치단체 조례분석”, 『사회과학연구 36(1)』,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배균기. 2020. 『전라북도 공공급식 현황분석과 광역지원조직 기본구상 연구』, 전북연구원
- 보건복지부. 2019. “영양플러스사업으로 임신부·영유아 영양상태 개선됐다” 2019년 5월 27일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 2021a. 『2021년도 결식 아동 급식(지방이양) 업무 표준매뉴얼』
- 보건복지부. 2021b. 『2021년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I』
- 보건복지부. 2021c. 『2021년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II』
- 보건복지부. 2021d. 『2021년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
-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1. 『2021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영양)』
- 부산일보. 2021. 2. 2. “부산진구, 민·관·학 연계 ‘노인 식생활돌봄 모델’ 개발 진행”
- 서동희·양승룡·이춘수·김건아·주시연. 2019. 『학교 과일 간식 지원 타당성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 석재은·김형용·허남재·장선아·한은영·김명숙. 2017. 『지역기반 노인통합돌봄서비스 지원체계 확산 연구』,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 신아일보. 2021. 2. 1. “남원 수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홀로어르신 생일밥상 차려주기’ 운영”
- 양정선. 2013. 『경기도 영양플러스 사업의 활성화 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 오민수·조해진. 2019. 『경기도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경기복지재단
- 윤병선·송원규. 2018. “푸드플랜 관점에서 본 서울시의 공공급식정책에 관한 분석”. 『산업경제연구』 31(3)



- 이계임·김상효·김부영. 2017. 『정부의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체계 개선방안』,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 이계임·김상효·임소영·허성운·한정훈. 2019. 『농식품바우처 지원 실증연구』, 농림 축산식품부.
- 이계임·황운재·이동소·김가영·이윤나·김기랑. 2012. 『식품지원제도 활성화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미라. 강영재, 손지현. 2017.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운영체계에 대한 사례연구”. 『사회과학논총 19』, 숭실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이석환, 권진. 2020. “푸드뱅크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영향요인 (경기지역 이용자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8)』. 한국콘텐츠학회
- 이수행. 박정지. 2019. “경기도 먹거리전략 추진방향과 과제”. 『이슈&진단 2019.6』, 경기연구원
- 이윤나·권종숙·조경자·이현아. 2014. 『영양플러스사업 운영 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 이행신·연미영·박승주·김도희·이지연·여운재·김이영. 2018. 『서울시 먹거리 보장 구현을 위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먹거리 실태 연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익산시청 블로그. “익산 영등1동, 저소득 홀몸 남성 생활요리교실  
<https://blog.naver.com/hiksanin/222302299512>
- 익산열린신문. 2021. 2. 8. “낭상면 희망동행, 설맞이 ‘사랑나눔 명절꾸러미’”
- 임영훈. 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 먹거리 패러다임의 변화와 대응”. 『Future Horizon』 2020. 8.
- 전라북도. 2019. 『전라북도사회조사』
- 전북일보. 2019. 2. 21. “중장년 독거남성 생활요리교실 운영”
- 조미영·황지윤. 2019. “베트남 결혼이민여성의 영양플러스 수혜 여부에 따른 영양 지식 및 식습관, 식사섭취상태 비교”.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48(6)
- 조효제. 2013. “먹거리 인권과 먹거리 주권의 시론적 고찰”. 『민주주의와 인권 13(2)』,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 중앙일보 2019. 10. 10 “푸드뱅크 노하우 몽골·베트남에 가르친다”
- 지주형. 2011.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 책세상
- 질병관리청. 각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 질병관리청. 각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
- 한겨레21. 2019. 3. 21 “부엌에서 맛보는 ‘공유의 맛’” 1254호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0. 『제2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2017~2021) 실행계획 분석보고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 『농업전망 2021: 코로나19이후 농업·농촌의 변화와 미래』
- 홍연아·정학균·추성민. 2021.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평가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황영모·길청순·배균기·송원규·이창한·이인우·유진현·이병훈·정호중·박세연·임아영·사공희년. 2020.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연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전북연구원. 지역농업네트워크 서울경기협동조합
- 황윤재·박성진·김상효·차원규. 2021. “코로나 시대, 먹거리 문제와 대응”. 『농업전망 2021: 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의 변화와 미래 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 Booth Sue, John Coveney. 2015. Food Democracy: From consumer to food citizen. New York: Springer
- Holt-Gimenez E, Shattuck A. 2011. "Food crises, food regimes and food movements: rumblings of reform or tides of transformation". Journal of Peasant Studies 38(1):109-144
- Marshall. Thomas Humphrey. 1950.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and other essays.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enting H, Schermer M, Rossi A. 2012. "Building food democracy: exploring civic food networks and newly emerging forms of food citizenship".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ology of Agriculture and Food 19(3):289-307
- Wittman H, Desmarais AA, Wiebe N (eds). 2010. Food sovereignty: reconnecting food, nature and community. Pambazuka, Oxford

정책연구 2021-11

지역사회 먹거리 돌봄 지원체계 구축방안

---

발 행 인 | 권 혁 남

발 행 일 | 2021년 9월 30일

발 행 처 | 전북연구원

550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

ISBN 978-89-6612-335-3 9333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연구원에 속합니다.





